

연구보고서 2025-48

#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곽윤경  
나원희·남윤재·김주리·변소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b>곽윤경</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b>나원희</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b>남윤재</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b>김주리</b>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b>변소연</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48

###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23-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48>

## 발|간|사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사회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해 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모습은 아직 낯설다.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성인기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 어쩌면 막연한 짐작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 청년 연구의 지평을 한 걸음 더 넓히고자 하는 노력의 소중한 결실이다.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용어가 아직 많은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이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하여 국내 출생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이 겪는 각기 다른 경험과 특성을 심층 분석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들이 마주하는 이행 과정의 고충과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대상자인 이주배경 청년과 그 가족들로부터 큰 지지와 협조를 받았다.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 덕분에 연구는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한 청년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인인 된 이후에 이런 뭔가 연구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기대와 지지는 연구진에게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

---

이 보고서가 탄생하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준 나원희 부연구위원, 남운재 연구원, 김주리 박사님, 변소연 연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뼈와 살이 되는 귀중한 조언을 주신 자문위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아낌없는 자문을 주신 동국대학교 윤태영 박사님과 귀중한 통찰과 현장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신 전문가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당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부디 이 연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널리 읽힘으로써, 이주배경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17</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제3절 연구 범위 .....	25
<b>제2장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 .....</b>	<b>37</b>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	39
제2절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제도의 포용성 및 사회진입 환경 진단 .....	4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5
<b>제3장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진로 이행과 노동시장 진입 .....</b>	<b>85</b>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 .....	87
제2절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	117
제3절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 분석: 상대적 위치 진단 .....	141
<b>제4장 이주배경 중후기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b>	<b>151</b>
제1절 조사 개요 .....	153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와 경험 .....	160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	163
제4절 청년정책 경험과 정책 요구 .....	176
제5절 소결 .....	186



<b>제5장 해외 사례: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b>	
<b>이행 지원 정책</b> .....	<b>195</b>
제1절 독일 사례 .....	197
제2절 영국 사례 .....	22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240
<b>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b> .....	<b>247</b>
제1절 결론 .....	249
제2절 정책제언 .....	252
<b>참고문헌</b> .....	<b>267</b>
<b>Abstract</b> .....	<b>281</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1〉 노동시장의 위계성과 다층적 배제 .....	7
〈요약표 2〉 이주배경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8
〈요약표 3〉 독일 및 영국의 이주배경 청년 교육·고용 프로그램 현황 .....	10
〈표 1-1〉 이주배경인구 유소년, 학령인구 및 청년인구, 2020-2040년 .....	20
〈표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24
〈표 1-3〉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정의 및 연령 기준 .....	26
〈표 1-4〉 이주배경 청년 유형 .....	28
〈표 1-5〉 이주배경 청년 연구 범위 .....	29
〈표 2-1〉 다문화 자녀 및 다문화배경 청년의 유형별 구성 .....	40
〈표 2-2〉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수 .....	41
〈표 2-3〉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① 노동시장 진입 촉진 .....	45
〈표 2-4〉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② 재직자 .....	47
〈표 2-5〉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③ 창업 활동 활성화 .....	48
〈표 2-6〉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	52
〈표 2-7〉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②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	54
〈표 2-8〉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③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 .....	56
〈표 2-9〉 제1차~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59
〈표 2-10〉 중도입국자의 입양 시점에 따른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경로 비교 .....	63
〈표 2-11〉 국적취득 유형별 병역 의무 .....	65
〈표 3-1〉 이주배경 청년 기본 특성 .....	89
〈표 3-2〉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 : 직업, 출신국가 .....	91
〈표 3-3〉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 :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	93
〈표 3-4〉 이주배경 청년 가구 경제상태 .....	94
〈표 3-5〉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 유형 .....	96
〈표 3-6〉 이주배경 청년 기본 특성에 따른 이행경로 .....	98
〈표 3-7〉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에 따른 이행경로 .....	101
〈표 3-8〉 이주배경 청년 가구 경제상태에 따른 이행경로 .....	105

〈표 3-9〉 지난 1주간 고용상태 .....	108
〈표 3-10〉 이주배경 청년의 월소득 분포 특성: 평균과 중위값 비교 .....	110
〈표 3-11〉 직업 분류(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11
〈표 3-12〉 청년정책 인지도 .....	114
〈표 3-13〉 청년정책 이용경험 .....	115
〈표 3-14〉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119
〈표 3-15〉 구직 시, 어려운 점 1순위 .....	132
〈표 3-16〉 직업 유형 .....	133
〈표 3-17〉 종사상 지위 .....	134
〈표 3-18〉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임금 .....	135
〈표 3-19〉 직장 내 어려움(1순위) .....	137
〈표 3-20〉 체류자격 현황 .....	138
〈표 3-21〉 향후 영주권/국적 취득 계획 .....	139
〈표 3-22〉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2
〈표 3-23〉 희망 교육/훈련 영역: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3
〈표 3-24〉 대학 비진학 사유: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4
〈표 3-25〉 구직 경험 유무(지난 4주):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5
〈표 3-26〉 종사상 지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6
〈표 3-27〉 월평균 임금: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	146
〈표 3-28〉 비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 지원 .....	148
〈표 4-1〉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56
〈표 4-2〉 면담 조사 내용 .....	159
〈표 4-3〉 노동시장의 위계성과 다층적 배제 .....	187
〈표 4-4〉 이주배경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	191
〈표 5-1〉 BQN 단계별 과업 요구사항 .....	200
〈표 5-2〉 KAUSA의 활동 내용 .....	214
〈표 5-3〉 직업통합학급(BIK)의 구체적인 내용 .....	218



〈표 5-4〉 쇼츠텍 주요 지원 내용 .....	223
〈표 5-5〉 REP 프로그램 주요 내용 .....	228
〈표 5-6〉 부처별 역할 및 지원 내용 .....	229
〈표 5-7〉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 내용 .....	232
〈표 5-8〉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주요 서비스 .....	236
〈표 5-9〉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청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237
〈표 5-10〉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취업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238
〈표 5-11〉 독일 및 영국의 이주배경 청년 교육·고용 프로그램 현황 .....	243

# 그림 목차

---

[그림 1-1] 체류 외국인 현황, 1998-2024	19
[그림 2-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43
[그림 2-2]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방향	61
[그림 2-3] 교육 수준: 저학력자 및 고학력자 비율	67
[그림 2-4] 외국태생 부모를 둔 학생의 학교 내 집중도	68
[그림 2-5] 고급 수준의 정착국 언어 구사 능력 보유 이주민 비율	69
[그림 2-6]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71
[그림 2-7] 2011-2021년 고용률의 변화 추이	72
[그림 2-8] 자국민 대비 외국 출생자의 학력 수준에 따른 고용률	73
[그림 2-9] 교육 이수 장소별(place of education), 고학력 외국 태생 인구의 고용률	74
[그림 2-10] 실업률	76
[그림 2-11] 2011-2021년 실업률의 변화 추이	77
[그림 2-12] 저숙련 및 고숙련 직업 종사 비율	78
[그림 2-13] 과잉학력(Overqualification) 비율	79
[그림 3-1]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99
[그림 3-2] 이주배경 청년의 어머니 출신국가와 모국어에 따른 이행경로	103
[그림 3-3] 지난 일주일간 일한 개수	107
[그림 3-4] 출생지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교육 필요성	121
[그림 3-5]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교육 필요성	122
[그림 3-6] 진로 정보 필요성	123
[그림 3-7] 출생지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124
[그림 3-8]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125
[그림 3-9]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126
[그림 3-10] 출생지에 따른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필요성	127
[그림 3-11] 고용 상태에 따른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필요성	128
[그림 3-12] 출생지에 따른 직업교육 경험과 필요성	129
[그림 3-13] 고용 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경험과 필요성	130



[그림 3-14]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임금 .....	136
[그림 3-15] 체류자격 현황 .....	138
[그림 3-16] 이주배경 초기 청년(19-24세)의 월평균 임금 .....	147
[그림 3-17]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청년정책별 인지도 - 이용 경험 매트릭스 .....	149
[그림 4-1] 10년간 이주배경 학생 구성별 증가 .....	155
[그림 5-1] JMD 지역 센터 분포 .....	206
[그림 5-2]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지원 대상(고객) .....	232
[그림 5-3]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난민 지원 절차 .....	233
[그림 6-1]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 모색 .....	266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 이주배경 인구의 급증과 인구 구조적 변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양적 확대
  - 체류 외국인 수는 팬데믹 이후 반등하여 2024년 역대 최고치 (약 260만 명, 인구의 5.2%) 경신
  - 외국인 주민 자녀 수(2023년 약 29만 명)는 11년 전 대비 72%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
- 이주배경 청년 인구의 비중 확대
  - 이주배경 학령인구(6~21세)는 2040년 47만 명에 달할 전망
  - 특히 이주배경 청년(19~34세)은 동 기간 101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 ○ 기존 연구의 한계 및 통계적 공백

- 성인기 이행 연구 부족
  - 기존 연구가 아동·청소년기의 학업과 적응에 편중되어, 노동 시장 진입 및 자립 과정에 대한 데이터 공백 심각.
- 통계의 사각지대
  - 25세 이상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공식 통계 부재
  - 한국 국적이 없는 중도입국 청년 등의 현황 파악 어려움

## 2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 ○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이중 사각지대

-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전용 사업 부재
- 만 24세 기점으로 다문화 지원은 종료되나, 일반 청년 정책으로의 연계 체계가 미비하여 지원 단절 발생.

### □ 연구 목적

#### ○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

- 첫째, 국내외 이주배경 청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검토
-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
-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유형과 과정을 분석
-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연구 범위

#### ○ 이주배경 청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한정함.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내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입국한 자녀가 모두 포함된 만 19~34세 청년이 연구 대상임.

### □ 연구 방법

####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심층 면담, 해외 사례(독일, 영국)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이주민 포럼 등

## 2. 주요 연구 내용

- 청년정책의 이주배경 청년 포용성과 사각지대 진단(제2장)
  - 현행 청년정책에서는 체류자격에 따른 제도적 비대칭
  - 청년정책 - ① 일자리 분야: 취업 지원의 폐쇄성과 창업 지원의 개방성
    - 취업지원: 국적 및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에게만 제한적 허용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 국적 청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결혼이주민(F-6, 한국 국적의 자녀 출산 및 결혼 생활 유지자), 영주권자(F-5), 거주(F-2)자로 한정
    - 창업 지원: 국적 및 체류자격에 대해 비교적 포용적·개방적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이들에게 폭넓은 참여를 허용
      -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은 이주 기준은 상관없다고 명시하여, 국적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청년정책 - ② 교육 분야: 고등교육의 배제와 평생교육의 포용
    - 고등교육: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대한민국 국적자’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년의 대학 교육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됨.

#### 4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유학생(D-2)을 포함하여 행정 요건 충족 시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며, 학위 교육보다 제도적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 ○ 선행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 대비 언어 역량 부족, 정체성 혼란, 체류자격 제약, 정보 접근성 불균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

##### □ 초기 이주배경 청년(19-24세)의 진로 이행과 노동시장 진입(제3장)

#####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를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네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이행 유형에 있어 지역적·학교별 분화가 특징적임.
  - 대부분 권역(서울, 충청, 전라 등)은 '순수진학' 비중이 높으나, 경인권은 진학·근로 병행(38.7%)이 순수진학(36.2%)보다 높게 나타남
  - 특목고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비진학·비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
- 소득 격차 및 직업 분포의 편중성이 나타남
  - '순수근로' 집단의 소득이 가장 높고, '진학·근로' 집단이 가장 낮음
  - 진로 경로 유형에 따라 성별 소득 격차 양상이 상이함. 예를 들어, 진학·근로 유형은 남성(100만 원)과 여성(60만 원) 간 격차 큰 반면, 순수근로 유형의 남성(170만 원)과 여성(180

만 원) 간 차이는 미미함

- 직업 분포는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과반수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함. 예를 들어, 서비스 종사자(37.2%) 및 판매 종사자(19.7%) 집중
  - 이주배경 청년이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개인적으로 검색 및 탐색이 필요한 정책(창업, 주거 등)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짐
-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소득 등)을 출생지(국내 출생 vs. 중도입국) 및 고용 상태별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집단 내 이질성을 보임.
- 지원 수요와 실제 경험 간의 구조적 불일치
    - 높은 진입 의지 대비 저조한 정책 접근성. 특히,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실제 경험 간 현격한 격차
    -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서 경험률은 1/3 미만이나, 필요성 인식은 과반수를 상회함. 노동시장 진입 의지는 높으나 지원체계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매우 낮음
  - 고용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욕구
    - 실업 상태는 당장의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지원(직업 정보, 기술 훈련) 요구가 강함.
    - 취업 상태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정보 수요 존재함.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체계 필요성 시사
  - 출생지 배경에 따른 진입 장벽의 이질성과 고용 양극화

## 6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 국내 출생자는 임금 수준 등 일자리의 질을 주된 장벽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도 입국자는 언어, 비자, 거주지 등 구조적 장벽이 결합된 복합적 어려움 직면함
- 국내 출생자는 상용직·사무직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용 상태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중도 입국자는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및 단순 노무·판매직 편중 현상 뚜렷함. 직업적 편중이 소득 구조의 양극화(저소득층 vs 중위소득층 분리)로 직결됨

### ○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청년삶실태조사 활용)

- 이주배경 청년은 한국 사회 내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상대적 위치(예: 높은 특성화고 진학률, 낮은 평균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소득 양극화 등)와 출발점에서의 상대적 불리함

## □ 중·후기 이주배경 청년(25-34세)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제4장)

### ○ 조사 개요 및 대상자 특성

- 국내 출생(6명)과 중도입국(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함.
  - 총 14명 중, 1명은 영주권자, 1명 D-10 구직 비자 보유자, 그 외 한국 국적(이중국적자 2명)

### ○ 노동시장 이행 유형 및 요인

〈요약표 1〉 노동시장의 위계성과 다층적 배제

노동시장 유형	특징
주류 동화형 노동시장 (Mainstream- Assimilative Labour Market)	- 업무가 이주배경과 무관 - 한국인(비이주배경) 동료와 동일 기준으로 경쟁/적응 요구 - 개인의 객관적 역량(기술, 자격, 학력 등)이 경력에 중요하게 작용 -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직장 규범 및 네트워크 학습 요구
주류 통합형 노동시장 (Mainstream- Integrative Labour Market)	- 한국인 중심의 주류 조직문화에 적응 및 상호작용 필요 - 이주배경이 업무상 '자산' 또는 '강점'으로 활용되나, 역설적으로 특정 직무로 고착되거나 타 부서 이동/경력 확장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직장 규범 및 네트워크 학습 요구
주류 분절형 노동시장 (Mainstream- Segmented Labour Market)	- (출신국) 동족 네트워크가 정보 교류 및 구(이)직에 핵심 역할 - 직장 동료/고객 다수가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저숙련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등)임 - 직장 내 한국어 사용 빈도가 낮아, 한국어 능력 유지 및 향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한국인 혹은 한국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고립/배제 경험 가능성이 있음 - (한국 국적 보유 시) 동일 직장 내 이주노동자 동료 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와 대우를 경험

주: 참여자가 여러 직장을 경험한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만약 특정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그 여러 직장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해서 분류함.

출처: 저자 작성

- 이행 과정의 촉진 및 저해 요인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가족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요인) 분석

○ 이주배경 청년의 경험과 정책 수요

-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 인지도에 비해 이용 정도는 매우 낮음.
- 가장 많이 이용한 정책은 국가장학금이었고, 다음으로 청년 자산형성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임.
- 이주배경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정책은 〈요약표 2〉와 같음.

## 8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 〈요약표 2〉 이주배경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li> <li>• 청년정책 멘토링: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li> </ul>
일자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기본 지식 함양</li> <li>• 한국과 출신국을 잇는 ‘인적 가교’: 새로운 해외 취업 지원</li> <li>• 특정 분야/직군의 전문 인재 양성</li> <li>• 공공부문 채용 기회 확대</li> <li>• 고용 환경 개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li> <li>• 직업훈련 후 창업/취업 연계 강화</li> </ul>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및 학문 중심의 고급 한국어 교육 강화</li> <li>• 다문화가정 특별 전형이 아닌 “중도입국 특별전형” 마련</li> </ul>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과정 진학 준비를 위한 생계지원</li> <li>•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li> </ul>

출처: 저자 작성

- 다만, 대학교 입시전형과 노동시장 채용 쿼터제 등은 국내 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 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

### □ 이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이행지원 정책(제5장)

- 독일 사례: 다층적 거버넌스와 포괄적 지원 체계
  -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
    - 연방정부는 교육연구부(BMBF)와 청소년가족부(BMFSFJ)가 직업자격네트워크(BQN),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 직업훈련 및 이주조정센터(KAUSA) 등을 추진
    - 주정부(바이에른)는 직업통합학급(VIC/BIK) 등을 통해 제도권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
    - 민간단체인 쇼츠텍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리더십 함양에 집중하여 서비스 공백을 보완.
  - 청년 연령대가 포괄적임.

-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는 12세부터 2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직업통합학급(BIK)의 주된 대상은 16~21세이나, 예외적으로 25세까지 허용.
- 직업훈련 및 이주조정센터(KAUSA)와 쇼츠텍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과 청년, 초기 경력자를 폭넓게 포괄하여 지원.

○ 영국 사례: 중앙정부의 한시적 사업과 민간단체의 개별적 지원

- 운영 구조

- 중앙정부인 내무부(Home Office)가 주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REP)이 핵심 정책 사례이지만, 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사업.
- 민간단체가 실질적인 통합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활동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독일과 영국의 프로그램 구성 비교 및 시사점

- 독일과 영국의 교육·고용 프로그램 비교 현황(〈요약표 3〉)
- 독일은 제도화된 시스템(다층 거버넌스)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제공하는 반면, 영국은 중앙정부의 제한적 개입과 민간 의존도가 높아 다소 파편적이고 사후적인 지원 구조.

10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요약표 3〉 독일 및 영국의 이주배경 청년 교육·고용 프로그램 현황

구분		연방/중앙 정부			주정부	민간단체			
		독일			영국	독일	영국		
		BQN	JMD	KAU SA	REP	BIK	쇼츠텍	BB	UC
언어 및 학습 지원	언어 교육		○			○		○	○
	학업 지원 및 자격 취득	○				○		○	
취업 준비 및 경력 설계	취업 준비 (이력서·면접 등)	○			○	○		○	○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 연계 (인턴십 포함)	○	○	○	○	○		○	○
	취업 상담 및 매칭	○	○	○	○			○	○
사회· 심리 지원	정서 및 심리 지원		○						○
	사회통합 프로그램		○				○		
멘토링 및 네트 워크	멘토링	○		○			○	○	○
	네트워크 형성						○		○
행정· 정보 지원	법적·행정적 지원		○	○	○				○
	온라인 상담		○						

주: 영국의 프로그램은 이탤릭체로 표기함

출처: 저자 작성

### 3. 결론 및 정책제언

#### 가. 보편적 청년정책의 포용성 강화: 동등한 출발선 보장

- 진로 및 진학 지원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확대
  - 공교육에서는 교육청 주관 공식 안내 강화 및 기존 온라인 자원(커리어넷 등)의 심화 상담 연계 고도화.
  - 제도권 교육 밖에서는 검정고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아웃리치) 점점 확대 및 여가부 사업 연계로 통합 지원망 구축.
-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화 연수 과정을 제도화하여 현장의 지도 역량을 강화
- 단순한 일자리 소개를 넘어, 구직 준비 단계부터 직장 적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
  - 구직 준비 단계에서는 실전 구직 기술(이력서·면접) 지도, 멘토링 및 네트워킹(시니어 전문가·가족 참여형) 제도화하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직장 내 차별 대응, 조직문화 적응, 그리고 심리·정서적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창구를 마련.
  - 이러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핵심 플랫폼으로 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
  - 상담 인력의 문화적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통역 서비스

를 적극 연계하여 언어·문화적 장벽 없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적극 지원
  - 다문화 선배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또래 연결 프로그램(영국 UC 모델)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저소득 청년의 상위 과정 진학 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 생계 지원
-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참여 제도화: 이주배경 청년 쿼터제 도입
  -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부터 이들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하되, 이주민 밀집 지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위원회로 제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상향식 정책 기반 마련.

#### 나. 이주배경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

- 일자리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원
  - 이주배경 청년은 25세 이후에도 일자리 수요가 많은 특수성을 고려
- 청년정책 수혜 대상의 체류자격 확대 및 조정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료를 지원

- 중도입국 청년을 위한 별도의 대학 특별전형 신설을 검토
  - 중도입국 청년(언어·교육과정 차이)을 위해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맞춤형 전형 신설.
  - 국내 출생자와의 기계적 경쟁이 아닌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기회균등 조치로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 추진.
  
- 대학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
  - 권역별 거점 대학 및 공공기관에 리포트 작성법, 학술 용어 등 실질적인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 유학생 중심의 대학 내 지원 시설을 국내 체류 이주배경 청년에게 개방하고,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직무 중심 한국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sup>1)</sup>에 (가칭)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신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상담 단계에서부터 해당 과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구직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 언어를 습득하도록 지원.
  
- 직업훈련 시스템의 고도화
  - 독일의 정규 교육과정인 직업통합학급(BIK)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주배경 구직자를 위한 직업 교육과

---

1) 현재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만이 운영되고 있음.

정)을 2년제 학위(초대졸) 과정으로 전면 확대·개편.

□ 노동시장 내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해소

- (제도적 기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채용 단계의 차별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승진·평가 과정의 보이지 않는 방벽 해소를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 및 감독 강화.
- (사회적 인식) 고용주·동료의 막연한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이주배경 인력의 다문화 역량이 조직 성과에 기여함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병행.

□ 이주배경 청년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토양을 마련

- 개인적 차원: 정체성 탐색 및 자존감 강화를 위한 또래 교류·문화 활동 지원
- 사회적 차원: 다양성 포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추진.

---

2) 해당 과정은 이주배경 구직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3~6개월간의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임. 자격요건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임.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 ①. 결혼이민자
  - ②. ①의 국내출생 자녀
  - ③. ①의 중도입국 자녀
-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F-4)
- 마. 영주(F-5) 자격 소지자 (한국폴리텍대학, 2025)

□ 이주배경 청년의 인재 육성 및 활용

-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직군(예: 국제 교류, 무역, 법정 통번역 등)의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공공부문 채용 시 특별전형 도입 검토.
- 인적 가교 역할을 위한 해외 취업을 지원하되, 현지 채용 시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설계 추진.

□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강화

-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 청년 등에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청년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통합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개편**

□ 컨트롤타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부처 간 장벽 허물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교육-훈련-고용을 잇는 통합적 정책 조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독일식 협업 모델 도입: 중앙정부(재원·정책), 지자체(지역 맞춤), 민간·기업(현장·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파편화 방지

□ 맞춤형 단계별 전담 지원체계 개편

- 현행 체계 효율화: 단기적으로는 가족센터를 허브로 활용해 청년을 발굴·초기 상담하고, 전문기관(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으로 즉시 연계망 가동.

- 전문 지원 인프라 확충: 독일 JMD를 벤치마킹하여 진로·취업 및 심리를 통합 지원하는 광역 단위 이주배경 청년 전문센터 설립 검토.
  
-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고도화
  - 다문화 인재 Pool을 청년 DB(국무조정실)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 매칭 플랫폼 기능 강화.
  
  - 오프라인 전달체계와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역량 발굴부터 기업 매칭까지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지원 실현

주요 용어: 이주배경 청년, 학교-노동시장 이행, 중도입국 청년, 청년정책, 사회통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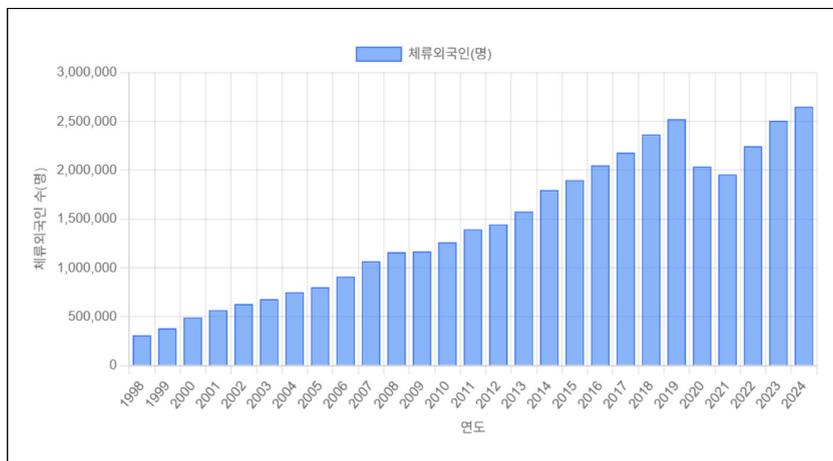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그림 1-1). 이후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약 260만 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림 1-1] 체류 외국인 현황, 1998-2024



출처: “체류외국인현황,”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4, 법무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청년기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289,886명으로(행정안전부, 2024), 11년 전보다 72%나 급증하였다(행정안전부, 2012).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다. 2024년 초중등 다문화가족 출신 학생은 193,814명으로 전년 대비 12,636명, 즉 7%나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를 차지하였다(교육부, 2024).

이러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주배경 학령인구(6~21세)가 2040년 47만 명에 달하고, 특히, 이주배경 청년(19~34세)은 같은 기간 10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22). 이는 이주배경 인구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표 1-1〉 이주배경인구 유소년, 학령인구 및 청년인구, 2020-2040년

(단위: 만 명)

	'20	'21	'22	'23	'24	'25	'30	'35	'40
이주배경인구	218	213	213	219	226	233	264	293	323
유소년인구(0-14)	32	33	34	34	34	34	35	36	41
학령인구 (6-21)	계	30	30	32	34	37	39	44	47
	초(6-11)	13	14	14	14	14	15	14	16
	중(12-14)	5	6	6	7	7	7	8	7
	고(15-17)	3	3	4	5	6	6	8	7
	대(18-21)	9	8	8	8	10	11	15	17
청년인구(19-34)	78	71	67	67	68	69	80	91	101

출처: "2021년 장애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통계청, 2022.04.14., p.16.

위의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이주배경 청소년이 점차 청년기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실증 연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기의 성장, 학업 성취, 학교 적응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특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국내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성인기의 삶에 대한 논의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식 통계에서 25세 이상 이주배경 청년이 조사되지 않는다는 점(김영아 외, 2024; 이해응·김미정, 2024),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중도입국 청년의 통계적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법적으로, 이주배경 청년 중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중의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한국 국적 청년으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업, 주거 등 포괄적인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중 지원체계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다른 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심각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

첫째, 「청년기본법」의 형식적 포함과 실질적 지원의 부재다. 「청년기본법」은 이주배경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관계 부처 합동, 2020), 이는 형식적인 범주화에 머물러 있다(이해응·김미정, 2024). 보호종료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이주배경 청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시적인 정책 사업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만 24세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이중의 정책 사각지대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적용이 만 24세로 종료되면서, 만 25세 이후 이들은 다문화 정책의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보편적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앞서 지적한 실질적 지원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느 정책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 배제 상황에 놓인다(이해응·김미정, 2024). 특히 아동·청소년기 공적 지원이 부족했던 2008년 이전 출생자들에게 이러한 정책 단절은 자립 기반 마련에 더욱 치명적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청년기본법」 두 정책 사이의 연계 장치가 부족하다. 이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들은 두 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두 정책을 실질적으로 잇는 전환·연계 장치가 없어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실제로 두 정책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지, 한쪽 정책에만 의존하는지, 혹은 두 정책 사이의 '틈새'에서 배제되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법률상 자격과 정책 현실의 괴리는 이주배경 청년, 특히 국적이 없는 청년들을 생애 전환기에 제도적으로 고립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내외 이주배경 청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며,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유형과 과정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위를 설정한다. 제2장 선행연구검토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및 제도와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초기 청년기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이행 경로와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중후기 이주배경 청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경로를 살펴보고, 이행 과정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탐색한다. 제5장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실증 분석,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이주배경 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선행연구,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정책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및 노동시장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제3장)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실제적인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제4장)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생생한 해외 사례 분석을 위해 국외 출장을 병행하였다.

## 24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표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장 구성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li> <li>• 연구 내용 및 방법</li> <li>• 연구 범위</li> </ul>	
제2장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li> <li>• 이주배경 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li> <li>• 선행연구</li> </ul>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제3장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진로 이행과 노동시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li> <li>•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li> <li>•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 분석: 상대적 위치 진단</li> </ul>	실증 분석
제4장 이주배경 중후기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개요</li> <li>•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와 경험</li> <li>• 노동시장 이행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li> <li>• 청년정책 경험과 정책 요구</li> </ul>	심층 면담
제5장 해외 사례: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사례</li> <li>• 영국 사례</li> </ul>	문헌조사, 정책 분석, 국외 출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론</li> <li>• 정책 제언</li> </ul>	

▲  
 …  
 전문가  
 자문회의  
 &  
 이주만  
 포럼  
 …  
 ▼

출처: 필자 작성.

### 제3절 연구 범위

현재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류유선, 2023; 송영호·최영미, 2021; 이해웅·김미정, 2024).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 현장 및 학계에서 비교적 폭넓게 다루어져 온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이주배경 청년'의 범위와 초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1. 기존 정의의 비판적 검토

##### 가. 정책 현장에서의 정의: 이주배경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의는 정부 부처마다 상이하며, 각 부처가 적용하는 관계 법령과 대상의 범위, 연령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표 1-3〉).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이들을 만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정의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9~24세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 기준은 만 24세 이하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 외국인·귀화자의 자녀 등,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부모 또는 본인의 이주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포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개념과 기준의 불일치가 부처 간 정책의 연계와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표 1-3〉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정의 및 연령 기준

(단위: 명)

정부 부처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여성가족부 (現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 자녀</li> <li>•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li> </ul>	만 24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li> <li>•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li> </ul>	만 9~24세
교육부	교육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li> <li>• 중도입국자녀</li> </ul>	만 24세 이하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가정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li> </ul>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li> </ul>	만 6세~24세 이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li> </ul>	만 18세 미만
행정안전부	국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또는 귀화·인지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li> <li>• 다만,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제외</li> </ul>	18세 이하 미성년자

출처: “지원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5, <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policy.do>;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 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 2024.10. 24.,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113228#non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113228#none)을 수정 보완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기에 국내로 이주한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가 본국 자녀를 데려온 경우, 재외동포나 전문인력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입국한 경우를 포함한다(김현숙, 2021). 이러한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sup>1)</sup>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한다. 즉 이 재단에서는 부모 또는 본인의 이주 경험이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 나. 학계에서의 정의: 이주배경 청년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령 기준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듯하다.

우선, 이주배경 청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송영호·김재훈(202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주배경 청년을 부모 또는 본인이 국제 이주 경험을 가진 모든 자녀 세대로 폭넓게 규정한다. 다른 연구들은 특정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해응·김미정(2024, p.9)은 이주배경 청년을 이민 1.5세대 및 2세대를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류유선(2023)은 다문화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한정하였다. 양계민 외(2023)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이탈배경 가정 자녀 등 매우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하면, 광의적 관점에서 이주배경 청년은 <표 1-4>에서 제시하듯 다문화가족 출신 2세, 탈북 청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을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

포함하며, 협의적 관점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 출신 이거나 혹은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표 1-4〉 이주배경 청년 유형

유형		개념
국제 결혼 가정	국내출생 출생	한국인(귀화 포함)과 결혼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이들은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임.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주민이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거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탈북 청소년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유학생, 자녀, 난민, 유학생, 재외동포, 미등록 등)

출처: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김진희 외, 2020, 한국교육개발원, p.27을 수정 보완

연령 기준 역시 연구에 따라 다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만 19~34세로, 다수의 연구(김진희 외, 2020; 송영호·최영미, 2021; 박미선 외, 2024)에서 이 범위를 채택하였다. 일부 연구는 만 25~34세 청년에 집중하였다. 백경민·연규진(2022)과 장현진 외(2022) 등은 이 연령대가 「다문화가족지원법」(만 24세 이하)의 지원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는 포함되는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고, 이들을 핵심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 2. 본 연구의 개념 정의 및 분석 대상의 범주화

### 가. 이주배경 청년의 정의와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을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내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입국한 자녀가 모두 포함된 만 19~34세 청년이 연구 대상이다(〈표 1-5〉).

〈표 1-5〉 이주배경 청년 연구 범위

이주배경 청년	
연구 대상	연구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국내출생 자녀</li> <li>▪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li> <li>▪ 외국인가정 자녀</li> <li>▪ 북한이탈주민 자녀 / 청년 당사자</li> <li>▪ 외국인 유학생</li> <li>▪ 결혼이주민</li> <li>▪ 영주권자</li> <li>▪ 재외동포</li> <li>▪ 기타</li> </ul>

출처: 저자 작성

### 나. 연구의 초점

이 연구에서 이주배경 청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청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사회통합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2장 1절에서 상술했겠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이주배경이나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근거로 교육 기회 및 노동시장 진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나 차별에 직면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세대 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 여건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둘째, 이 연구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출생하여, 성장기에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초기 이주배경 청년 집단에 주목한다.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1991~2006년생 청년들은 영유아기부터 공적 제도와의 체계적인 접촉 경험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필요한 인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을 수 있다(박미선 외, 2024). 물론, 이들이 청소년기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을 일부 경험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2008년 이전, 즉 공적 지원이 부재한 시기에 가족을 형성하고 정착했다는 점이다. 부모 세대 스스로가 사적 자원에 의존해 정착 과정을 거쳤기에, 정작 자녀의 사회 적응과 진로 설계에 필수적인 정보나 사회적 관계망을 충분히 축적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 집단을 분석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통계 조사는 극히 부족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갖춘 표집을 실시하는 조사로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자는 종단적 추적이 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이들 조사는 정부 공식 통계로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문제는 두 조사 모두 24세 이하 청년 초기까지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이 만 24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 중반기 및 후반기로 진입하는 이주배경 인구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이주배경

청년 전체를 조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넷째, 청년정책과 다문화정책 간 연계 부재로 인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이주배경 초기 청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24세 이하)인 동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보편적 청년 지원(취업, 주거 등) 대상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은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주로 적응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청년기본법」은 보편적 이행 과제를 다룬다. 이러한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해, 이주배경 청년들은 두 정책 영역의 경계에 놓여 어느 쪽의 혜택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복합적인 필요(예: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들이 두 정책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지, 혹은 정책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정책 영역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을 국내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 두 집단은 체류자격, 초기 언어 능력, 공교육 진입 시점 등 초기 조건이 상이하며, 이는 결국 서로 다른 경험과 기회구조를 형성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내부의 경험적 차이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두 집단의 차이를 충분히 조망하지 않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북한 이탈주민·외국인가정 자녀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이주배경 청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집단 내의 핵심적인 이질성(즉,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간의 격

차)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과 다르다”는 일차원적 비교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부에서도 출생 유형(국내출생/중도입국)에 따라 상이한 경로와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연구의 독창성과 정책적 기여도를 강조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의 범위와 정의에 따른 한계이다. 본 연구의 국내 분석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이주배경 청년들(예: 난민 배경 청년, 전문인력 동반 자녀, 비동반 이주 청소년 등)의 특수한 경험과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또한, 5장에서 다룬 해외 사례는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이주배경 청년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국내에 적용할 때는 이러한 대상 범위의 차이점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양적연구 분석이 20대 초반(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이주배경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향후 진로와 삶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관찰된 어려움이나 취약성이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년 중기 및 후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가치관 변화, 추가적인 교육·훈련 경험, 노동시장 및 가족 관계 등 다양한 내부·외부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이주배경 청년 전체의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들의 미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에 활용된 2차 자료가 갖는 내재적 한계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다문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1기 코호트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의 아버지(국제결혼의 경우)나 외국인 아버지의 양육 태도,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은 가족 체계 전반을 분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1기 코호트의 모(母) 집단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 국적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국내 전체 다문화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한편, 함께 활용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횡단면 조사 성격을 가진 자료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패널 데이터와 달리 본 연구의 설계상 자녀 데이터만 분리하여 분석했으므로, 부모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구조적·환경적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조사 시점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응답자들의 고용 상태,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등이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편화하는데 있어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면접조사와 인터넷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동

일한 질문지라 하더라도 조사 방식에 따라 응답 태도가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한국어 문해력이 낮은 대상은 조사에서 배제되거나 응답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 자료의 균질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김용석, 2010).

넷째, 질적연구 고유의 일반화 한계와 표집 방법에 따른 특수성이다. 4장은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해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표집 과정에서 국내 출생 다문화 청년보다 중도입국 청년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게 구성하였다. 이는 중도입국 청년이 겪는 이행 과정의 난이도와 경험의 밀도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국내 출생 자녀를 포함한 전체 이주배경 청년 집단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과 시사점은 향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신뢰도 높은 대규모 실태조사 등을 통한 양적연구로 재검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즉 기업 및 고용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 개인의 경험과 특성, 즉 인력의 공급 측면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다문화 인재에 대한 인식, 채용 관행, 조직 문화 수용성, 그리고 차별적 기제 작동 여부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못했으며, 이는 이주배경 청년이 직면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제2장

###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제2절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제도의 포용성 및  
사회진입 환경 진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제 2 장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

###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현재 이주배경 청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이해응·김미정, 2024).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여 통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9~24세), 교육부(만 24세 이하), 행정안전부(0~18세) 등 부처와 관련 법마다 집계하는 대상의 연령 기준이 모두 달라 통합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활용 가능한 기초 통계자료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들을 온전히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를 활용하더라도 대부분 청년 초기인 24세까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청년 중기(25세 이상)의 실태는 통계적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예를 들어 김진희 외(2020)의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전체 다문화 자녀(264,733명) 중 0~18세(237,506명)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9세 이상 이주배경 청년의 전체 규모를 약 27,000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실제 분석에 활용된 청년 표본은 약 16,861명으로, 이는 전체 다문화 자녀의 약 6.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김진희 외, 2020, p.80). 이들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58.2%,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가 41.8%를 차지했다. 다만, 이러한 구성비는 향후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 10대인

40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다수의 국내 출생 자녀들이 성인기로 진입함에 따라, 미래에는 전체 청년 중 이주배경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다문화 자녀 및 다문화배경 청년의 유형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다문화 자녀(전체 연령)		다문화배경 청년(만 19-34세)	
	가중치 적용 추정값	표본 실제값	가중치 적용 추정값	표본 실제값
국내 출생	249,275 (94.2)	18,734 (93.5)	9,808 (58.2)	1,404 (69.7)
중도 입국	15,458 (5.8)	1,296 (6.5)	7,053 (41.8)	611 (30.3)
계	264,733 (100.0)	20,030 (100.0)	16,861 (100.0)	2,015 (100.0)

출처: 김진희 외(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p. 81: "2018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https://www.mogef.go.kr/mp/pd/mp\\_pcd\\_s001d.do?bbsSn=704820&mid=plc503](https://www.mogef.go.kr/mp/pd/mp_pcd_s001d.do?bbsSn=704820&mid=plc503)

김영아 외(2024, p.25)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청년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약 16만 명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는 35,000명으로 전체 이주배경 청년의 약 22%를 차지하였다(〈표 2-2〉 참조). 다만, 이 방법은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예: 가구주,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표 2-2〉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수

(단위: 천 명, %)

	2010년		2015년		2020년	
	천 명	비중	천 명	비중	천 명	비중
0~34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년	250		363		420	
19~34세 이주배경 청년	116	1.000	145	1.000	157	1.000
1) 가구주	7	0.059	15	0.105	22	0.139
2) 가구주의 배우자	64	0.547	77	0.529	78	0.500
3) 자녀	17	0.145	27	0.185	35	0.223
4) 자녀의 배우자	18	0.158	14	0.096	9	0.055
5) 기타	11	0.090	12	0.086	13	0.083

출처: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김영아 외, 2024, 한국노동연구원, p.25.

## 제2절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제도의 포용성 및 사회진입 환경 진단

### 1. 청년정책의 이주배경 청년 포용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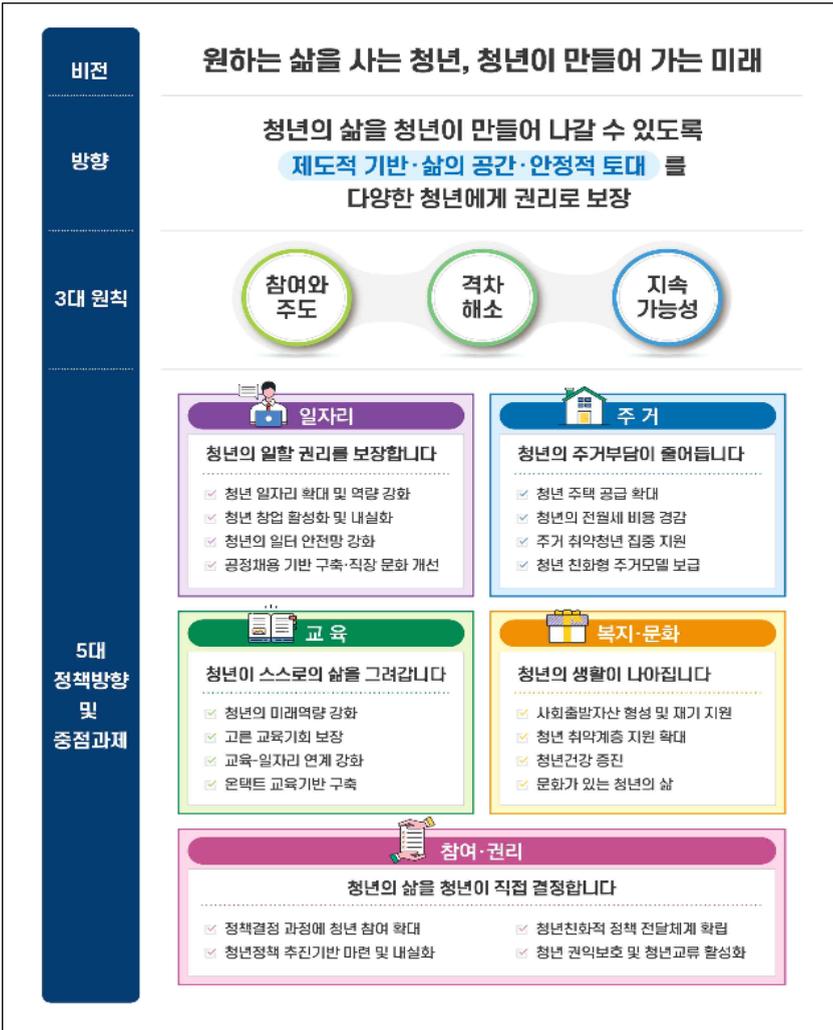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며, 국가 차원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서 20개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은 아래 [그림 2-1]과 같다. 첫째, 일자리 분야의 경우, 단기 실업 대책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의 진로 탐색과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p.5). 또한, 공정 채용법 하에 청년 친화적이고 공정한 고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과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대책과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 분야의 경우,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인재 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접근성 강화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의 경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인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군장병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도 허용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을 청년 취약계층의 한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언급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 사업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2021년)과 수정 계획(2023년)을 통해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한국어·진로 교육, 상담, 멘토링 지원 등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의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신설·추진되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이주배경 청년은 정책적 분류상으로는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우

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주: 새 정부 출범과 코로나 19 상황 개선 등 청년정책 여건 변화를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됨  
 출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관계부처 합동, 2023.03.29., p.6, <https://www.youthcenter.go.kr/youthCommittee/ythCmtPlan01/ythCmtPlan01Main>

다음으로 청년정책 5대 분야 중 본 연구의 핵심 영역인 일자리와 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의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주배경 청년이 포함되는지, 혹은 배제되는지 그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가.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분야의 관련 사업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과정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국가 기술자 응시료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해당되나,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가 지원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F-2, F-5)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은 국적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표 2-3〉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①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비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지자체 및 청년센터 등 지자체 선정기관들)	구직 단념 청년들(NEET)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구직 의욕을 높여 노동 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최근 6개월간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는 제외	NEET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대한상공 회의소, 고용센터 및 다수의 위탁기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 경력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참여 불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 운영기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의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II)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애로 청년(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근로조건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나,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구직 청년
청년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 력공단)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1인당 연간 3회 한도 응시료의 50%를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	국적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음	

46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비고
국민내일 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직업훈련 기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해당, 거주, 영주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 결혼이주민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불필요	직업 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민간 위탁기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 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	취업 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출입국관 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F-2, F-5)에 한해 참여 가능하나, 그 외 외국인인 불가	취업 지원 서비스

출처: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2025; “청년도전 지원 홈페이지,” 고용24, 2025.10.01.,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sysId=SC00000189&sysId=SI0000031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대한상공회의소, 2025, pp. 7-26.; “청년정책 시행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n.d., [https://opcl.s3.amazonaws.com/data/policy/files/20250421\\_2025%EB%85%84%EB%8F%84%20%EC%B2%AD%EB%85%84%20%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20%EC%9D%91%EC%8B%9C%EB%A3%8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5%88%EB%82%B4.pdf](https://opcl.s3.amazonaws.com/data/policy/files/20250421_2025%EB%85%84%EB%8F%84%20%EC%B2%AD%EB%85%84%20%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20%EC%9D%91%EC%8B%9C%EB%A3%8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5%88%EB%82%B4.pdf);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n.d.a.,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Id=SI00000351&sysId=SC00000004>; “민원신청-빠른인터벳상담,” 고용노동부, n.d.a.,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181120275030961#:~:text=%EC%99%B8%EA%B5%AD%EC%9D%B8%EC%9D%98%20%EA%B2%BD%EC%9A%B0%20%EC%B2%B4%EB%A5%98%EC%9E%90%EA%B2%A9.%EB%B0%9C%EA%B8%89%EB%8C%80%EC%83%81%EC%9D%B4%20%EB%90%98%EC%A7%80%20%EC%95%8A%EC%8A%B5%EB%8B%88%EB%8B%A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n.d.b.,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Id=SI00000316&sysId=SC00000371>; “서비스 안내-FAQ,” 고용노동부, n.d.b.,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sessionId=5B0F6FA230B532E8D140804C26848061?faq\\_idx=1000001100](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sessionId=5B0F6FA230B532E8D140804C26848061?faq_idx=100000110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청년 재직자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두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특정 체류자격인 거주 비자(F-2), 영주 비자(F-5), 결혼이민자(F-6)도 대상에 포함된다.

〈표 2-4〉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② 재직자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청년 내일채움 공제 <sup>2)</sup>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대상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sup>3)</sup>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및 고용센터)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합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할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대상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부, 2024a,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부, 2024b, <https://www.sbcplan.or.kr/faq.do?mCode=F050000000&catCd=2&ddctGdsCd=PMF&searchType=all&page=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부, 2024c,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고용노동부, 2022, p.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 불가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22년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 불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해당 사업의 공고에 따르면,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시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이를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SIREN 24를 통한 실명 등록 절차를 밟은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번호<sup>4)</sup>가 있는 외국인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창업 사관학교는 체류 외국인 혹은 이주배경 청년이 해당 대상인지에 대해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표 2-5〉 청년정책 - 일자리 분야 ③ 창업 활동 활성화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만 2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공고일 기준(2024. 1. 12.)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이하 청년예비창업자로 ① 국세청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등) 이력과 ② 법원 설립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 (취입) 이력이없고, ③ 법인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외국인 가능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 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 실명정보가 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청년창업 사관학교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예비	내용 없음

4)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음. 유학생(D-2, D-4)는 90일 이상 체류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음. 결혼이민자(F-6 비자 등)는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음.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 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임.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내외)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제공,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	창업자 <sup>5)</sup> 와 창업자 <sup>6)</sup> 인 기업의 대표자	

출처: “2024년도\_생애최초\_청년창업\_지원사업\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 중소기업부, 2024. 1. 12,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lIdx=1047343&parentSeq=104734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중소기업부, 2025. 1. 23, <https://www.mss.go.kr/synap/skin/doc.html?fn=309c68908b0ae266e7f6e26f49ea1feb&rs=/synapFile/202508>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제도적 포함 범위를 살펴본 결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 국적 청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결혼이주민(F-6, 한국 국적의 자녀 출산 및 결혼 생활 유지자), 영주권자(F-5), 거주(F-2)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일부 체류자격은 일정한 행정적 요건(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하기도 하였다.

한편, 창업 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은 개방적인 특징을 보였다.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이들

5) 예비 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중간평가(1차) 결과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

6) 창업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월 일 기준

에게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은 이주 기준은 상관없다고 명시하여, 국적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 구조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재직자 관련 사업에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와 같은 특정 체류자격에는 적용되지만, 그 외 체류자격 보유자는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창업 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을 보인다.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체류자격 외에, F-1, F-4, H-2 기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들은 위의 사업 자체 접근 및 이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단일 집단 내에서도 정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갈리면서, 그룹 내 정책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교육 분야

교육 분야의 관련 사업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고른 교육 기회 보장 관련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평생교육 바우처, 고졸후학습자장학금이 있다. 이들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만 예외적으로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재외동포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

여 계상된다(한국장학재단, 2025, p.2.). 2025년도 지원 기준은 기존의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었고,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장학재단, 2025, p.2.). 한편 다문화가정 및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소득·재산을 증빙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

다음으로 학자금대출은<sup>7)</sup>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된다. 학자금대출제도의 종류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그밖에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 해당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sup>8)</sup>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2025년 2학기 기준 연 1.7%(변동금리)로 동일하나, 신청 연령에 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만 55세 이하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 학기 성적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밖에 신용 요건, 학자금 지원 구간

7)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소개하기”를 인용하여 작성함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info&utm\\_source=chatgpt.com](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info&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9.13.)

8)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를 인용하여 작성함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검색일: 2025.9.13.)

등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학자금대출제도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한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즉, 재외국민 신분이라도 국내 대학에 수학하며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표 2-6〉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국가장학금 지원 (교육부/한 국장학재단)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li> <li>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약 소득·재산 환산액이 18,293천원 이하인 대학생)<sup>1)</sup></li> <li>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sup>2)</sup></li> </ul>	대한민국 국적을 소재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 (단, 국외소득 재산을 신고한 재외국민도 가능)
학자금 대출 (교육부/한 국장학 재단)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2025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li> <li>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li> </ul>	대한민국 국적을 소재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  (단,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부/국 가평생교육 진흥원)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일반성인 등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지역별 평생교육 지원자, 디지털 평생교육이 필요한 성인(30세 이상) 대상</li> <l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등</li> </ul>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외국 국적자는 제외.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 망사다리 II 유형) (교육부/한 국장학재단)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전문학사 취득자 중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입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li> <li>•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li> <li>• (재직요건) 선별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li> <li>• (재직기간 산정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li> </ul>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외국 국적자는 제외.

주: 1) 지원기준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2025년부터 9구간 이하로 확대함. 소득기준(1유형의 경우), 기초·차상위는 전액지원, 1~3구간 570만원 지원, 4~6구간 420만원 지원, 7~8구간 350만원 지원, 9구간은 100만원 지원(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입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② 외국인 전형 입학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학생 또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④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5.4.2., pp.19~20.;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한국장학재단, 2025, p. 3.;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내부자료)" 교육부, 2025, p. 646., p. 656., p. 233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일반)",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ct/UOPKOC TS11?siamIzbzId=201808641310304A0002&acntYr=2025&ixYn=N&url=UOPKOC TS02&menuId=290>)(검색일: 2025. 9.30.);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n.d.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검색일: 2025.9.30.)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과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 지침상 국적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만을 신청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국적 요건에 대해 별도 명시는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D-2)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고졸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하여 거주권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표 2-7〉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②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 (교육부/대한 상공회의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직무역량의 향상을 통한 취업 희망자의 사회 진출 연계	-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중, 취업희망 재학생 대상	국적 요건 별도 명시 없음
고졸 청년 취업 지원	고교(직업계고 등) 졸업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 금을 신청한 자 - (학력요건) 직업계고 3학 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 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재직요건) 중소·중견 기 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 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 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부)	취업 희망 일반고 학생(3학년, 5,180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지	- 일반계 고등학교(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 학교, 학력인정시설도 포 함)에 재학 중이지만, 취 업을 원하는 3학년 재학 생 대상 - 17~19세, 중학교 졸업 이	국적 요건 별도 명시 없음

사업 (담당부처/ 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원(월 최대 20만원)	상의 학력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훈련과정 신설(25년~)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교육부/한국 산업기술진흥 원)	<p>청년의 진학 및 초기 취업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초기 확보하여 인력난 해소(4학 학사학위 과정을 3년에 이수하고 초기 졸업, 전문대학은 6개월 단축 운영 가능) *일반대 (24)14교, 258억원→(25)14교, 258억원 / 전문대: (24)8교, 96억원→(25)8교, 96억원</p> <p>-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으로 대학에 소속한 재학생 - 외국인 유학생 참여하는 글로벌 모델 신설 (25년부터 본격 추진) - (입학대상) 고등학교 졸업(신입학) 또는 전문학사 졸업(편입학) 자격을 갖추고, '유학생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른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C),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수수료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등 - (지원내용)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유학생-협약기업 등과의 시간제 취업 매칭 등 지원</p>	국적 요건 별도 명시 없음.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글로벌 모델에 참여한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D-2)을 대상으로 함)

주: 대학마다 자격대상 및 제출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며, 본 표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모집요강에 기초하여 작성함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5.04.02., p.21.;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e나라도움 홈페이지, 2025.09.28., <https://www.bojo.go.kr/bojo.do>;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학교용),”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2025, pp.3~6.;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5.09.28.,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8\\_01&naviParam=JH.03.04.00](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8_01&naviParam=JH.03.04.00);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2025.09.28.,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61&systCId=SC00000050>; “2024년 초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2024.01., 교육부, p.1, p.6, p.8, p.9.;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2025.7.9.,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61&systCId=SC00000050>

청년정책 중 교육 분야의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 사업으로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온국민 평생배움터가 대표적이다. 두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형식상 대한민국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번호로 개통된 휴대폰을 보유한 유학생(D-2),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사업 중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지침에서 특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 구체적으로,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의 참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과정은 도제학교·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속련 기술 융합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일하게 외국 국적자(F-2, F-4, F-5, F-6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표 2-8〉 청년정책 - 교육 분야 ③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

사업 (담당부처/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온라인 평생 교육  K-MOOC <sup>1)</sup> (교육부/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K-MOOC 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학점인정·재직자 연수 등 이수증 활용 활성화	대한민국 국민	이메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만 가능하면, 이용 가능 (외국인등록번호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가능) 즉, 외국국적자 중 유학생(D-2),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사업 (담당부처/수행기관)	목적	지원 대상	체류외국인/ 이주배경 청년 포함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온국민 평생배움터 <sup>2)</sup> (교육부/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청년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부·지자체 등의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 포털”	대한민국 국민	상동	
직장인 청년 경력 개발 및 후학습 지원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원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고교·대학 등 208개 기관)	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학생 등을 기업이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OJT) 제공(일학습병행운영지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sup>3)</sup> )	-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외국 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고숙련 일학습 병행 (P-THECH) 과정	도제학교·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에게 신기술 중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과정 지원	-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제학교 졸업자(우선선발) • 직업계고 졸업자(우선선발) • 일학습병행 L3 이하 이수자(고졸) •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고교위탁)과정 이수(예정)자(고졸)	외국 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주: 1)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

2) 한국어 문법, 한국어 발음, 한국어 프리젠테이션, 한국어 관용 표현 등 다양한 강좌가 개설됨.

3)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중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이 가능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로,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을 모집하여 매년 30명 이상 일학습병행 훈련운영함. E-1~E-7체류자격으로 연계 가능한 훈련직종, 훈련대상이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른 D-2 및 D-10의 체류자격 활동 범위 내 운영하고, 그 외 사항은 일학습병행 운영 요건을 적용하여 운영함.

출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5.04.02., p.22. “일학습병행 지원사업(개인),” 고용24, 2025.09.23.;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68&systClId=SC00000207>;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09.09., pp.1-2., <https://www.hrdkorea.or.kr/3/1/1?k=54066>

청년정책의 교육 부문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제도적 포함 범위를 살펴본 결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평생교육바우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등 고등교육 단계의 학자금 지원사업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 국적 청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조건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류 외국인이나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일반고 특화훈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글로벌 모델), 중소기업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P-TECH, K-MOOC 및 온국민 평생배움터와 같은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영역은 국적 요건을 두지 않거나, 체류자격을 기반으로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자와 유학생(D-2)은 일정한 행정적 요건(외국인등록, 건강보험 자격,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 사업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 국적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구조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와 직업훈련·평생교육 제도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국적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체류 외국인 및 이주배경 청년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영역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학자금 지원 등 고등교육 단계의 재정지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초기 정착에서 후기 청소년 자립 지원으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 중인 가운데, <표 2-9>은 역대 기본계획의 목표 변화는 정책의 초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초기 1차 계획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에 집중했다면, 2차에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로, 3차에서는 차별 없는 사회 구현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최근 4차 계획에 이르러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최우선 목표로 제시되며,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문화가족 1세대에서 2세대로 명확히 이동했음을 볼 수 있다(이해응·김미정, 2024).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은 다문화가족 2세대가 성장하여 청년기에 진입하는 생애주기의 변화에 발맞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표 2-9> 제1차~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제1차 (2010~2012)	제2차 (2013~2017)	제3차 (2018~2022)	제4차 (2023~2027)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li> <li>•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사회 구현</li> <li>•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li> <li>•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li> </ul>
정책과제 (대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li> <li>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li> <li>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li> <li>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li> <li>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li> <li>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li> <li>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li> <li>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li> <li>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li> </ol>

	제1차 (2010~2012)	제2차 (2013~2017)	제3차 (2018~2022)	제4차 (2023~2027)
	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 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	역량 강화 4.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수용성 제고 4.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출처: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여성가족부, 2010;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여성가족부, 201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여성가족부, 201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여성가족부, 2023 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다문화 후기 청소년(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계획의 4대 과제 중 이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과제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며, 특히 그 하위 과제인 다문화 청소년 진로 개발 지원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는 통계청 협업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수요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폴리텍대학 혹은 내일이룸학교 등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청년내일채움공제(5인 이상 50인미만 제조업·건설업중소기업에 신규 취업시 2년 후 만기금(1,200만원) 지급)로 경제적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등 제도를 통해 다문화 청소

년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하고 있다(관계기관 합동, 2023).

[그림 2-2]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2023.4. p.ii.

### 3. 사회 진입의 특수한 변수: 중도입국 청년 남성의 체류자격과 병역 이행<sup>9)</sup>

#### 가. 중도입국자의 국적취득 경로

중도입국 청년은 부모의 재혼, 초청, 입양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경로는 입국 후 입양 여부, 입양 시점(성년/미성년),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 전에는 F-1-52(방문동거) 비자를, 입양 후에는 F-2-2(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2-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영주권(F-5-3)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고,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으며 품행 및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성년자(만 19세 이상)로 입양되면, 입양 사실만으로 별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유학(D-2)이나 취업(E-7) 등 본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품행 및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국적법, 2008).

9)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사무국장(변호사) 서면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함.

〈표 2-10〉 중도입국자의 입양 시점에 따른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경로 비교

구분	입양 당시 미성년인 경우	입양 당시 성년(만19세 이상)인 경우
초기 체류자격	방문동거(F-1-52) → 거주(F-2-2)	유학(D-2), 특정활동(E-7) 등 목적에 맞는 비자 별도 취득
장기 체류 경로	거주(F-2-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F-5) 신청 가능	입양만으로 장기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국적취득 경로	특별귀화	간이귀화

출처: 「국적법」 법률 제8892호, 2008을 재구성

## 나. 국적취득 유형에 따른 병역의무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병역준비역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 청년 남성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와 그 경로에 따라 병역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다른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단,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만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

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는 병역법상 당연히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미성년자(19세 미만)가 한국인 부모의 인지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다. 이는 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 사이에 있는 혼인 외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의 국적 취득자는 일반적인 귀화와 달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허용되지 않으며, 1년 내에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이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도입국 청년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단일 국적자가 되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귀화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이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시근로역<sup>10)</sup>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가 면제되며, 이외에도 대체역으로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귀화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신청하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병역법」 제68조 제8항). 결론적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도입국 청년은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지만, 본인의 신청을 통해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시에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다.

〈표 2-11〉 국적취득 유형별 병역 의무

국적 취득 유형	병역 의무	비고
출생의 의한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발생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지에 의한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발생	복수국적 유지 불가
귀화에 의한 복수국적자	현역 복무 의무 면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원 입영 가능

출처: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제68조 제8항을 재구성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 이주민의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이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은 학력, 직업 숙련도, 경제활동 상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OECD의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은 이러한 핵심 지표들을 국가별로 비

10)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지만,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소집되는 병역 의무자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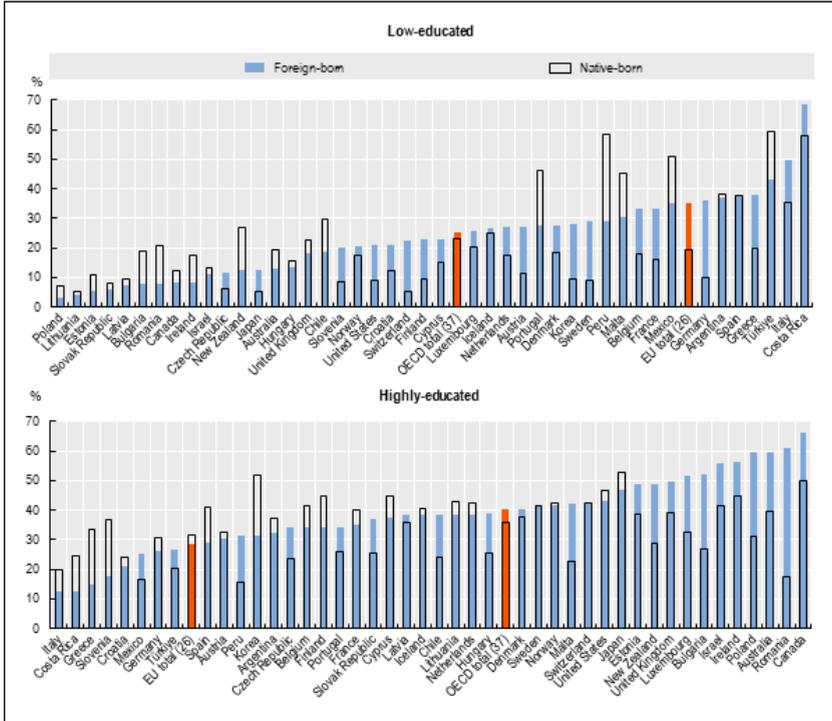
교·제시하여, 각국 사회에서 이주민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본래 이 연구의 핵심 대상은 이주배경 청년(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태생인 15~34세)이지만, 여기서는 15~64세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인용하는 OECD 자료가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를 표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가. 학력 수준

학력 수준이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더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OECD, 2023). 2020년 기준, 한국의 저학력(중졸 이하) 이주민 비중은 28.2%로 OECD 평균(25.0%)과 유사했으나, 자국민(9.6%)에 비해서는 약 3배 높았다. 반면, 고학력(고졸 이상) 비중은 31.4%로, OECD 평균(40.3%)보다 낮았으며 자국민(51.9%)과는 약 2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이주민과 자국민 간 학력 격차가 매우 뚜렷함을 보여준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교육 수준: 저학력자 및 고학력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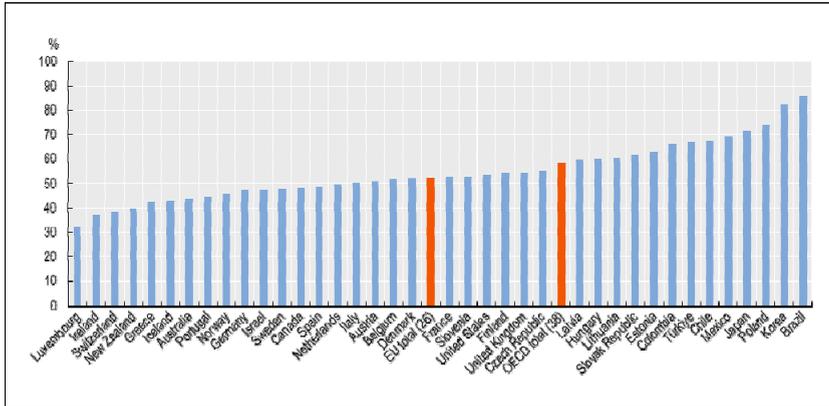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1에서 재  
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0 (2021 for Ireland, 2019  
for United Kingdom & Bulgaria),” EU, 2020;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0,” U.S. Census Bureau, 2020;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Canada, Israel and New Zealand: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Japan: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1,” 통  
계청,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  
(CASEN)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20; “Colombia: Gran  
Encuesta Integrada de Hogares (GEIH) 2021,” DANE, 2021; “Costa Rica: Encuesta  
Continua de Empleo (ECE) 2021,” INEC, 2021;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20,” INEGI, 2020; “Argentina: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EPH) 2021,” INDEC, 2021; “Peru: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ENAH) 2021,” INEI, 2021.

## 나. 외국 태생(foreign-born) 부모를 둔 학생의 학교 분리 및 집중

이주배경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쏠리는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 현상은 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지표로 다뤄진다(OECD, 2023). 2018년 기준, 한국은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집중도가 82.5%에 달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5% 학교에, 실제로 이주배경 학생들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집중도는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학생들의 학교 쏠림 현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OECD, 2023)([그림 2-4] 참조).

[그림 2-4] 외국태생 부모를 둔 학생의 학교 내 집중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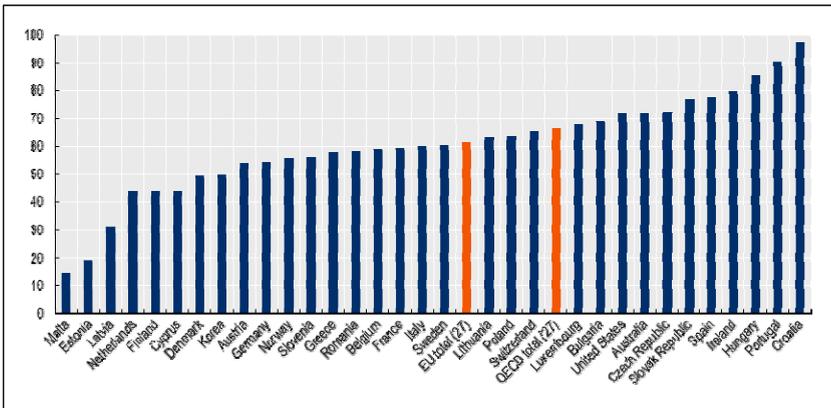
주: '학교 집중도' 지표는 다른 지표(15~64세 대상)와 달리 15세 학생만을 대상으로 측정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177.에서 재  
인용: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OECD,  
2018.

## 다. 언어 능력

정착국 언어 능력은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OECD, 2023). 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주민 한국어 능력이 고급 이상인 비율은 49.8%에 그쳐, OECD 평균인 66.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고급 수준의 정착국 언어 구사 능력 보유 이주민 비율

(단위: %)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여기서 '언어 숙련도'란, 정착국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스스로 '고급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주민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5에서 재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module 2021," EU, 2021; "Australia: Census 202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United State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2019," U.S. Census Bureau, 2019;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부가조사 2020," 통계청, 2020.

## 라. 노동시장 참여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주민 고용률<sup>11)</sup>은 67%로 자국민(67%)과 OECD 평균(68%)과 표면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sup>12)</sup> 역시 71%로 자국민(70%)과 OECD 평균(75%)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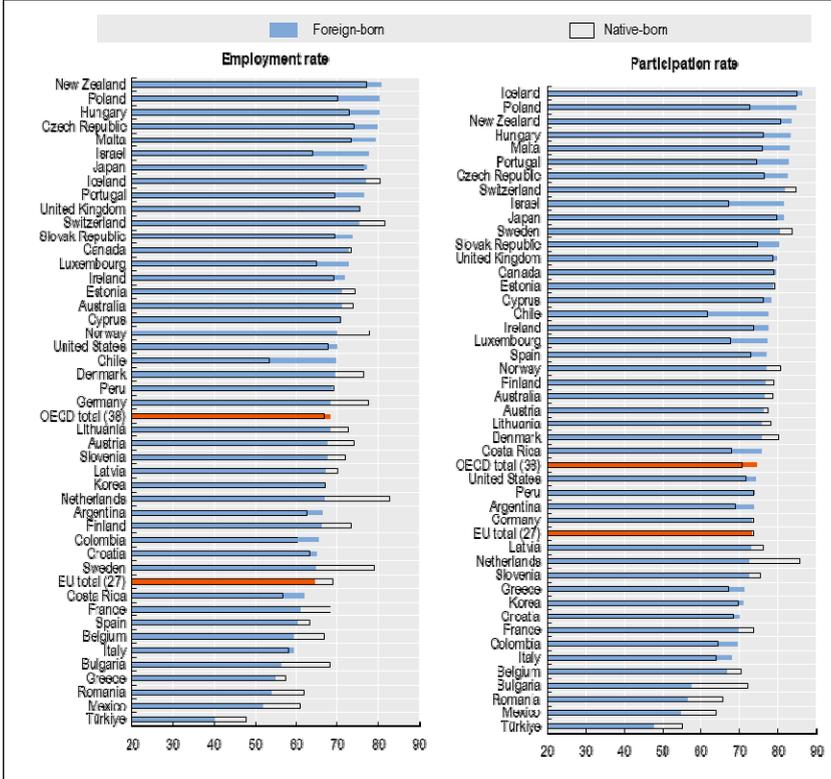
다만, 이러한 지표 해석에는 한국 이주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주민 고용은 주로 중소기업, 건설업 등 경기 충격에 취약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정규직·단기계약 형태로 종사하여 경기 변동 시 고용조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OECD 평균은 장기정착형 이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국은 고용허가제와 같은 단기체류 중심이라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공적 안전망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고용 지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주민이 체감하는 고용 안정성은 매우 취약할 수 있다.

11) 고용률은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12)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율.

[그림 2-6]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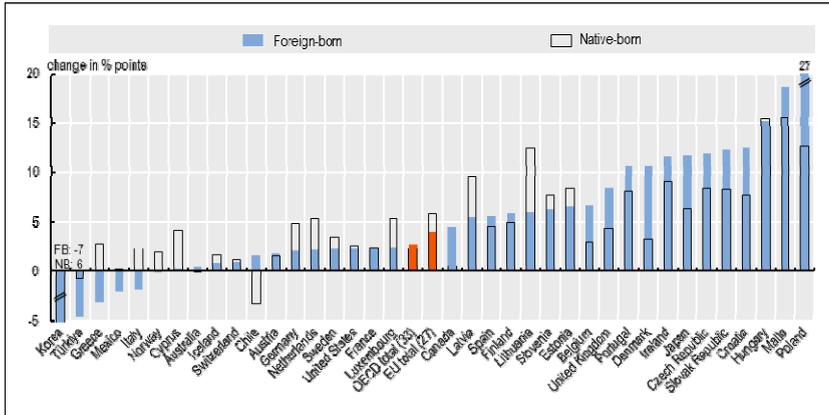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7.에서 재 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1 (2020 for Türkiye),” EU, 2021; “Australia: Labour Force Survey (LFS)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The United Kingdom, Canada, Israel & New Zealand: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Japan: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1,” 통계청,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 (CASEN)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20; “Colombia: Gran Encuesta Integrada de Hogares (GEIH) 2021,” DANE, 2021; “Costa Rica: Encuesta Continua de Empleo (ECE) 2021,” INEC, 2021;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20,” INEGI, 2020; “Argentina: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EPH) 2021,” INDEC, 2021; “Peru: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ENAH) 2021,” INEI, 2021.

하지만 [그림 2-7]에서 2011년과 2021년 사이 고용률 변화는 다소 우려스럽다. OECD 전체 평균 이주민 고용률이 3%p 상승한 반면, 한국의 이주민 고용률은 오히려 7%p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감소폭으로, 한국 이주민의 노동시장 입지가 지난 10년간 크게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7] 2011-2021년 고용률의 변화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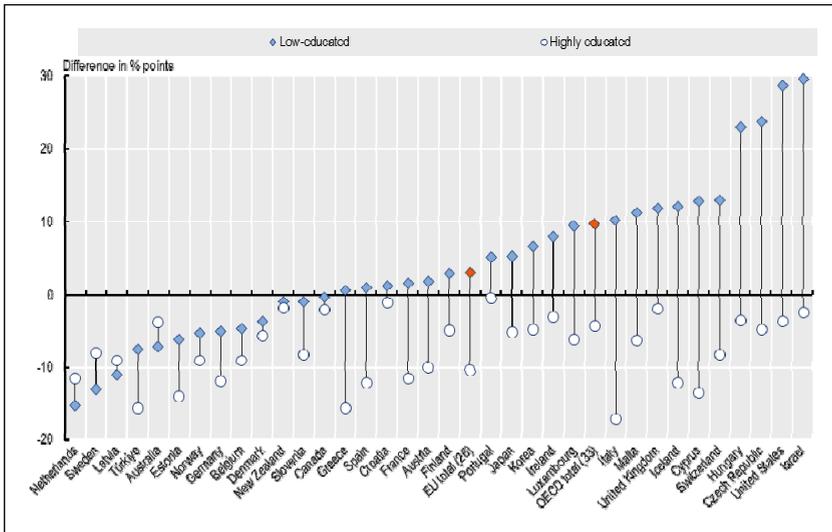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7에서 재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EU-LFS) 2011 & 2021 (2011 & 2020 for Türkiye),” EU, 2011 & 2021; “Australia: Labour Force Survey (LFS) 2011 &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 2020; “United Kingdom & Canada: Labour Force Survey (LFS) 2011 &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1 & 2021;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11 & 2021,” U.S. Census Bureau, 2011 & 2021; “Japan: Population Survey 2010 &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0 &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12 &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12 & 2021,” 통계청, 2012 &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CASEN) 2011 &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11 & 2020;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12 & 2020,” INEGI, 2012 & 2020.

학력의 긍정적 효과가 이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경향(OECD, 2023)은 한국에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고

학력 이주민은 자국민 고학력자에 비해 고용률이 5%p 낮아 학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저학력 이주민은 오히려 자국민 저학력자보다 고용률이 7%p 높은 역전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고학력 이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저학력 이주민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자국민 대비 외국 출생자의 학력 수준에 따른 고용률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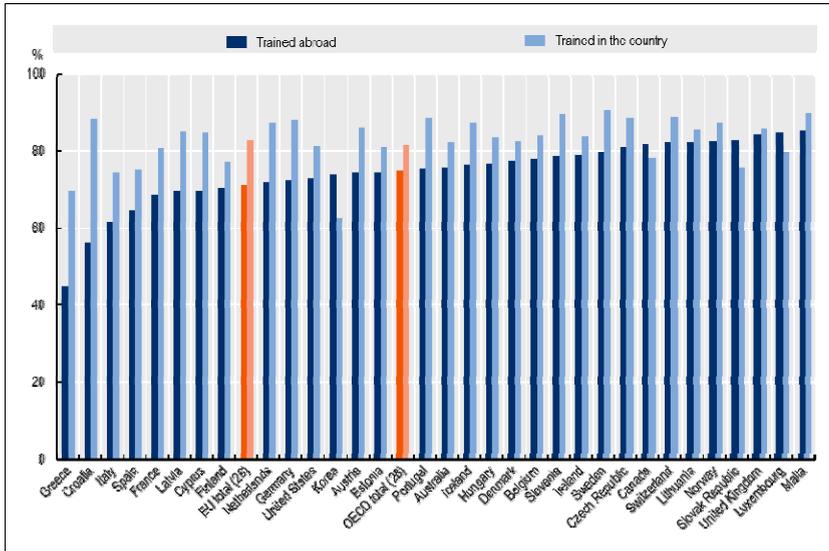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9에서 재  
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1 (2020 for Türkiye),”  
EU, 2021;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The United Kingdom, Canada, Israel & New  
Zealand: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Japan: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  
용조사(SILCLF)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0,” 통계청, 2020 & 2021.

고학력 이주민의 경우, 학위를 취득한 국가에 따라 고용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해외 학위 소지자의 고용률(74%)은 국내 학위 소지자(63%)보다 10%p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OECD, 2023). 이는 학위 취득 후 특정 기술직으로 입국하는 이주민과, 국내에서 유학 후 구직 시장에 진입하는 이주민이 처한 서로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교육 이수 장소별(place of education), 고학력 외국 태생 인구의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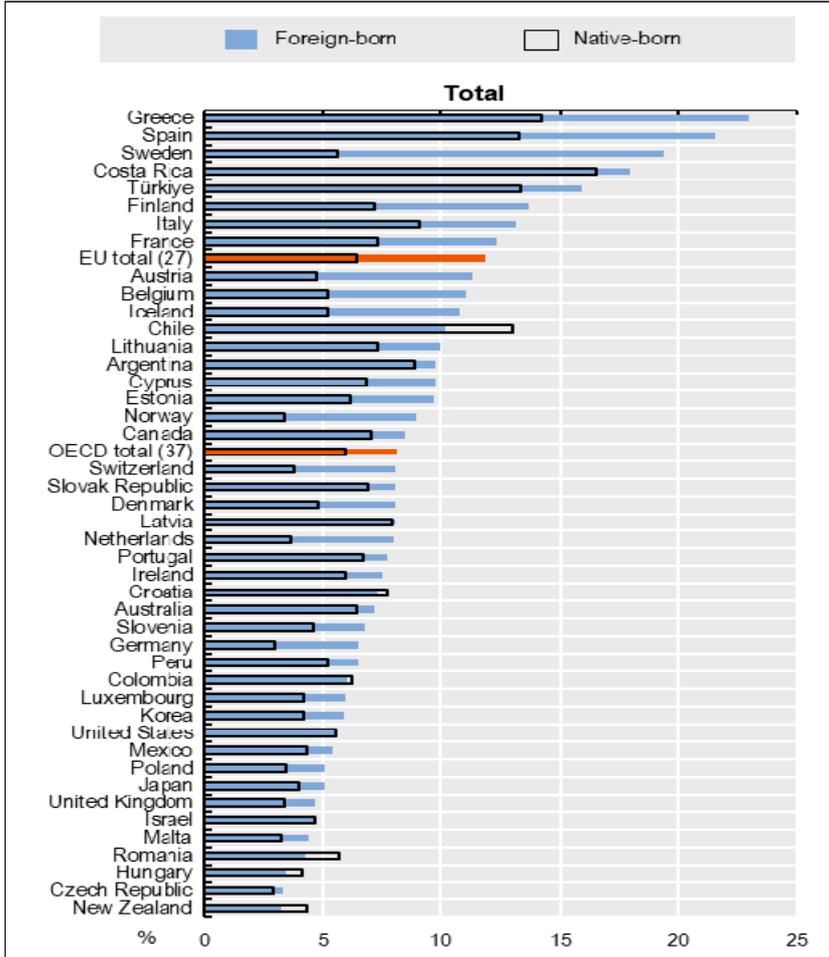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시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79에서 재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0,” EU, 2020;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SILCLF) 2021,” 통계청, 2021.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이주민의 실업률은 자국민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이주민 실업률은 5.9%로 자국민 실업률(4.2%)보다 1.7%p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격차(2.3%p)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추세는 정반대다. 2011년과 2021년 사이 OECD 평균 이주민 실업률은 2.8%p 감소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2.1%p 증가했다. 특히 OECD 평균은 이주민의 실업률 감소 폭이 자국민보다 컸던 반면, 한국은 이주민의 실업률 증가 폭이 자국민보다 커, 고용의 질 악화가 두드러졌다([그림 2-10] 및 [그림 2-11] 참조).

[그림 2-10]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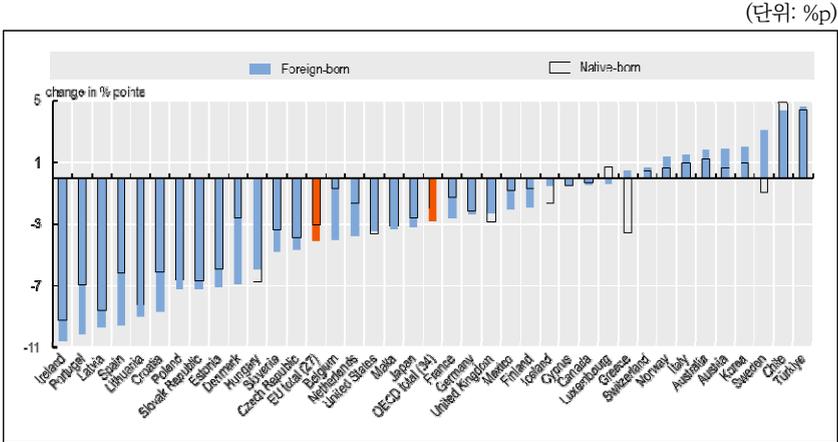
(단위: %)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실업률은 OECD(2023)은 ILO의 정의에 따라 일자리가 없지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조사 대상 주간에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로 산정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81에서 재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0,” EU, 2020;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21,” 통계청, 2021.

[그림 2-11] 2011-2021년 실업률의 변화 추이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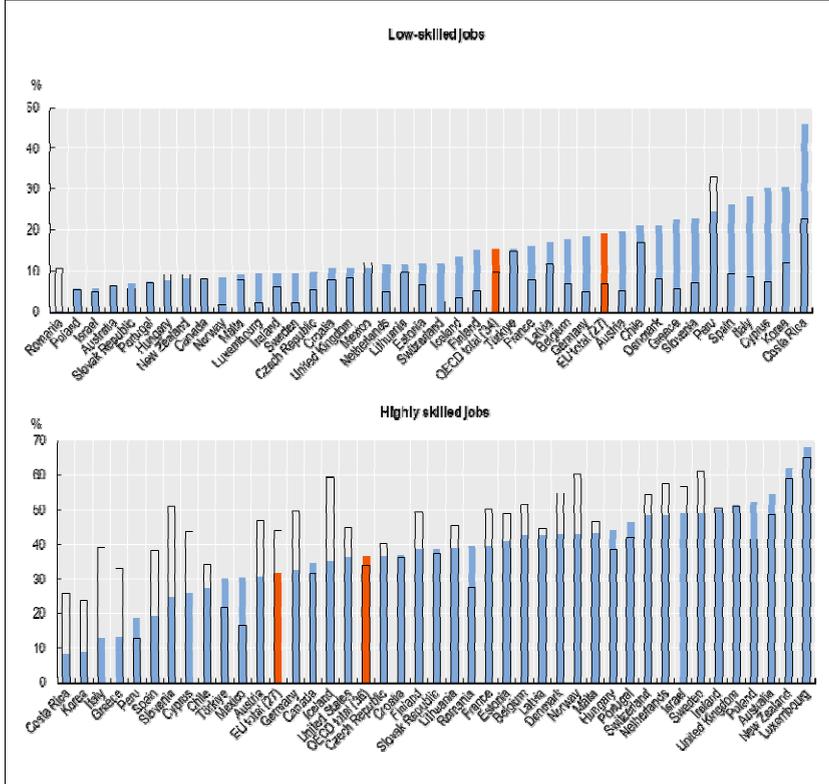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81에서 재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11 & 2021 (2011 & 2020 for Türkiye),” EU, 2011 & 2021; “Australia: Labour Force Survey (LFS) 2011 &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 2020; “United Kingdom & Canada: Labour Force Survey (LFS) 2011 &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1 & 2021;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11 & 2021,” U.S. Census Bureau, 2011 & 2021; “Japan: Population Survey 2010 &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0 &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12 &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12 & 2021,” 통계청, 2012 &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 (CASEN) 2011 &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11 & 2020;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12 & 2020,” INEGI, 2012 & 2020.

## 마. 직업 숙련도(job skills)와 과잉 학력(overqualification)

이주민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높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이주민의 저숙련 직업 종사 비율은 15.6%인데에 비해 한국은 30.5%로 약 2배 이상이다. 반면 이주민의 고숙련 직업 종사 비율은 한국이 8.9%, OECD 평균이 36.9%로 한국에서는 매우 적은 이주민이 고숙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저숙련 및 고숙련 직업 종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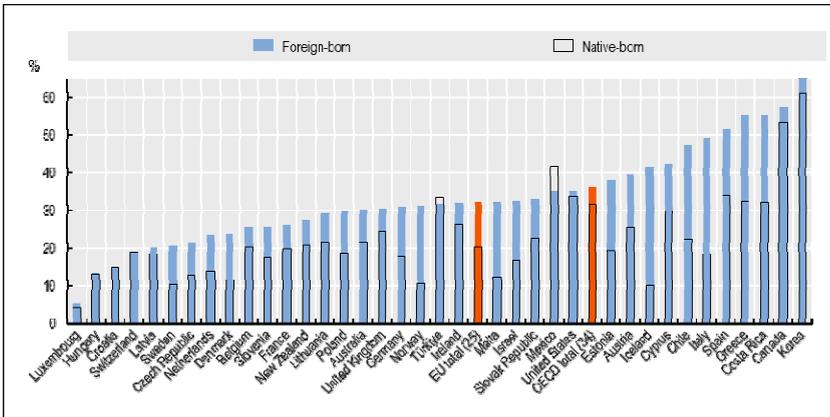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93.에서 재  
 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1 (2020 for Türkiye),” EU,  
 2021;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The United Kingdom, Canada & New  
 Zealand: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Israel: Labour Force Survey (LFS) 202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2020;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Japan: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  
 용조사(SILCLF)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1,” 통계청,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CASEN)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20; “Costa Rica: Encuesta Continua de Empleo (ECE)  
 2021,” INEC, 2021;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20,” INEGI, 2020; “Peru: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ENAHO) 2021,” INEI,  
 2021.

이러한 학력-직무 불일치는 과잉 학력(overqualification)<sup>13)</sup> 지표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과잉 학력 비율은 이주민(72.7%)과 자국민(61.1%) 모두 OECD 평균(이주민 36.5%, 자국민 32.0%)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자국민 간 과잉 학력의 '격차'(11.6%p) 역시 OECD 평균(4.5%p)의 2.5배를 넘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학력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특히 이주민은 학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타국에 비해 훨씬 심각함을 보여준다(그림 2-13) 참조).

[그림 2-13] 과잉학력(Overqualification) 비율

(단위: %)



주: 한국의 이민자 체류상태 및 고용조사의 경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2023. p.95에서 재 인용;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1 (2020 for Türkiye),” EU, 2021; “Australia: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The United Kingdom, Canada & New Zealand: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Israel: Labour Force Survey (LFS) 202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srael, 2020;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1,” U.S. Census Bureau, 2021;

13) 고학력자가 자신의 학력이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무(중간 혹은 저숙련 직무)에 종사하는 현상을 의미함(OECD, 2023)

“Japan: Census 2020,”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한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1,” 통계청, 2021; “Chile: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 (CASEN) 2020,”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20; “Costa Rica: Encuesta Continua de Empleo (ECE) 2021,” INEC, 2021; “Mexico: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20,” INEGI, 2020; “Peru: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ENAH) 2021,” INEI, 2021.

## 2. 국내 이주배경 청년 연구 동향

이주배경 청년들이 아동기와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나 아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청년기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 이행, 진로 선택,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 사회통합 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소수이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전반적 삶에 대한 연구가 있다. 류유선(2023)의 연구는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청년을 아우르는 다문화배경 청년의 생애 발달 과정과 사회참여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정체성 형성, 학습 기회, 진로 탐색, 사회관계망, 시민성 참여 등의 영역에서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별 이질성과 중도입국 청년의 언어·학력 취약성, 다문화 정체성의 갈등 등을 구조적으로 드러냈으며,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권과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교육과 역량 개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김진희 외(2020)의 연구는 전국 다문화배경 청년의 교육적 요구와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 낮은 학력 수준과 기초 문해 부족, 취업률 저조 등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생애주기

적 학습 체계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국어 평생교육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과 연계된 학습 시스템 구축, 지자체-대학-민간의 협업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년을 세계시민이자 지역인재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취업 및 자립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 양계민 외(2023)는 19~24세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출생지 및 배경에 따라 여러 하위 집단 - ①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②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③ 외국인가정 자녀, ④ 북한이탈 청소년, ⑤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청소년- 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배경 청년들은 진로 정보 부족,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실용적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생애 설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도 입국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장기 체류 및 취업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뚜렷했으며, 정체성 혼란과 차별 경험 등 다층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수용성은 긍정적이었으나, 지원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태도가 나타나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원스톱 진로자립센터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적용, 정책 통합성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청년정책과 이주정책의 교차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넷째, 이주민의 노동시장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 김영아 외(2024)는 눈덩이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현황과 변화 그리고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경로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출신으로 만 18세 이전에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20~39세 이주배경 청년 32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은 평균적으로 22.5세에 비정규직(68%, 정규직은 25%), 즉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으로 첫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며, 평균 14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6.3%로 낮은 편이었다. 이들은 일주일 평균 35시간 일하며, 월 평균임금은 157만 원이었다. 구직자의 경우, 남성일수록, 외국 국적자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구직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주배경 청년은 진로 탐색부터 구직, 일자리 정착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류자격, 차별 등 복합적인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며, 본인의 역량보다 낮은 직무를 선택하거나 불안정한 경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체 인력이 아닌 노동시장 주체로 인식하고,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과 기술훈련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편, 박미선 외(2024)는 이주배경 청년을 농촌 인력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청년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유학생까지 이주배경 청년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설문,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자인 이주배경 청년과 수요자인 농업 법인의 양측 관점에서 이들의 농산업 노동시장 유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나 취약계층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농촌의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인력 자원’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과 이민정책의 교차점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특정 지역에 기반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

석한 연구도 있다. 배옥현(2024)의 연구에서는 경북 지역의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이 기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경향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고(언어 장벽, 심리적 고립 등)를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는 전문 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교통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도시 및 비수도권 정책 접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해응·김미정(2024)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년(20~30대)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청년이 청년정책과 다문화정책 모두에서 소외된 ‘보이지 않는 청년’임을 지적하며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교육 경험, 일 경험, 관계망, 정체성, 정책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력과 진로에 있어 정보 접근성, 언어 장벽, 차별 경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또한 대부분 단순·저임금 서비스직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ㄱ) 교육자원 확대(장학금 정보 접근성, 이중언어 교육 등), ㄴ) 취·창업 역량 강화(직업훈련기관 연계, 공공기관 인턴 확대), ㄷ) 지역사회 포용성 제고(청년정책 접근성, 자조 모임), ㄹ) 법·제도 기반 보완(조례 개정, 정기 실태조사 등)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은 한국 사회의 비이주배경 청년과는 구별되는 이주배경으로 인해 언어 역량, 정체성 혼란, 체류자격의 제약, 정보 접근의 불균형 등 다층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둘째, 일부 선행 연구들은 후기 청소년기(18세 이상) 혹은 청년 초기(24세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기가 진로 형성, 자립, 사회 적응 등의 생애 전환이 집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유형과 구분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청년의 범위는 다문화가정

자녀부터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당사자, 외국인 유학생 등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인데, 이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넷째, 많은 연구들은 정량적 통계 분석, 특히 질적 면접조사를 많이 활용하여 개별 청년들의 삶의 맥락을 깊이 있게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토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3장

###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진로 이행과 노동시장 진입

-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
- 제2절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 제3절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 분석:  
상대적 위치 진단



## 제 3 장

#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진로 이행과 노동시장 진입

19~34세 이주배경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 대표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와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교차 활용한다. 이번 장에서는 전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주배경 초기 청년(만 19~24세)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 이행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2024년 「청년삶실태조사」를 참조 기준으로 삼아, 비교 가능한 일부 문항을 중심으로 앞서 분석한 이주배경 청년의 교육 및 노동시장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 제1절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 경로

### 1. 조사 개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행한 이래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은 1,635명이었고, 학부모는 1,625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CAPI를 통해 학부모는 한국어 외 9개 외국어로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어 옵션의 조사만 가능하다. 1기 코호트는 다문화 청소년

과 그들의 어머니가 주 대상인데, 여기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주를 이룬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기 코호트의 2022년의 12차 패널데이터를 주 데이터로 활용하고, 청년의 출신 고교 유형 등 일부 데이터는 과거 패널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 2.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현황

### 가. 인구·사회학적 배경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년의 거주지는 경기(경기·인천) 24.1%, 전라·제주 24.0%, 경상권 22.9%, 충청·강원 19.1%, 서울 9.8% 순으로 분포하며, 서울 거주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은 패널의 추적 시점에 따라 2022년 기준 만 21세에 집중되어, 동 연령대가 표본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청년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제12차(2022년) 데이터에서 확보할 수 없어, 제10차(2020년) 청소년 패널조사 원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확인하였다. 전체의 약 60%가 일반고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약 27%), 특수목적고(약 5.3%), 자율고(약 5.0%)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일반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부모 학력의 경우, 어머니 학력은 고졸 47.9%로 가장 많고, 대학(2~3년제) 졸업 25.4%, 대학(4년제) 졸업 15.8%, 중졸 이하 10.5%, 대학원 졸업 0.3% 순이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51.8%가 가장 크고, 중졸 이하 31.2%, 대학(4년제) 졸업 10.0%, 대학(2~3년제) 졸업 6.3%, 대학원 졸업 0.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고등교육 비중이 어

머니에 비해 낮은 특징이 확인된다.

요약하면, 이주배경 청년은 경인과 전라·제주권에 집중되어 있고, 21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고 출신 다수, 부모 학력 간 구조적 차이(특히 아버지의 고등교육 비중 낮음)가 특징적이다.

〈표 3-1〉 이주배경 청년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거주 지역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서울	99	47	52	9.8	9.8	9.9
	경인(경기도+인천)	243	111	132	24.1	23.1	25.1
	충청 및 강원권	192	91	101	19.1	18.9	19.2
	경상권	231	122	109	22.9	25.4	20.7
	전라 및 제주권	242	110	132	24.0	22.9	25.1
연령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20세	73	31	42	7.2	6.4	8.0
	21세	898	436	462	89.2	90.6	87.8
	22세	33	13	20	3.3	2.7	3.8
	23세	3	1	2	0.3	0.2	0.4
고등 학교 유형 <sup>1)</sup>	소계	976	466	510	100.0	100.0	100.0
	일반고	591	248	343	60.6	53.2	67.3
	특수목적고	52	29	23	5.3	6.2	4.5
	특성화고	267	150	117	27.4	32.2	22.9
	자율고	49	29	20	5.0	6.2	3.9
	기타	17	10	7	1.7	2.1	1.4
어머니 학력 <sup>2)</sup>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106	49	57	10.5	10.2	10.8
	고졸	482	232	250	47.9	48.2	47.5
	대학(2~3년제 졸업)	256	118	138	25.4	24.5	26.2
	대학교(4년제 졸업)	159	80	79	15.8	16.6	15.0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3	2	1	0.3	0.4	0.2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아버지 학력	소계	968	462	506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302	147	155	31.2	31.8	30.6
	고졸	501	229	272	51.8	49.6	53.8
	대학(2~3년제 졸업)	61	35	26	6.3	7.6	5.1
	대학교(4년제 졸업)	97	48	49	10.0	10.4	9.7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7	3	4	0.7	0.6	0.8

주: 1) 고등학교 유형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자료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를 개인id로 병합(merge)하여 도출함  
 2) 어머니 학력에는 미응답 결측값(1명) 제외함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학부모 9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이주배경 청년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9%), 단순 노무 종사자(1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자(3.2%), 사무 종사자(3.3%), 판매 종사자(3.8%)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사노동이나 단순 노무와 같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는 동시에, 전문직 종사 비중도 일정하게 나타나 직업 분포의 이중적 양상이 드러남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한국인 경우는 3.0%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외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36.1%)과 필리핀(25.5%)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이 24.9%(조선족 17.9%, 한족 7.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버지의 출신국은 한국이 9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외국 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는 본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이 대부분 아버지가 한국 출신이고,

어머니가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 시 이러한 표본 특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모님의 결혼상태 중 결혼 유지 비중이 87%를 넘으며, 이혼 비중이 약 5%, 사별이 약 6% 정도이다.

〈표 3-2〉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 : 직업, 출신국가

(단위: 명, %)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어머니 현재 직업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관리자	32	7	25	3.2	1.5	4.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0	75	85	15.9	15.6	16.2
	사무 종사자	33	16	17	3.3	3.3	3.2
	서비스 종사자	110	54	56	10.9	11.2	10.6
	판매 종사자	38	22	16	3.8	4.6	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1	37	44	8.0	7.7	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9	17	32	4.9	3.5	6.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3	31	32	6.3	6.4	6.1
	단순 노무 종사자	118	58	60	11.7	12.1	11.4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276	132	144	27.4	27.4	27.4
직업 구분 불가	47	32	15	4.7	6.7	2.9	
아버지 현재 직업	소계	968	462	506	100.0	100.0	100.0
	관리자	64	26	38	6.6	5.6	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	22	33	5.7	4.8	6.5
	사무 종사자	52	29	23	5.4	6.3	4.5
	서비스 종사자	7	6	1	0.7	1.3	0.2
	판매 종사자	21	11	10	2.2	2.4	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3	92	111	21.0	19.9	2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0	56	74	13.4	12.1	14.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	81	76	16.2	17.5	15.0
	단순 노무 종사자	160	72	88	16.5	15.6	17.4
	군인	2	2	0	0.2	0.4	-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54	29	25	5.6	6.3	4.9
	직업 구분 불가	63	36	27	6.5	7.8	5.3

92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구분		학생(인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어머니 출신 국가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한국	30	14	16	3.0	2.9	3.0
	중국(한족, 기타민족)	70	28	42	7.0	5.8	8.0
	중국(조선족)	180	88	92	17.9	18.3	17.5
	베트남	15	9	6	1.5	1.9	1.1
	필리핀	257	128	129	25.5	26.6	24.5
	일본	364	172	192	36.1	35.8	36.5
	태국	43	16	27	4.3	3.3	5.1
기타	48	26	22	4.8	5.4	4.2	
아버지 출신 국가	소계	968	462	506	100.0	100.0	100.0
	한국	938	447	491	96.9	96.8	97.0
	중국(한족, 기타민족)	1	1	0	0.1	0.2	-
	중국(조선족)	1	1	0	0.1	0.2	-
	필리핀	4	1	3	0.4	0.2	0.6
	일본	11	7	4	1.1	1.5	0.8
기타	13	5	8	1.3	1.1	1.6	
부모님 결혼 상태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결혼	884	426	458	87.8	88.6	87.1
	이혼	49	15	34	4.9	3.1	6.5
	별거	11	4	7	1.1	0.8	1.3
	사별	62	35	27	6.2	7.3	5.1
	동거	1	1	0	0.1	0.2	-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이주배경 청년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 거주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의 모국어는 일본어가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중국어 25.0%, 필리핀어 24.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영어(1.5%), 몽골어(0.2%), 러시아어(2.1%), 베트남어(1.2%), 태국어(4.4%) 등은 모두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결혼이민자 중 23.3%가 일본 국적자로 중국(50.5%), 한국계 중국인(38.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0년 초반까지 중국, 한국

계 중국인, 일본 국적자의 결혼이민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2008).

한편,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을 보면 '20~24년'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5~19년' 역시 40.6%로 나타나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비중이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이는 본 조사가 2011년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2010년 기준)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대상 부모 상당수가 한국에 장기 거주해 온 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3-3〉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 :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단위: 명, %)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이주 배경 부모의 모국어	소계	911	441	470	100.0	100.0	100.0
	영어	14	8	6	1.5	1.8	1.3
	중국어	228	108	120	25.0	24.5	25.5
	몽골어	2	1	1	0.2	0.2	0.2
	파갈로그어(필리핀어)	220	113	107	24.1	25.6	22.8
	러시아어	19	10	9	2.1	2.3	1.9
	베트남어	11	8	3	1.2	1.8	0.6
	대만어	3	2	1	0.3	0.5	0.2
	태국어	40	16	24	4.4	3.6	5.1
	일본어	349	164	185	38.3	37.2	39.4
기타	25	11	14	2.7	2.5	3.0	
이주 배경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년)	소계	911	441	470	100.0	100.0	100.0
	8~9년	8	4	4	0.9	0.9	0.9
	10~14년	36	18	18	4.0	4.1	3.8
	15~19년	370	177	193	40.6	40.1	41.1
	20~24년	432	208	224	47.4	47.2	47.7
	25~29년	62	33	29	6.8	7.5	6.2
	30년 이상	3	1	2	0.3	0.2	0.4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학부모 9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원자료 저자 분석.

이주배경 청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0~300만 원 미만'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0~200만 원 미만'이 21.4%, '300~400만 원 미만'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 가구도 13.8%에 달해,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의 비중은 9.1%에 불과하여, 이주배경 청년 가구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인식한 청년도 31.9%로 나타났다. 반면 '잘 사는 편이다'(5.9%)와 '아주 잘 산다'(0.3%)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낮았다.

가정의 생활비 마련 주체는 부모 또는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과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21.6%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본인이 대부분 부담'하거나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함께 17.8%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는 21세 이주배경 청년의 약 18%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가계 생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이주배경 청년 가구 경제상태

(단위: 명, %)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실수령액)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139	79	60	13.8	16.4	11.4
	100-200만원 미만	216	91	125	21.4	18.9	23.8
	200-300만원 미만	280	127	153	27.8	26.4	29.1
	300-400만원 미만	179	88	91	17.8	18.3	17.3
	400-500만원 미만	101	49	52	10.0	10.2	9.9
500만원 이상	92	47	45	9.1	9.8	8.6	

구분		학생(빈도)			학생(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가구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아주 어렵다	40	14	26	4.0	2.9	4.9
	어려운 편이다	321	140	181	31.9	29.1	34.4
	보통이다	584	298	286	58.0	62.0	54.4
	잘사는 편이다	59	27	32	5.9	5.6	6.1
	아주 잘 산다	3	2	1	0.3	0.4	0.2
가정의 생활비 마련 주체	소계	1,007	481	526	100.0	100.0	100.0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전적으로 마련	568	265	303	56.4	55.1	57.6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	218	110	108	21.6	22.9	20.5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반씩 마련	37	16	21	3.7	3.3	4.0
	본인이 대부분 마련, 일부 부모님 도움	94	47	47	9.3	9.8	8.9
	본인이 전적 마련	86	41	45	8.5	8.5	8.6
기타	4	2	2	0.4	0.4	0.4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이행 현황

이주배경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 여부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최근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에 진학하고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순수진학’, 대학에 진학하면서 근로 경험도 있는 경우를 ‘진학·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나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순수근로’,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고 근로 경험도 없는 경우를 ‘비진학·비근로’로 정의하였다.

〈표 3-5〉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 유형

구분	대학 진학 (공통질문 10문항) <sup>1)</sup>	일경험 (B-1 문항) <sup>1)</sup>	조작적 정의
순수진학	○	×	대학에 진학하고,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없음
진학·근로	○	○	대학에 진학하고,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있음
순수근로	×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있음
비진학·비근로	×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없음

주: 1) 12차년도 설문지의 관련문항 번호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설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설문지 문항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를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1007명 중 72.4%(729명)가 근로 없이 진학만 하거나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순수진학 비중이 56.1%로 절반 이상이 진학 경로를 이행하는 반면, 여성은 3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여성은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는 비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11.0%)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의 55.7%가 현재 군복무 중인 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학 상태에서 군복무를 병행하거나(순수진학 집단), 또는 진학 및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중(비진학·비근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인권(경기도·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울, 충청 및 강원권, 전라 및 제주권)에서 순수진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인권의 경우 진학·근로 병행 비중이 38.7%로, 순수진학 비중(36.2%)보다 다소 높아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에서 응답자 976명 중 일반고 졸업자 591명(60.5%)이며, 이들 중 순수진학 50.8%였다. 특수목적고 졸업자 52명의 경우 순수진학 28.8%와 진학·근로 13.5%를 합한 42.3%가 일반고(86.0%)보다 낮고, 비진학·비근로 40.4%가 가장 높았다. 이는 특목고 졸업생 중 일부가 관측 시점에 진학을 미루거나(N수 등) 취업 준비로 공백을 갖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특목고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로 '진학보다 취업을 원해서'를 선택한 비중이 높았으며(30명 중 25명), 이에 따른 단계적 비진학·비근로 상태의 확대가 응답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성화고(직업계고)는 일반적으로 선취업-후진학 경향이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수진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34.5%), 순수근로는 24.3%로 다른 고등학교 유형보다 높지만 순수진학 비중보다 높지는 않았다. 이는 직업계고-대학 연계 강화(전문대·후진학 트랙 이용), 준비기간 확보 등으로 초기 진학 선택이 늘어난 결과로 추측된다. 자율형고의 경우 순수진학 53.1%로 다른 고등학교 유형과 비교하여 순수진학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진학·비근로 6.1%로 가장 낮아 대학 진학으로의 연계 지향이 뚜렷했다. 전체적으로 학교유형별 진학·근로 선택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특목고의 준비·공백 기간, 직업계고의 후진학 경로 활용, 자율형고의 즉시 진학 경향이 각각의 응답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서는 이민 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한 특징적인 차이를 알 수는 없다.

〈표 3-6〉 이주배경 청년 기본 특성에 따른 이행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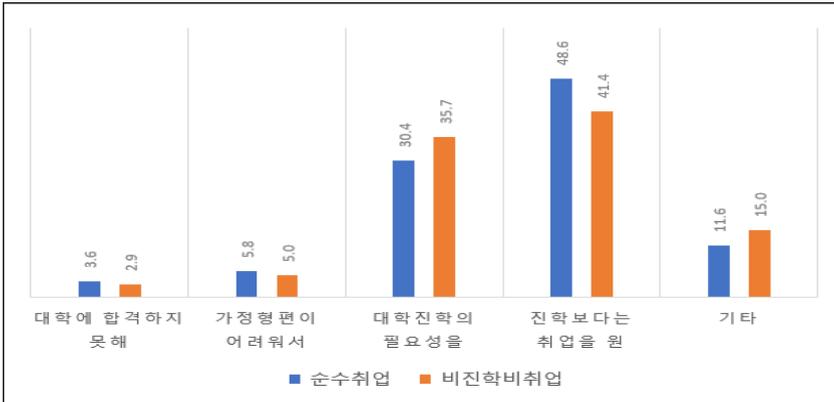
구분		전체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성별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남성	481 (100.0)	270 (56.1)	53 (11.0)	49 (10.2)	109 (22.7)
	↳군복무 중 (남성 중 비율)	268 (55.7)	190 (70.4)	-	-	78 (71.6)
	여성	526 (100.0)	175 (33.3)	231 (43.9)	89 (16.9)	31 (5.9)
거주 지역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서울	99 (100.0)	36 (36.4)	22 (22.2)	25 (25.3)	16 (16.2)
	경인(경기도+인천)	243 (100.0)	88 (36.2)	94 (38.7)	33 (13.6)	28 (11.5)
	충청 및 강원권	192 (100.0)	91 (47.4)	38 (19.8)	27 (14.1)	36 (18.8)
	경상권	231 (100.0)	112 (48.5)	67 (29.0)	26 (11.3)	26 (11.3)
	전라 및 제주권	242 (100.0)	118 (48.8)	63 (26.0)	27 (11.2)	34 (14.0)
고등 학교 유형 <sup>1)</sup>	소계	976 (100.0)	440 (45.1)	278 (28.5)	126 (12.9)	132 (13.5)
	일반고	591 (100.0)	300 (50.8)	208 (35.2)	44 (7.4)	39 (6.6)
	특수목적고	52 (100.0)	15 (28.8)	7 (13.5)	9 (17.3)	21 (40.4)
	특성화고	267 (100.0)	92 (34.5)	46 (17.2)	65 (24.3)	64 (24.0)
	자율고	49 (100.0)	26 (53.1)	15 (30.6)	5 (10.2)	3 (6.1)
	기타	17 (100.0)	7 (41.2)	2 (11.8)	3 (17.6)	5 (29.4)

주: 1) 고등학교 유형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자료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를 개인id로 병합(merge)하여 도출함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순수근로와 비진학·비근로에 해당하는 청년 278명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은 ‘진학보다 취업을 원해서’였으며, 이는 순수근로 청년의 48.6%, 비진학·비근로 청년의 41.4%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두 집단 모두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3-1]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n=278)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 순수진학과 진학·근로를 합한 비중은 66.0%, 고졸은 71.2%였으나, 대학(2~3년제) 졸업은 75.0%, 대학(4년제) 졸업은 76.1%로, 어머니 학력이 높아질수록 진학 중심의 이행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 학력보다 청년의 진학 이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 순수진학과 진학·근로 비중은 72.7%였으나, 대학(2~3년제) 졸업 아버지를 둔 경우 77.0%, 대학(4년제) 졸업 아버지를 둔 경우

82.5%로, 고학력 아버지를 둔 청년일수록 진학으로의 이행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성취와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김진영·유백산(2015)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이는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학업 지원 자원,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직업별 분석 결과, 어머니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인 경우 이주배경 청년의 순수진학과 진학·근로를 합한 이행 비중이 각각 84.4%, 80.0%, 7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 등 전문성 기반 직종일수록 자녀의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판매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해당 비중이 각각 63.2%, 68.2%로, 전문직종에 비해 약 10% 이상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집단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81.8%, 관리자는 7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직업 유형이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 경로 선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전문·관리·사무직종, 아버지의 경우 서비스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학 중심 이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이주배경 청년 부모 특성에 따른 이행경로

(단위: 명, %)

구분		전체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어머니 학력 <sup>1)</sup>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중졸 이하	106 (100.0)	47 (44.3)	23 (21.7)	18 (17.0)	18 (17.0)
	고졸	482 (100.0)	210 (43.6)	133 (27.6)	65 (13.5)	74 (15.4)
	대학(2~3년제 졸업)	256 (100.0)	111 (43.4)	81 (31.6)	38 (14.8)	26 (10.2)
	대학교(4년제 졸업)	159 (100.0)	74 (46.5)	47 (29.6)	16 (10.1)	22 (13.8)
	대학원졸업 (석박사 포함)	3 (100.0)	3 (100.0)	0 (-)	0 (-)	0 (-)
	소계	968 (100.0)	428 (44.2)	275 (28.4)	130 (13.4)	135 (13.9)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302 (100.0)	130 (43.0)	76 (25.2)	47 (15.6)	49 (16.2)
	고졸	501 (100.0)	223 (44.5)	141 (28.1)	65 (13.0)	72 (14.4)
	대학(2~3년제 졸업)	61 (100.0)	31 (50.8)	16 (26.2)	10 (16.4)	4 (6.6)
	대학교(4년제 졸업)	97 (100.0)	41 (42.3)	39 (40.2)	7 (7.2)	10 (10.3)
	대학원졸업 (석박사 포함)	7 (100.0)	3 (42.9)	3 (42.9)	1 (14.3)	0 (-)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어머니 현재 직업	관리자	32 (100.0)	17 (53.1)	10 (31.3)	3 (9.4)	2 (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0 (100.0)	76 (47.5)	52 (32.5)	16 (10.0)	16 (10.0)
	사무 종사자	33 (100.0)	15 (45.5)	11 (33.3)	4 (12.1)	3 (9.1)
	서비스 종사자	110 (100.0)	45 (40.9)	30 (27.3)	11 (10.0)	24 (21.8)
	판매 종사자	38 (100.0)	16 (42.1)	8 (21.1)	8 (21.1)	6 (15.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1 (100.0)	37 (45.7)	25 (30.9)	6 (7.4)	13 (16.0)

102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구분		전체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아버지 현재 직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9 (100.0)	21 (42.9)	14 (28.6)	8 (16.3)	6 (12.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3 (100.0)	29 (46.0)	19 (30.2)	7 (11.1)	8 (12.7)
	단순 노무 종사자	118 (100.0)	59 (50.0)	24 (20.3)	15 (12.7)	20 (16.9)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276 (100.0)	107 (38.8)	80 (29.0)	54 (19.6)	35 (12.7)
	직업 구분 불가	47 (100.0)	23 (48.9)	11 (23.4)	6 (12.8)	7 (14.9)
	소계	968 (100.0)	428 (44.2)	275 (28.4)	130 (13.4)	135 (13.9)
	관리자	64 (100.0)	29 (45.3)	21 (32.8)	8 (12.5)	6 (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 (100.0)	28 (50.9)	17 (30.9)	6 (10.9)	4 (7.3)
	사무 종사자	52 (100.0)	24 (46.2)	13 (25.0)	5 (9.6)	10 (19.2)
	서비스 종사자	7 (100.0)	3 (42.9)	3 (42.9)	0 (-)	1 (14.3)
	판매 종사자	21 (100.0)	4 (19.0)	11 (52.4)	3 (14.3)	3 (14.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3 (100.0)	96 (47.3)	55 (27.1)	23 (11.3)	29 (1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0 (100.0)	59 (45.4)	36 (27.7)	14 (10.8)	21 (16.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 (100.0)	63 (40.1)	44 (28.0)	28 (17.8)	22 (14.0)
	단순 노무 종사자	160 (100.0)	64 (40.0)	50 (31.3)	26 (16.3)	20 (12.5)
군인	2 (100.0)	0 (-)	1 (50.0)	0 (-)	1 (50.0)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54 (100.0)	22 (40.7)	12 (22.2)	10 (18.5)	10 (18.5)	
직업 구분 불가	63 (100.0)	36 (57.1)	12 (19.0)	7 (11.1)	8 (12.7)	

주: 어머니 학력에는 미응답 결측값(1명) 제외함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문화청  
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어머니 출신 국가별로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일본 출신인 경우 자녀의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75.3%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조선족) 74.4%, 베트남 73.3% 순이었다. 반면,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가장 낮은 집단은 어머니 국적이 한국인 경우로 60.0%였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이 65.1%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에 따른 이행경로를 살펴보면, 대만어 사용 가정의 경우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100%(응답자 3명)로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어 사용 가정이 84.2%, 베트남어 사용 가정이 8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출신 국가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국어에 따라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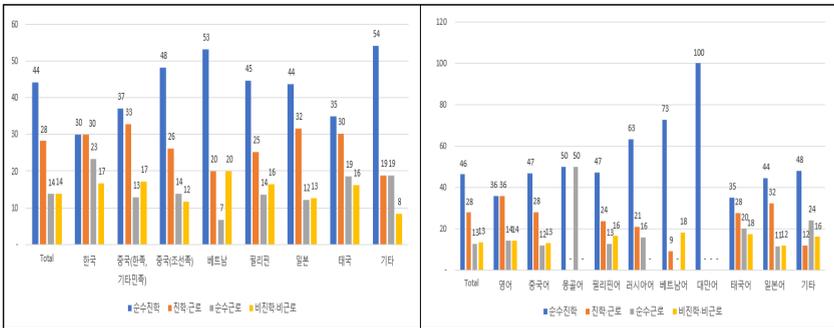
[그림 3-2] 이주배경 청년의 어머니 출신국가와 모국어에 따른 이행경로

(가)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른 이행경로

(나)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에 따른 이행경로

(n=1,007명)

(n=911명)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진학 중심 이행(순

수진학+진학·근로) 비중이 79.1%로 모든 소득구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순수진학 비중이 57.6%로 두드러졌으나, 동시에 비진학·비취업 비중도 16.5%로 가장 높아, 해당 집단이 극단적으로 학업 중심 또는 비이행 상태로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순수근로만 한 비중은 4.3%로 전체 평균(13.9%) 대비 현저히 낮았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가구는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78.2%로 ‘100만 원 미만’ 소득구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비진학·비취업 비중이 8.9%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진학 중심 이행 비중이 다른 구간보다 낮았으나, 순수근로 비중이 20.7%로 상대적으로 높아, 고소득 가구에 속한 이주배경 청년들이 조기 노동시장 진입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500만 원 이상’ 가구의 표집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구 형편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 집단(표본 3명)은 66.7%가 순수진학으로 이행했으며, 나머지 33.3%는 비진학·비근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전념하거나 다른 준비 활동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연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아주 어렵다”고 인식한 집단은 순수진학 비중이 32.5%로 가장 낮았고, 진학·근로 병행 비중이 40.0%로 높아, 경제적 제약 속에서 학업과 생계유지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경제 인식이 이주배경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이행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환경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3-8〉 이주배경 청년 가구 경제상태에 따른 이행경로

(단위: 명, %)

구분	전체	순수진학	진학 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실수령액)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100만원 미만	139 (100.0)	80 (57.6)	30 (21.6)	6 (4.3)	23 (16.5)
	200만원 미만	216 (100.0)	76 (35.2)	64 (29.6)	46 (21.3)	30 (13.9)
	300만원 미만	280 (100.0)	127 (45.4)	80 (28.6)	30 (10.7)	43 (15.4)
	400만원 미만	179 (100.0)	72 (40.2)	61 (34.1)	24 (13.4)	22 (12.3)
	500만원 미만	101 (100.0)	52 (51.5)	27 (26.7)	13 (12.9)	9 (8.9)
	500만원 이상	92 (100.0)	38 (41.3)	22 (23.9)	19 (20.7)	13 (14.1)
가구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소계	1007 (100.0)	445 (44.2)	284 (28.2)	138 (13.7)	140 (13.9)
	아주 어렵다	40 (100.0)	13 (32.5)	16 (40.0)	8 (20.0)	3 (7.5)
	어려운 편이다	321 (100.0)	141 (43.9)	96 (29.9)	38 (11.8)	46 (14.3)
	보통이다	584 (100.0)	263 (45.0)	158 (27.1)	85 (14.6)	78 (13.4)
	잘사는 편이다	59 (100.0)	26 (44.1)	14 (23.7)	7 (11.9)	12 (20.3)
	아주 잘 산다	3 (100.0)	2 (66.7)	0 (-)	0 (-)	1 (33.3)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0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 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이행 특성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주배경 청년의 이행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의 44.2%가 순수진학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는 비중도 28.2%로 적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3.9%가 진학과 동시에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순수근로 경로의 비중은 전체의 13.7%로, 남성 10.2%, 여성 16.9%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거나 진학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직종 분포 등 노동시장 특성 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한 근로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는 집단의 경우 남성은 1개의 근로활동을 하는 비중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개의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11.3%였다. 여성의 경우 1개 근로활동이 84.0%로 가장 높았고, 2개는 13.4%, 3개는 1.7%로 나타났다.

한편, 순수근로 집단에서는 남성의 경우 1개의 근로활동이 75.5%로 가장 높았으나, 2개의 근로활동을 하는 비중도 20.4%로 나타나 진학·근로 병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은 1개의 근로활동이 87.6%, 2개가 12.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년이 1개의 근로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나, 특히 남성 순수근로 집단에서 2개의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3] 지난 일주일간 일한 개수

(단위: %, 남성=102명, 여성=320)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지난 1주간의 고용 상태를 살펴본 결과, 진학과 근로를 병행한 집단에서 남성의 90.6%, 여성의 96.1%가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 29.2%, 여성 20.3%였으며, 단기 고정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의 비중은 남성 29.2%, 여성 35.6%로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근로 집단에서는 남성의 91.8%, 여성의 95.5%가 임금근로자였다. 이들 임금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중은 여성(44.7%)이 남성(40.0%)보다 4.7%p 높았다. 장기 고정기간 근로자(1년 이상)의 비중은 남성 26.7%, 여성 22.4%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의 경우 남성 13.3%, 여성 11.8%로, 전체적으로 단기 고용 형태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근로 집단은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는 집단에 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학과 근로를 병행하는 집단은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9〉 지난 1주간 고용상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진학·근로		순수근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계	422 (100.0)	53 (100.0)	231 (100.0)	49 (100.0)	89 (100.0)	
고용주	2 (0.5)	1 (1.9)	0 (-)	- (-)	1 (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9 (2.1)	2 (3.8)	3 (1.3)	2 (4.1)	2 (2.2)	
의존계약자	8 (1.9)	1 (1.9)	4 (1.7)	2 (4.1)	1 (1.1)	
임금근로자	400 (94.8)	48 (90.6)	222 (96.1)	45 (91.8)	85 (95.5)	
임금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15 (28.8)	14 (29.2)	45 (20.3)	18 (40.0)	38 (44.7)
	-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104 (26.0)	12 (25.0)	61 (27.5)	12 (26.7)	19 (22.4)
	-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117 (29.3)	14 (29.2)	79 (35.6)	8 (17.8)	16 (18.8)
유형	-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57 (14.3)	8 (16.7)	33 (14.9)	6 (13.3)	10 (11.8)
	-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7 (1.8)	- (-)	4 (1.8)	1 (2.2)	2 (2.4)
무급가족종사자	3 (0.7)	1 (1.9)	2 (0.9)	- (-)	0 (-)	

- 주: 1) 고용주: 단독 또는 타인들과 동업하여 그들이 일하는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단위(기업)를 소유·경영하면서 일상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임금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취업자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단독 또는 타인들과 동업하여 그들이 일하는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단위(기업)를 소유·경영하면서 일상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의존계약자: 이윤 목적으로 다른 경제단위를 위해 또는 통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적 특성의 계약(노동관계)을 체결하는 자로, 다른 경제단위의 고용원은 아니나 해당 경제단위에 의존하는 취업자(예: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 4) 임금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여 자신이 취업한 기업의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대체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경제단위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취업자
- 5) 무급가족종사자: 따로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임금 근로자 또는 의존 계약자로 일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을 돕는자
- 6) 임금근로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년이 있거나,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프로젝트 및 휴직 대체 근로 종료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서 지속적 또는 무기한으로 고용된 근로자
  - ②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정년 이외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자로서 고용(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가 1년 이상인 근로자
  - ③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 ④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가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⑤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전문 기능이나 직무를 습득하기 위해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타인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10〉은 이주배경 청년의 월소득 수준과 분포 특성을 평균값과 중위값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전체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3만 원이지만, 중위값은 90만 원으로 평균값보다 약 26.3만 원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고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상당수 이주배경 청년은 중위소득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 소득 불평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근로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진학·근로’ 집단에서는 평균(87.9만 원)과 중위값(60만 원)의 차이가 27.9만 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 이 집단 내 소득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반면, ‘순수근로’ 집단에서는 평균(174.7만 원)과 중위값(175.5만 원)의 차이가 거의 없어(-0.8만 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포가 비교적 균등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150.8만 원)이 중위값(130만 원)보다

높지만 그 차이(20.8만 원)가 전체 평균 차이보다 작다. 특히 순수근로 남성  
 성의 경우 평균(185.2만 원)과 중위값(170만 원)의 차이가 15.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체 평균(105.3만 원)과 중위값(80만 원)의  
 차이(25.3만 원)가 남성보다 크지만, ‘순수근로’ 여성에서는 평균(169.0  
 만 원)이 중위값(180만 원)보다 오히려 낮게(-11.0만 원) 나타나는 특징  
 을 보인다. 이는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일반적인 양상과  
 달리, 이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이 중위소득(180만 원) 근처  
 또는 그 이상을 벌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0〉 이주배경 청년의 월소득 분포 특성: 평균과 중위값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Obs(명)	통계량	전체	진학·근로	순수근로
전체 (422)	평균 (A)	116.3	87.9	174.7
	중위값 (B)	90	60	175.5
	평균-중위값 (A-B)	26.3	27.9	-0.8
남성 (102)	평균 (A)	150.8	118.9	185.2
	중위값 (B)	130	100	170
	평균-중위값 (A-B)	20.8	18.9	15.2
여성 (320)	평균 (A)	105.3	80.8	169.0
	중위값 (B)	80	60	180
	평균-중위값 (A-B)	25.3	20.8	-11.0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  
 자 분석.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 따라 이주배경 청년의 직업 분포를 분  
 석한 결과(표 3-11), 전체적으로 서비스 종사자(37.2%)와 판매 종사자  
 (19.7%)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직  
 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병행이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시 선택 가능한 직업군이 제한적

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행유형별로 살펴보면, 진학·근로 병행 집단의 경우,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42.4%)와 판매 종사자(23.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서비스 종사자(26.4%)와 판매 종사자(20.8%)의 비중이 높고, 특히 단순 노무 종사자(18.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순수근로 집단에서는 서비스·판매 직종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직업군 구성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0%)와 사무 종사자(19.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정 부분 상위 직업군으로의 진입도 확인된다. 남성은 순수근로 집단에서도 단순 노무 종사자가 서비스 종사자(20.4%)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업 병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서비스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직업 분류(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단위: 명, %)

대분류	전체	진학·근로		순수근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계	422	53	231	49	89
1. 관리자	3 (0.7)	- (-)	- (-)	3 (6.1)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 (7.6)	5 (9.4)	17 (7.4)	2 (4.1)	8 (9.0)
3. 사무 종사자	66 (15.6)	5 (9.4)	40 (17.3)	4 (8.2)	17 (19.1)
4. 서비스 종사자	157 (37.2)	14 (26.4)	98 (42.4)	10 (20.4)	35 (39.3)
5. 판매 종사자	83 (19.7)	11 (20.8)	54 (23.4)	8 (16.3)	10 (11.2)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3 (0.7)	1 (1.9)	- (-)	2 (4.1)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3.3)	4 (7.5)	2 (0.9)	5 (10.2)	3 (3.4)

대분류	전체	진학·근로		순수근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1.2)	1 (1.9)	- (-)	2 (4.1)	2 (2.2)
9. 단순 노무 종사자	46 (10.9)	10 (18.9)	17 (7.4)	10 (20.4)	9 (10.1)
A. 군인	3 (0.7)	1 (1.9)	- (-)	1 (2.0)	1 (1.1)
Y. 직업구분 불가	10 (2.4)	1 (1.9)	3 (1.3)	2 (4.1)	4 (4.5)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 라.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표 3-12〉의 ‘청년정책 인지도’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은 국가장학금(88.9%)과 학자금 대출(87.4%)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순수진학 집단의 인지도는 96.6%, 진학·근로 집단은 97.5%로 거의 전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학자금 대출 역시 순수진학(93.0%)과 진학·근로(93.0%) 집단 모두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면,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18.1%), 청년취업아카데미(17.0%), 국민취업지원제도(17.2%), 청년창업사관학교(9.7%) 등으로,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 집단에서 13%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행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수근로 집단은 국가장학금(71.0%)과 학자금 대출(76.1%)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비진학·비근로 집단 역시 국가장학금(64.3%)과 학자금 대출(69.3%)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부분의 정책에서 인지율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이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취업·창업·주거·역량개발 등 다른 분야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이는 분석 대상의 연령대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청년이라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안내되는 학업 관련 정책(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은 비교적 일관되게 전달되는 반면, 취업·창업·주거·역량개발 관련 정책은 청년센터, 고용센터, 온라인 포털 등 개별 탐색과 별도 채널 접근이 요구되는 구조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이러한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 탐색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진학 여부에 따라 정책 노출 경험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동적으로 학교를 통해 안내되는 정책은 인지도가 높지만, 개별 탐색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책 설계상 이주배경 청년에 특화된 정책 연계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학교 기반 정책 안내 이후 취업·주거·창업 등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는 브릿지(bridge)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2〉 청년정책 인지도

(단위: %, n=1,007명)

청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음” 비율(%)				
	전체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국가장학금	88.9	96.6	97.5	71.0	64.3
학자금대출	87.4	93.0	93.0	76.1	69.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9.4	35.5	36.3	48.6	49.3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25.7	23.6	22.5	29.7	35.0
청년내일채움공제	35.9	26.5	33.8	59.4	46.4
청년희망키움통장	48.9	43.6	54.2	58.7	45.0
청년저축계좌	37.5	33.3	40.9	48.6	33.6
청년희망적금	59.6	55.1	68.0	68.8	47.9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18.1	14.2	18.3	28.3	20.0
청년행복주택	42.5	40.5	47.9	44.9	35.7
국민내일배움카드	35.2	25.6	38.4	52.2	42.1
청년취업아카데미	17.0	17.3	12.7	23.2	18.6
국민취업지원제도1	17.2	15.7	12.7	28.3	20.0
청년창업사관학교	9.7	10.1	7.0	13.0	10.7

주: 주황색 블록은 해당 항목의 비율이 상위 30% 이상에 해당함을, 녹색 블록은 해당 항목의 비율이 하위 30% 이하에 해당함을 나타냄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표 3-13〉의 ‘청년정책 이용 경험’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년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정책은 국가장학금(87.7%)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근로 집단에서 이용 경험이 92.1%로 가장 높았으며, 순수진학 집단에서도 85.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전체의 21.2%가 이용하였으며, 진학·근로 집단 25.0%, 순수진학 집단 18.8%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4년제 일반과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비이주배경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용률(2024년 기준 14.3%)과 비교할 때, 이주배경 청년 집단의 이용률이 다소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sup>14)</sup>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14) “2025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5.8.28. pp.1~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9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않은 순수근로 및 비진학·비근로 집단은 제도의 특성상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이용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훈련 관련 정책 가운데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이용률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순수근로 집단(31.9%)과 비진학·비근로 집단(27.1%)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여, 이들 집단이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업·주거 지원 정책(청년취업아카데미 6.4%,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6.0%)과 자산형성과 관련된 청년희망키움통장(4.5%), 청년저축계좌(7.1%) 등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진학 중심으로 이행한 집단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활용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3〉 청년정책 이용경험

(단위: %, n=1,007명)

청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해 “이용경험 있음” 비율(%)				
	전체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국가장학금	87.7	85.4	92.1	-	-
학자금대출	21.2	18.8	25.0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3	7.0	7.8	16.4	15.9
청년전용창업기금사업	3.5	1.9	1.6	7.3	6.1
청년내일채움공제	10.3	5.1	5.2	19.5	15.4
청년희망키움통장	4.5	3.6	3.3	7.4	6.4
청년저축계좌	7.1	4.7	7.8	10.5	8.5
청년희망적금	20.5	13.9	23.8	29.5	22.4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6.0	3.2	9.6	5.1	7.1
청년행복주택	5.8	5.6	5.9	6.5	6.0
국민내일배움카드	19.8	15.8	11.9	31.9	27.1
청년취업아카데미	6.4	5.2	2.8	9.4	11.5
국민취업지원제도1	16.2	8.6	5.6	28.2	32.1
청년창업사관학교	9.2	8.9	-	11.1	20.0

주: 주황색 블록은 해당 항목의 비율이 상위 30% 이상에 해당함을, 녹색 블록은 해당 항목의 비율이 하위 30% 이하에 해당함을 나타냄  
출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원자료 저자 분석

### 3. 소결

이번 절은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2011년 초4, 2022년 12차 패널)를 활용해 고교 졸업 이후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이행을 네 가지 유형—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로 조작적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지역·학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는데, 경인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서울, 충청·강원, 전라·제주)에서는 순수진학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경인권에서는 진학·근로 병행(38.7%)이 순수진학(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졸업자가 60.5%로 다수를 차지했고, 특목고는 비진학·비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동시장 진입과 소득에서도 이행유형·성별 격차가 확인되었다. 월소득 중위값은 전체 90만 원, 진학·근로 60만 원, 순수근로 175.5만 원으로, 순수근로 집단의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높고 진학·근로 집단은 낮았다. 성별로는 진학·근로 집단에서 남성 100만 원, 여성 60만 원으로 격차가 컸으나, 순수근로 집단에서는 남성 170만 원, 여성 180만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직업 분포는 서비스 종사자(37.2%)와 판매 종사자(19.7%)가 과반을 차지해 초기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순수근로를 택하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은 정부 지원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 지원(장학금, 대출 등)은 국적 중심의 자격 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배경 청년은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반면, 직업훈련·평생교육 제도는 체류자격 중심의 규정으로 참여가 비교적 용이하다. 즉, 현재 정부 정책이 진학의 문은 좁히고 직업 훈련의 문은 상대적으로 열어두는 제도적 비대칭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보다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고등교육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정부지원 방식이 국적 중심의 자격 규정, 직업훈련·평생교육 제도는 참여 가능 체류자격 중심의 규정이라는 이원적 설계를 갖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년은 훈련·평생학습에는 접근 가능한 반면 학자금 지원에서는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제도적 비대칭이 발생한다. 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 학업·취업 여건을 반영한 자격 기준의 정합화, (2) 학교 단계 이후 지역 청년정책(고용센터·청년센터 등)으로의 연계 경로를 제도화하는 브릿지 기능 강화, (3) 체류자격·건강보험·본인인증 등 행정 요건의 간소화와 다국어 정보 제공 확대, (4) 이행유형·성별·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설계는 이주배경 청년의 교육-노동 전환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 제2절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 1. 조사 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실태조사 등)와 다문화가족 시행령 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근거한다. 이 조사는 2009년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2년부터 매년 3년마다 표본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결혼이주민, 배우자 그리고 만 9~24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표본 32,000가구 중에서 15,578가구가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시기

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면접조사와 인터넷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의 자녀와 가구 구성원의 원자료를 추출한 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자녀 만 9~24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표 중, 19~24세의  
이주배경 청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를 자녀로 한정하였기에,  
배우자나 부모 정보 등은 추출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2.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 아래 <표 3-15>와 같다. 남성과 여성  
성비는 전체적으로 균등하나,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출생자는 87.61%로 가장 많았고, 중도 입국자는 12.39%로 적지 않  
은 수를 차지하였다. 만 나이는, 19~20세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중  
도 입국자는 19~21세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다른 연령대도 비교적 골  
고루 분포되었다. 국내 출생 청년은 19세~20세에 연령대가 몰려 있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고졸이 81.72%로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현재 대  
학교 재학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졸자는 12.29%로 나타  
났다. 특히 국내출생자에서 고졸 학력이 많았고, 중도입국자는 무학과 중  
졸 이하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미혼이었다. 경  
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69.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주  
배경 청년의 국적은 91.31%는 한국 국적이었고, 외국 국적은 4.5%, 이중  
국적은 4.2%를 차지하였다. 국외출생 이주배경 청년 중 외국 국적 보유  
자는 34.68%로, 국내출생 이주배경 청년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중국  
적은 각각 4.84%, 4.1%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3-14〉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중도 입국		국내 출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01	100	124		877	
성별	여자	513	51.25	61	49.19	452	51.54
	남자	488	48.75	63	50.81	425	48.46
출생지 <sup>1)</sup>	중도입국	124	12.39	-	-	-	-
	국내출생	877	87.61	-	-	-	-
만 나이	19	271	27.07	22	17.74	249	28.39
	20	252	25.17	24	19.35	228	26
	21	151	15.08	18	14.52	133	15.17
	22	118	11.79	14	11.29	104	11.86
	23	107	10.69	22	17.74	85	9.69
	24	102	10.19	24	19.35	78	8.89
최종 학력 <sup>2)</sup>	무학	30	3	26	20.97	4	0.46
	중졸 이하	30	3	14	11.29	16	1.82
	고졸	818	81.72	71	57.26	747	85.18
	대졸	123	12.29	13	10.48	110	12.54
혼인 상태	무배우자	992	99.10	122	98.39	870	99.20
	유배우자(사실혼)	9	0.90	2	1.61	7	0.80
경제활동 상태 <sup>3)</sup>	취업자	347	69.26	45	61.64	302	70.56
	실업자	77	15.37	16	21.92	61	14.25
	비경제활동	77	15.37	12	16.44	65	15.19
국적	한국	914	91.31	75	60.48	839	95.67
	외국	45	4.5	43	34.68	2	0.23
	이중국적	42	4.2	6	4.84	36	4.1

주: 1) 국내 출생(출생 시 국적\_1 또는 출생 시 국적\_2 중 하나라도 대한민국(1)인 경우), 중도 입국(두 변수 모두 외국(2)이거나, 하나는 외국이고 다른 하나는 결측치인 경우)

2) 무학은 미취학 포함. 중졸 이하(초등학교/중학교 졸업, 수료, 중퇴 & 고등학교 재학, 휴학), 고졸(고등학교 졸업, 수료, 중퇴 & 대학교(전문대/4년제) 재학 및 휴학), 대졸(대학교(전문대/4년제) 졸업, 수료, 중퇴 & 대학원 재학 및 휴학), 대학원 이상(대학원 재학 및 휴학)

3) 경제활동상태 전체는 501명임. 취업자(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있음/없음), 무급가족종사자, 지난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ILO 기준),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통계청 기준), 일시휴직자(직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등 직업분류 1-9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가사/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취업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군인 등)

출처: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3. 진로 및 취업 지원의 경험과 필요성 인식

#### 가. 진로상담 경험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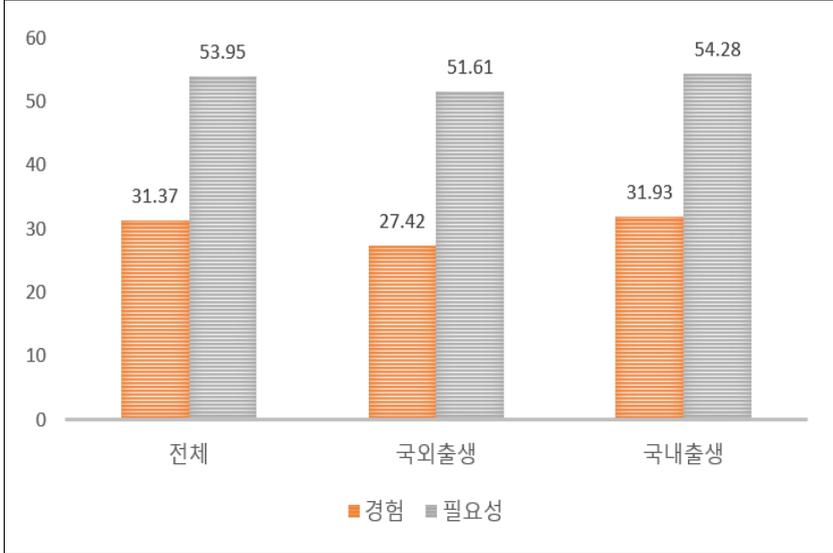
##### 1) 출생지에 따른 비교

응답자에게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 학교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진로상담이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진로상담에 대한 실제 경험과 필요성 인식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및 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1.37%로 약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응답자의 과반(53.95%)은 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수요를 드러냈다.

출생지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필요성 인식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도입국자(경험 27.42%, 필요 51.61%)와 국내출생자(경험 31.93%, 필요 54.28%) 모두 30% 내외의 낮은 경험률과 50%가 넘는 높은 필요성 인식을 보이며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는 출생지보다는 다른 요인이 진로 지원 경험과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4] 출생지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교육 필요성

(단위: %)



주: '경험' 항목의 수치는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며, '필요성' 항목은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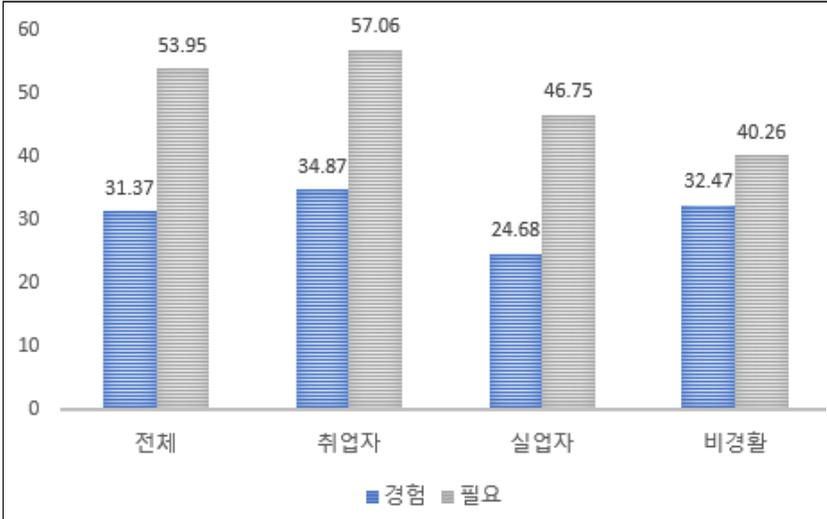
## 2) 고용 상태에 따른 비교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필요성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상담 경험률은 실업/구직자(24.68%)가 취업자(34.87%)나 비경제활동인구(32.4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원 공백의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필요성 인식은 비경제활동인구(40.26%)가 가장 낮았고, 이미 취업한 청년층(57.0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인식의 차이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 지원 문제에 있어 출생 배경보다 현재의 고용 상태가 더 결정적인 변수임을 시사한다.

[그림 3-5]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상담 경험 및 교육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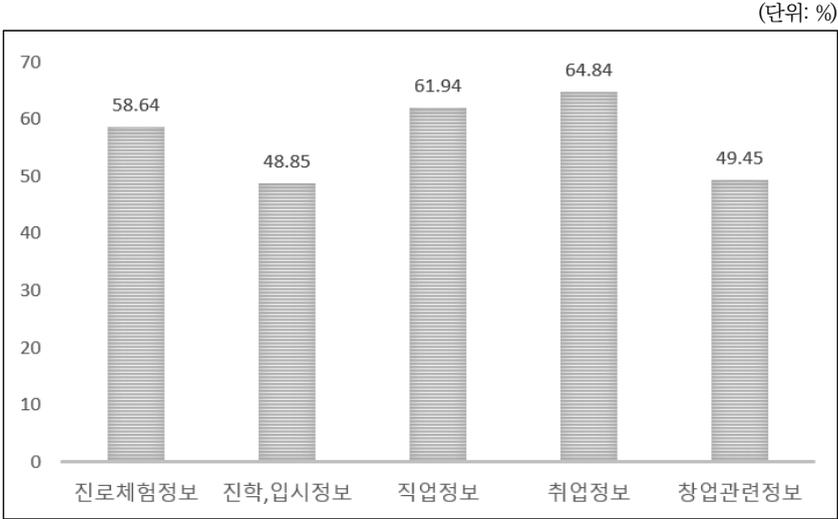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진로 정보 유형별 필요성

필요한 진로 정보의 우선순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되었다. 취업 정보(64.84%), 직업 정보(61.94%), 진로 체험 정보(58.64%)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하며 과반수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창업(49.45%)이나 진학·입시(48.85%)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5.4%에 달해, 응답자 중 학업 연장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 집단이 명확히 구분됨을 시사한다.

[그림 3-6] 진로 정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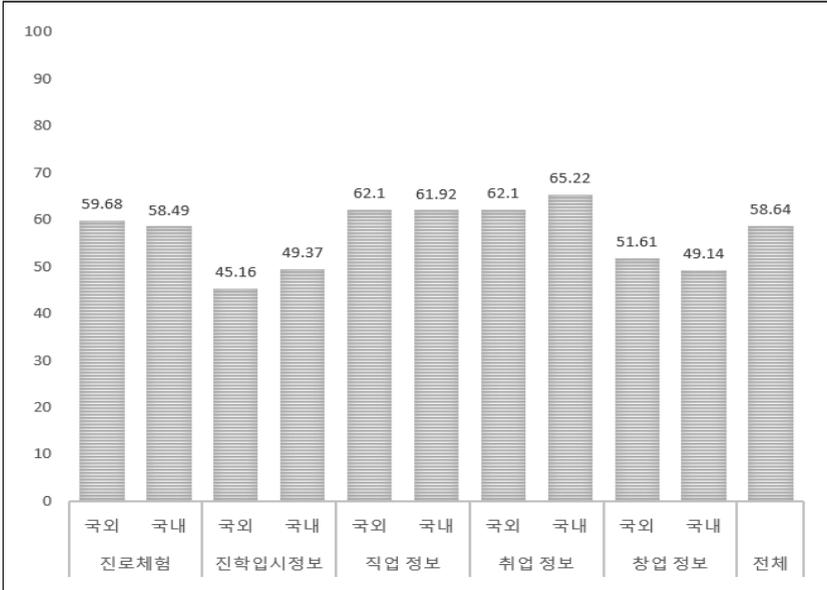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1) 출생지에 따른 비교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 모두 취업과 직업과 관련된 정보, 즉 직접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출생자는 취업 정보(65.22%)에 대한 요구가 전 항목 중 가장 강하게 나타나, 중도 입국자보다 취업에 대한 압박이나 관심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도입국 그룹은 ‘진로 체험’(59.68%), ‘직업 정보’(62.1%), ‘창업 정보’(51.61%) 등에서 국내출생 그룹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출생지라는 변수보다는 현재 이들이 처한 ‘구직’이라는 공통의 상황이 정보 요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출생지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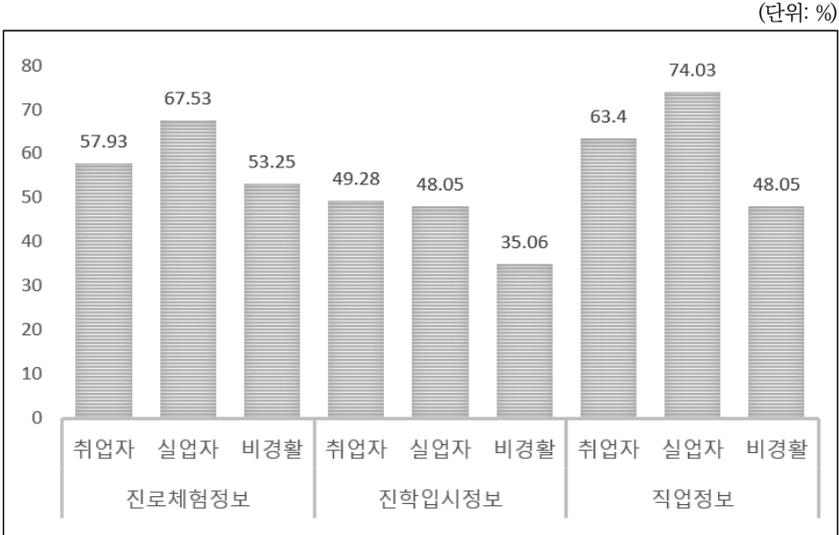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2) 고용 상태에 따른 비교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 체험 정보의 경우, 실업자(67.53%)가 취업자(57.93%)와 비경제활동인구(53.25%)보다 더 필요로 하였다. 진학 입시 정보는 취업자(49.28%)와 실업자(48.05%)의 필요도는 비슷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35.06%)의 필요성은 현저히 낮았다. 직업 정보는 실업자(74.03%)가 가장 필요로 하였고, 취업자(63.4%)가 그 다음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업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8]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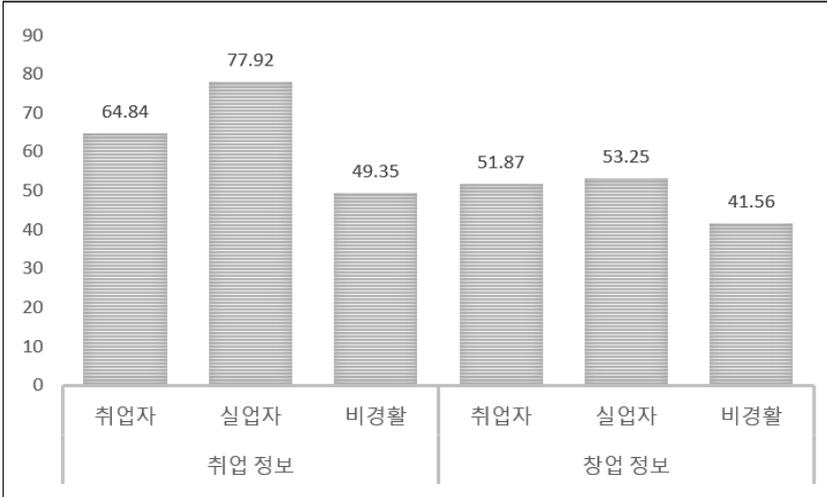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취업 정보의 경우, 실업자(77.92)가 취업자(64.84%)와 비경제활동인구(49.35%)가 더 필요로 하였다. 창업 정보의 경우, 취업자(51.87%)와 실업자(53.25%)의 필요도는 비슷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41.56%)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9] 고용 상태에 따른 진로 정보 필요성 II

(단위: %)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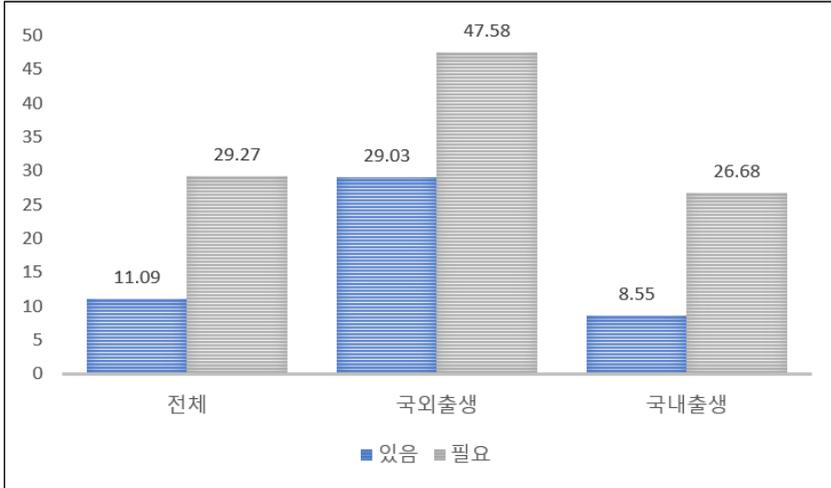
## 다. 한국어교육 경험과 필요성

### 1) 출생지에 따른 비교

전체 응답자는 정규 학교 수업 외에 학교나 외부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09%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응답은 29.27%로 나타났다. 중도입국자의 29.03%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47.58%로 무려 과반 가까이는 한국어 교육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 국내출생자의 8.55%만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26.68%는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그림 3-10] 출생지에 따른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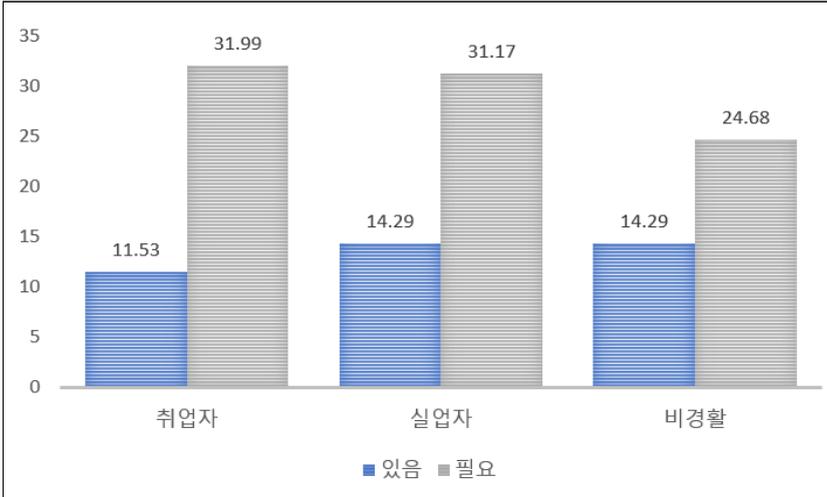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2) 고용 상태에 따른 비교

고용 상태에 따른 한국어 교육 필요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자(14.29%)와 비경제활동인구(14.29%)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자(11.53%)보다 높았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은 취업자(31.99%)와 실업자(31.17%)가 비슷하게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24.6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1] 고용 상태에 따른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필요성

(단위: %)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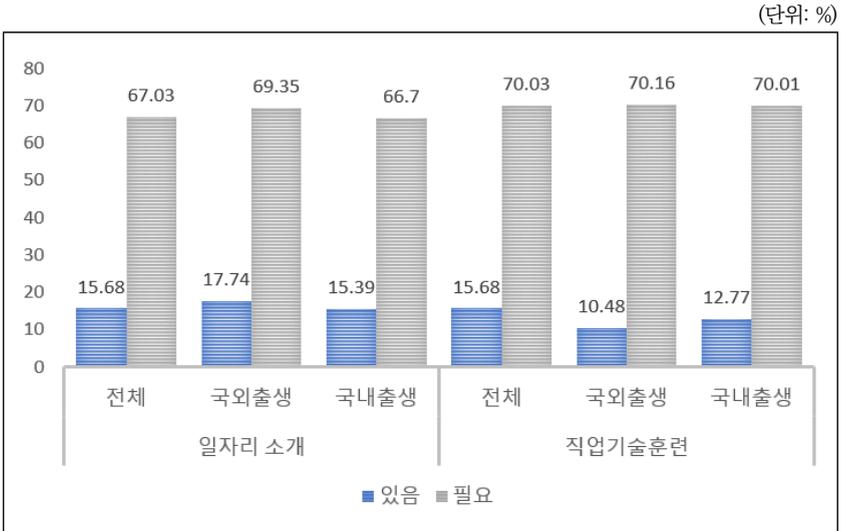
## 라. 직업교육 경험과 필요성

### 1) 출생지에 따른 비교

응답자에게 정규 학교 수업 외에 일자리 소개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출생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도 입국자(17.74%)가 국내 출생자(15.39%)보다 일자리 소개를 받아본 경험이 소폭 많았다.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중도 입국자(69.35%)가 국내 출생자(66.70%)보다 일자리 소개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소개와는 반대로, 국내 출생자(12.77%)가 중도 입국자(10.48%)보다 직업기술훈련을 받은 경험이 더 많았다.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도 입국자(70.16%)와 국내 출생자(70.01%)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출생지 배경에 따른

뚜렷한 인식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 출생지에 따른 직업교육 경험과 필요성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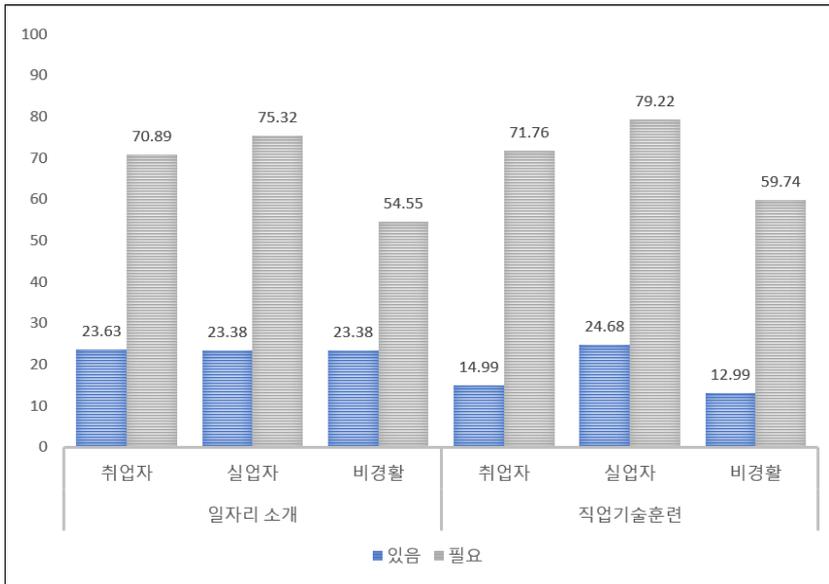
## 2) 고용 상태에 따른 비교

고용 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고용 상태에 따른 뚜렷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고용 상태별 일자리 소개를 받은 경험은 비슷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자(23.63%), 실업자(23.38%), 비경제활동인구(23.38%)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한 경험률을 보였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실업자(75.3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취업자(70.89%)였고, 비경제활동인구(54.55%)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기술훈련의 경우, 실업자(24.68%)가 취업자(14.99%)나 비경제활동인구(12.99%)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일자리 소개’와 마찬가지로 실업자(79.22%)의 필요성이 가

장 높았고, 취업자(71.76%), 비경제활동인구(59.7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자 집단은 ‘일자리 소개’와 ‘직업기술훈련’ 두 분야 모두에서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직업기술훈련’의 경우 실제 경험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림 3-13] 고용 상태에 따른 직업교육 경험과 필요성

(단위: %)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4. 노동시장 참여 실태

### 가. 구직활동 경험

지난 4주간(2021.7.4.~7.31)<sup>15)</sup>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14.24%(93명)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경험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다. 구직 활동을 한 응답자들이 경험한 주요 어려움으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4.0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17.2%),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13.98%), ‘학력과 경력이 부족해서’(9.68%), ‘어려움 없음’(6.45%)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국내 출생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어려움이 컸다. ‘원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45.57%)는 응답이 중도 입국자(35.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18.99%) 구직이 어렵다는 응답도 중도 입국자(7.14%)보다 월등히 높아, 아직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중도 입국자는 구조적 장벽에 더 크게 부딪혔다.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21.43%) 겪는 어려움과 ‘학력 및 경력 부족’(14.29%)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 국내 출생자(각각 12.66%, 8.8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5) 응답자의 14.24%(93명)는 구직활동을 하였고, 85.76%(560명)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조사 시점이 코로나19 유행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구직 시장에 참여한 청년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표 3-15〉 구직 시, 어려운 점 1순위

(단위: 명, %)

	전체		중도입국		국내출생	
	명	%	명	%	명	%
어려움 없음	6	6.45			6	7.59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16	17.2	1	7.14	15	18.99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41	44.09	5	35.71	36	45.57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13	13.98	3	21.43	10	12.66
학력과 경력이 부족해서	9	9.68	2	14.29	7	8.86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4	4.3			4	5.06
나이가 너무 어려서	1	1.08	1	7.14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1	1.08	1	7.14		
가족이 반대해서						
체류자격의 문제 때문에	1	1.08	1	7.14		
기타	1	1.08			1	1.27
	93		14		79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근로 현황

응답자에게 지난 1주일(2021.7.25.~7.31.) 동안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34.27%가 일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65.7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난 1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그리고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판매종사자(25.14%), 단순노무종사자(23.12%), 서비스 종사자(19.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69%), 사무종사자(10.12%) 등의 순이었다.

국내 출생자와 중도 입국자 모두 ‘판매’, ‘서비스’, ‘단순 노무’ 세 가지

직업에 약 70% 가까이 집중되었다. 중도 입국자는 상위 2개 직업인 판매와 단순 노무직에만 무려 55.8%가 집중되어 있어, 국내출생자보다 직업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좁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출생자는 ‘사무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중도 입국자는 ‘판매/단순 노무’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전문직’ 비율이 의외로 높은, 다소 양극화된 직업 분포를 보인다.

〈표 3-16〉 직업 유형

(단위: 명, %)

	전체(취업자)		중도입국		국내출생	
	명	%	명	%	명	%
관리자	1	0.29			1	0.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	10.69	6	13.95	31	10.23
사무종사자	35	10.12	2	4.65	33	10.89
서비스 종사자	66	19.08	7	16.28	59	19.47
판매 종사자	87	25.14	12	27.91	75	24.7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	0.87			3	0.9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	4.62	1	2.33	15	4.9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	5.78	3	6.98	17	5.61
단순 노무 종사자	80	23.12	12	27.91	68	22.44
군인	1	0.29			1	0.33
	346	100	43		303	

주: 자녀\_직업대분류는 결측인 2명 제외.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표 3-17〉과 같다. 전체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45.11%)가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28.16%), 일용근로자(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경

향이 있는 반면, 중도 입국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 고용의 질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 입국자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많았고, 국내출생자에서는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자가 안정적인 상용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임시·일용직 형태의 고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7〉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전체(취업자)		중도입국		국내출생	
	명	%	명	%	명	%
상용근로자	98	28.16	9	20	89	29.37
임시근로자	157	45.11	17	37.78	140	46.2
일용근로자	71	20.4	13	28.89	58	19.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2.01	2	4.44	5	1.6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1.72	2	4.44	4	1.32
급여 없이 가구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	9	2.59	2	4.44	7	2.31
	348	100	45		303	

주: 취업\_근로 상태 결측치 653명 제외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를 살펴보면, 150~200만 원 미만(24.43%)이거나, 50~100만 원 미만(24.14%)에 가장 많았다. 그 외 50만 원 미만(19.83%), 100~150만 원 미만(11.78%), 200~250만 원 미만(10.6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자는 50~100만원 미만(26.07%), 150~200만원 미만(24.42%) 구간이 가장 많았다. 중도입국자가 가장 많이 받는 임금 구간은

50만 원 미만과 150-200만 원 미만이, 각각 24.44%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임금수준이 다소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의 학력이 국내출생 이주배경과 달리 무학과 중졸이하 비율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학력 수준이 낮은 이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므로, 소득 분포의 하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중도입국 과 국내출생자 모두 150~200만원 임금을 받는 층 또한 두터웠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청년 19~24세의 평균임금은 170만원 선으로, 이들은 해당 연령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정 외, 2024).

〈표 3-18〉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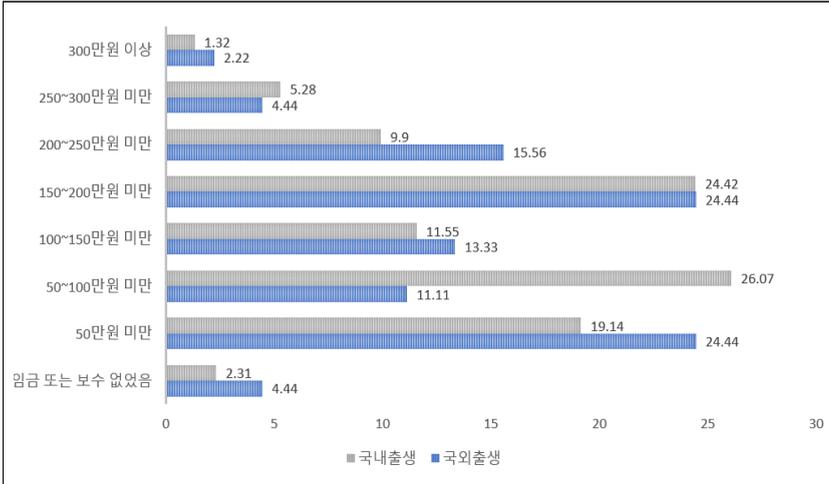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취업자)		중도입국		국내출생	
	명	%	명	%	명	%
임금 또는 보수 없었음	9	2.59	2	4.44	7	2.31
50만원 미만	69	19.83	11	24.44	58	19.14
50~100만원 미만	84	24.14	5	11.11	79	26.07
100~150만원 미만	41	11.78	6	13.33	35	11.55
150~200만원 미만	85	24.43	11	24.44	74	24.42
200~250만원 미만	37	10.63	7	15.56	30	9.9
250~300만원 미만	18	5.17	2	4.44	16	5.28
300만원 이상	5	1.44	1	2.22	4	1.32
	348		45		303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4]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임금

(단위: %)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이주배경 청년 대다수는 직장 내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도입국자는 ‘한국어로 대화하기 어려움’(8.89%)과 ‘임금을 적게 받거나 늦게 받음’(6.67%)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언어적 제약과 노동 조건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국내출생자는 ‘임금을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어려움(4.29%)’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도 3.96%로 나타나,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표 3-19〉 직장 내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전체 (취업자)		중도입국		국내출생	
	명	%	명	%	명	%
별 어려움 없음	297	85.34	34	75.56	263	86.8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4	1.15	2	4.44	2	0.66
임금을 적게 받거나, 늦게 받음	16	4.6	3	6.67	13	4.29
수당 없이 초과시간 근무함	6	1.72	1	2.22	5	1.65
다치거나 병에 걸림	3	0.86	-	-	3	0.99
부당한 해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함)	-	-	-	-	-	-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시킴	3	0.86	1	2.22	2	0.66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움	6	1.72	4	8.89	2	0.66
폭언, 폭행	1	0.29			1	0.33
기타	12	3.45			12	3.96
	348		45		303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5. 한국 사회 정착 의향 및 계획

### 가. 체류자격 현황

한국 국적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현재 체류자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방문 동거(F-1)(28.89%)가 많았으며, 거주(F-2)(15.56%), 재외동포(F-4)(8.89%), 방문 취업(H-2)(8.89%), 단기 방문(C-3)(2.22%)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체류자격은 33.33%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였다.

〈표 3-20〉 체류자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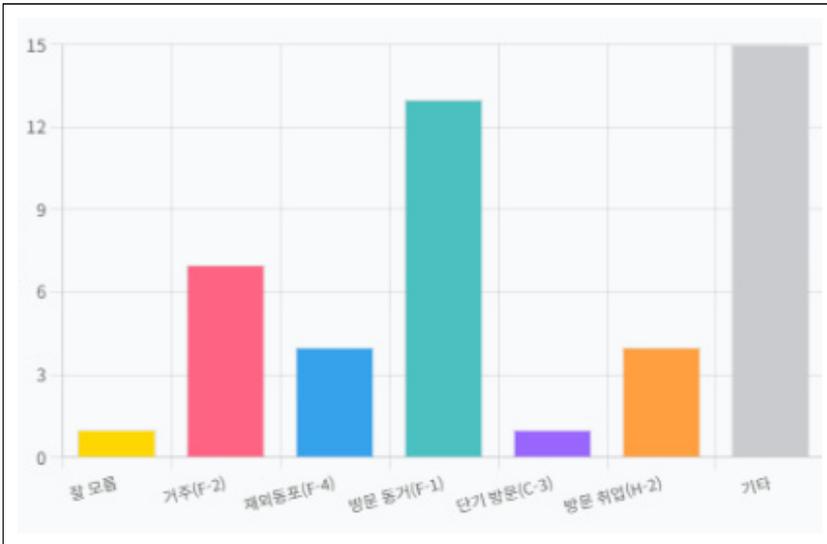
(단위: 명, %)

체류자격	명	%
잘 모름	1	2.22
거주(F-2)	7	15.56
재외동포(F-4)	4	8.89
방문 동거(F-1)	13	28.89
단기 방문(C-3)	1	2.22
비전문 취업(E-9)	-	-
방문 취업(H-2)	4	8.89
기타	15	33.33
	45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5] 체류자격 현황

(단위: 명)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나. 영주권 취득 의향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절반 이상(55.56%)은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었고, 13.33%는 한국 영주권을 희망하였고,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 모두 받을 계획이 없는 사람은 6.67%였다. 다만,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받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44%로 적지 않았다.

〈표 3-21〉 향후 영주권/국적 취득 계획

(단위: 명, %)

	명	%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이다	25	55.56
영주권만 받을 것이다	6	13.33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다	3	6.67
모르겠다	11	24.44
	45	100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6. 소결

이번 절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9~24세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 실제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 겪는 장벽과 그 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 정착 의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들은 진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높은 잠재적 수요를 가졌으나, 실제 경험은 부족한 ‘수요와 경험의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진로상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등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서 경험률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청년은 절반 이상이었다. 이는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높은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괴리를 보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은 현재 처한 고용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실업 상태의 청년들은 '직업 정보'와 '직업기술훈련' 등 당장의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했다. 반면, 이미 취업한 청년들 역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이나 경력 개발을 위한 직업 정보 수요가 높아,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실제 구직 과정에서 출생지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장벽에 직면했다. 국내 출생자는 원하는 임금수준 등 일자리의 질을 중요한 장벽으로 인식한 반면, 중도 입국자는 이에 더하여 언어, 비자, 거주지 등 구조적 장벽에도 부딪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이러한 서로 다른 장벽은 결국 노동시장 참여 결과의 차이, 즉 고용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국내 출생자는 상용근로자 및 사무직을 포함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용 분포를 보였다. 반면, 중도 입국자는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직업 또한 판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직업 특성은 소득 구조의 양극화로 직결되어, 중도 입국자 내에서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주배경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높은 의지와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지 배경과 고용 상태에 따라 상이한 장벽과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이라는 단일한 범주를 넘어 출생지, 학력, 현재 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

### 제3절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 분석: 상대적 위치 진단

이번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이주배경 청년의 특성을 비이주배경 청년 통계와 비교하여, 교육 및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두 조사 결과는 19~24세 이주배경 초기 청년이 대상이므로,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을 조사한 「청년삶실태조사」 결과와는 연령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절의 분석은 두 집단을 동일 선상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대신 비이주배경 청년의 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이주배경 청년이 겪는 교육 및 노동시장의 특성과 상대적 위치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 1. 청년의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 가.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특성화고를 통한 조기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주배경 청년(19~24세)의 60.6%는 일반고를 졸업하였고, 특성화고는 27.4%, 특수목적고는 5.3%, 자율고는 5%, 기타는 1.7% 순으로 나타났다(「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비이주배경 청년(19~34세)의 82.2%는 일반고를 졸업하였고, 특성화고는 10.1%, 자율고는 3.7%, 특수목적고는 1.9%, 기타는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청년삶실태조사, 2024). 따라서 이주배경 청년은 특성화고 졸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아,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노동

시장 진입 시점 또한 빠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2〉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명, %)

구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년삶실태조사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00.0	100	100	100	100
일반고	60.6	82.2	80.4%	80.4%	85.7%
특수목적고 (특목고)	5.3	1.9	1.9%	2.0%	1.7%
특성화고	27.4	10.1	11.9%	10.7%	7.8%
자율고	5	3.7	3.7%	5.0%	2.4%
기타	1.7	1.6	1.4%	1.5	1.8%

주: 청년삶실태조사에서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는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분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분류, 대안학교 및 기타는 '기타'로 분류함.  
출처: 제1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3.

## 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받고 싶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해 물어본 결과, 비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 모두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주배경 청년은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은 어학(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등 요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이주배경 청년의 21.6%는 받고 싶은 교육이나 훈련이 없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청년삶실태조사, 2024).

〈표 3-23〉 희망 교육/훈련 영역: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

구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29.27	100	100	100	100
취업 및 창업 지원	78.72 <sup>1)</sup>	63.9 <sup>2)</sup>	66.7	63	61.9
언어 교육 <sup>3)</sup>	11.09	14.6	17.1	14.1	12.6
받고 싶지 않음	-	21.6	16.2	22.8	25.5

주: 1) '직업교육'(29.27%)과 '창업정보'(49.45%)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2) '고용상담'(12.1%), '직업훈련'(22.6%), '창업교육'(9.9%), '취업준비비용'(19.3%) 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3)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어교육에 대해 물어보았고, 청년삶실태조사는 한국어 외 외국어 교육에 대해 물어봄.

출처: 제2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9

## 다. 대학 비진학 사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이주배경 청년과 일반청년 모두 조기 취업 희망과 대학 진학의 필요성·흥미 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배경 청년(19~24세)은 조기 취업 희망(45%)과 대학 진학의 필요성·흥미 부족(33.1%)이 주요 이유였다(「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비이주배경 청년(19~34세)은 조기 취업 희망(40.4%), 대학 진학의 필요성·흥미 부족(31.1%), 부족한 성적(11.7%), 어려운 가정형편(10.9%)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청년삶실태조사, 2024).

〈표 3-24〉 대학 비진학 사유: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명, %)

구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청년삶실태조사			
	전체	순수취업	비진학 비취업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기 취업 희망	45	48.6	41.4	40.4	37.8	43	39.8
어려운 가정형편	5.4	5.8	5.0	10.9	7.4	11.6	13
대학 진학의 필요성·흥미 부족 <sup>1)</sup>	33.1	30.4	35.8	31.1	32.9	31.5	29.1
고교 미졸업	-	-	-	0.9	1.5	0.4	0.9
대학 불합격	3.3	3.6	2.9	-	-	-	-
부족한 성적	-	-	-	11.7	14.7	8.8	12.2
기타	13.3	11.6	15	5.1	5.8	4.7	4.9

주: 1) 대학 진학의 필요성·흥미 부족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과 청년삶실태조사의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와 '특별히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를 합침.

출처: 제1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4

## 2.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 가. 구직활동

지난 4주간 미취업자의 구직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4주간 이주배경 청년(19~24세)의 구직 경험률은 14.24%로 나타났다(「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비이주배경 청년(19~34세)의 지난 4주간 구직 경험률 역시 14%로 나타났다(청년삶실태조사, 2024).

〈표 3-25〉 구직 경험 유무(지난 4주):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

구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19-24세)	청년삶실태조사 (19-34세)
소계	100.0	100.0
구직 경험	14.24%	14

출처: 제2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3

## 나. 종사상 지위

이주배경 청년과 대한민국 청년과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주배경 청년(19~24세) 중 임시근로자(45.1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28.16%)에 불과했다(「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19~34세)은 상용근로자(70.7%)가 가장 많았다(청년삶실태조사, 2024). 비록 초기 청년(19-24세)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43.3%이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평균보다 높다. 불안정 고용 형태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비율 역시 이주배경 청년(65.51%)이 일반 초기 청년(50.2%)보다 약 15% 높게 나타나, 이주배경 청년이 처한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9~24세 비이주배경 청년 역시 임시근로자 비중(36.6%)이 높지만, 이는 대학 재학 또는 노동시장 초기 진입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26〉 종사상 지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명, %)

구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9-24세)	청년삶실태조사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00.0	100	100	100	100
상용근로자	28.16	70.7	43.3	77.3	79.4
임시근로자	45.11	14.3	36.6	10.0	6.2
일용근로자	20.4	5.8	13.6	4.6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1	2.9	2.4	2.6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2	5.6	3.0	4.8	7.7
무급가족 종사자	2.59	0.8	1.1	0.7	0.7

주: 청년삶실태조사에서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는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분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분류, 대안학교 및 기타는 '기타'로 분류함.  
출처: 제2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1

### 다. 월평균 임금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이주배경 청년의 소득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안에서 양극화된 특징이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평균 소득은 약 116만 원(「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으로, 같은 시기 비이주배경 청년(19~24세)의 평균 소득인 161만 원(청년삶실태조사, 2024)보다 약 45만 원 낮았다(그림 3-16) 참고).

〈표 3-27〉 월평균 임금: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단위: 명,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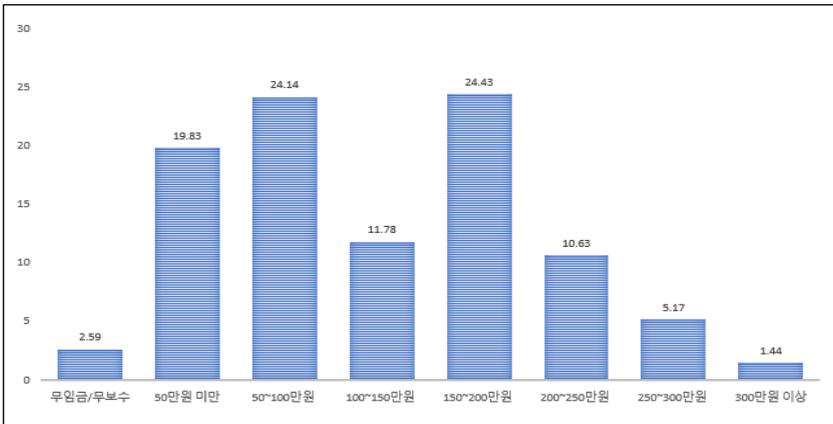
연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년삶실태조사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2024		266	170만 원	274만 원	311만 원
2022	116.3만 원	251	161만 원	258만 원	302만 원

주: 청년삶실태조사 값은 세금 공제 전 월 소득  
출처: 제1절과 2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삶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의 소득 격차는 아래 [그림 3-16]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년의 소득 분포는 저임금 구간인 50~100만 원(24.14%)과 50만원 미만(19.83%) 그리고 평균 소득 수준인 150~200만 원(24.43%)에 몰려 있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또래 평균 수준의 소득을 얻는 집단도 있지만, 그보다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6] 이주배경 초기 청년(19~24세)의 월평균 임금

(단위: 명)



출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원자료 저자 분석

### 3. 청년정책의 미스매치(mismatch): 수요와 현실의 괴리

비이주배경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청년정책은 주거 정책(45.7%), 일자리 정책 (33.5%), 복지 및 문화 정책 (14.1%), 교육 정책(5.5%), 참여 및 권리 정책(1.2%) 순으로 나타났다(〈표 3-28〉 참조). 흥미로운 점은 청년의 초기-중기-후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24세 청년 초기는 당면 과제인 일자리(47.1%)를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지만, 25세~29세 집단부터는 주거(51.3%) 문제가 일자리(31.1%)를 압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정책 수요는 ‘초기-일자리’에서 ‘중/후기-주거’로 진화하는 뚜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3-28〉 비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 지원

(단위: %)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교육 정책	복지·문화 정책	참여 및 권리 정책
전체	33.5	45.7	5.5	14.1	1.2
19-24세	47.1	28.5	9.6	13.8	1.0
25-29세	31.1	51.3	2.8	13.5	1.2
30-34세	22.6	56.7	4.3	15.1	1.3

출처: 제1절과 2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청년살실태조사,” 정세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6.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수요를 직접 측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통해 그 괴리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주배경 청년에게 있어 교육 정책 인지도는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학자금대출은 초기 청년 집단 내에서 90%가 넘는 높은 인지율을 보이지만, 전체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다. 특히 학교를 떠난 순수근로 집단과 비진학·비근로 집단에서는 해당 정책 인지율이 60~70%대로 하락하며 정책 정보의 단절이 뚜렷했다. 결국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일자리, 주거) 정보는 얻지 못한 채, 더 이상 자신에게 유효하지 않은 정책(교육) 정보에만 익숙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인지도의 차이는 정책의 실제 활용으로도 이어졌다. 순수진학 및 진학·근로 집단은 높은 인지율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순수근로 및 비진학·비근로 집단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핵심 일자리 사업의 이용률이 기대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정책의 필요성과 실

제 활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자산형성 사업은 비교적 높은 참여율과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준비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정보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핵심 정책(일자리, 주거)의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은 성공적인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주기 전환에 맞춰 정책 정보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 3-17]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청년정책별 인지도 - 이용 경험 매트릭스

(단위: %)

		정책인지도			
		낮음	중간	높음	
이용 경험률	높음		<b>청년희망적금</b> 인지도: 59.6% 이용경험: 20.5% 격차: 39.1%p	<b>국가장학금</b> 인지도: 88.9% 이용경험: 87.7% 격차: 1.2%p	<b>학자금대출</b> 인지도: 87.4% 이용경험: 21.2% 격차: 66.2%p
	중간	<b>국민취업 지원제도</b> 인지도: 17.2% 이용경험: 16.2% 격차: 1.0%p	<b>국민내일 배움카드</b> 인지도: 35.2% 이용경험: 19.8% 격차: 15.4%p	<b>청년내일 제용공제</b> 인지도: 35.9% 이용경험: 10.3% 격차: 25.6%p	<b>청년구직 활동지원금</b> 인지도: 39.4% 이용경험: 10.3% 격차: 29.1%p
	낮음	<b>청년취업 아카데미</b> 인지도: 17.0% 이용경험: 6.4% 격차: 10.6%p	<b>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b> 인지도: 18.1% 이용경험: 6.0% 격차: 12.1%p	<b>청년저축계좌</b> 인지도: 37.5% 이용경험: 7.1% 격차: 30.4%p	<b>청년행복주택</b> 인지도: 42.5% 이용경험: 5.8% 격차: 36.7%p
			<b>청년창업 사관학교</b> 인지도: 9.7% 이용경험: 9.2% 격차: 0.5%p	<b>청년전용 창업기금사업</b> 인지도: 25.7% 이용경험: 3.5% 격차: 22.2%p	<b>청년희망 키움통장</b> 인지도: 48.9% 이용경험: 4.5% 격차: 44.4%p

출처: 1절의 <표 3-12> 과 <표 3-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4장

### 이주배경 종후기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와 경험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제4절 청년정책 경험과 정책 요구

제5절 소결



## 제 4 장

# 이주배경 중후기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 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는 면접조사를 통해 기존 통계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주배경 중후기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특히 국내 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이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각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청년정책 인지도와 실제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참여자 선정 기준 및 과정

이번 장의 분석 대상인 이주배경 청년은 정확한 모집단 파악이 어려워,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특히, 이들을 위한 특정 전달체계나 전담 기관이 부재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자, 현장 전문가, 실무자, 다문화 관련 센터, 학교 교사 등의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표집을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 선별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우선,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참여자 다수가 한국 국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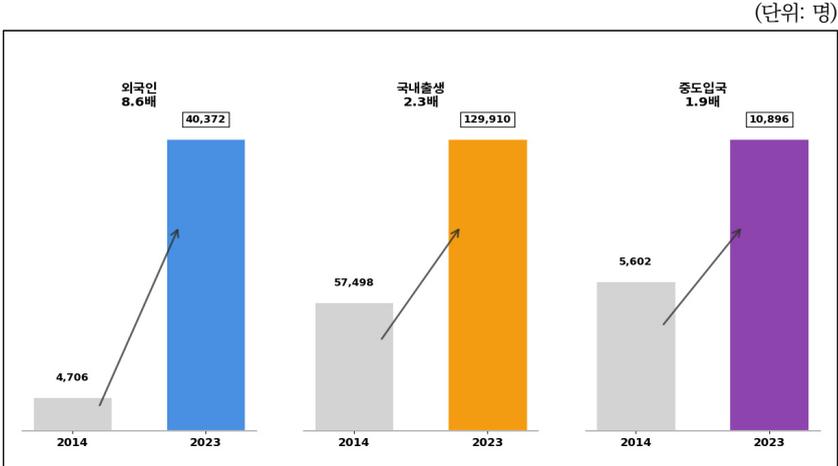
셋째,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중 다양한 국면을 포괄하기 위해 취업자, 재취업 준비자, (재)진학 준비자 등 상이한 경로에 있는 청년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자 했다.

넷째,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검정고시 포함)을 이수한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 국내에서 최소 1년 이상 수학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을 모두 포함하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도입국 청년을 의도적으로 많이 표집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중도입국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그림 4-1] 참조, 약 1.9배 증가), 이들은 국내 출생 집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 과업(학교 적응, 체류자격 변경, 귀화 등)을 경험한다. 이는 곧 향후 이행 과정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기에,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성별, 지역 등이 표집 시 고려되었다. 성별은 가능한 한 남녀 5:5 비율을 균등하게 맞추려 노력했으며, 지역은 특정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모집했다.

[그림 4-1] 10년간 이주배경 학생 구성별 증가



출처: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관계부처 합동, 2023.09., p.3.,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15&s=moe&fileSeq=7e6b7df22ee6b612f7e746ad96c9157b>

## 가.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4-1>과 같다. 국내출생 이주배경 청년은 6명,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은 8명 모집하였다. 여성은 6명, 남성은 8명을 모집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도, 충남, 대전,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혼인 상태의 경우, 참여자 기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혼이었다. 부모님 출신국은 일본,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남미, 몽골 등 매우 다양하였다. 학력은 중퇴, 고졸(검정고시 포함), 대졸(초대졸 포함), 대학원 졸 등 다양하였다. 연구 참여자 국적은 대부분 한국이었으며, 중도 입국자 중 일부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한 명은 이중국적자였다. 종사상 지위는 학생, 군복무자,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매우 다양하였다.

〈표 4-1〉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ID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	부모님 출신국 <sup>1)</sup>		학력	국적	종사상 지위	한국 입국 년도
						부	모				
국내 출생 (6명)	A1	여	28	서울	미혼	한국	베트남 (귀화)	대졸	한국	상용근로자, 아르바이트	-
	A2	남	24	경기도	미혼	방글라데시 (귀화)	한국	고졸 (검정고시)	한국	군복무	-
	A3	남	27	경기도	미혼	한국	태국	대학 졸업 예정	한국	학생, 상용근로자	-
	A4	여	26	제주	미혼	한국	일본	대졸	한국 (이중국적)	구직자, 아르바이트	-
	A5	여	26	제주	미혼	일본	한국	대학원 재	한국	대학원생, 프리랜서	-
	A6	여	30	제주	미혼	일본	한국	대학원 재	한국	대학원생, 프리랜서	-
중도 입국 (8명)	B1	남	29	대전	미혼	한국	우즈베키스탄 (귀화)	중퇴 (검정고시)	한국 (귀화)	상용근로자	2006
	B2	여	30	경기도	기혼	한국	베트남	고졸	한국 (귀화)	자영업자	2012
	B3	남	24	서울	미혼	중국	중국 (귀화)	대졸	중국 (영주권)	상용근로자	2017
	B4	여	28	경기도	미혼	한국	페루 (귀화)	대졸	한국 (이중국적)	상용근로자	2010

	ID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	부모님 출신국 <sup>1)</sup>		학력	국적	종사상 지위	한국 입국 년도
						부	모				
	B5	남	27	경기도	미혼	몽골 / 한국	몽골 (귀화)	대학원 졸	한국 (귀화)	프리랜서	2010
	B6	남	25	경기도	미혼	한국	베트남	대학 재	한국 (귀화)	대학생, 아르바이트	2017
	B7	남	25	충남	미혼	-	필리핀 (귀화)	초대졸	필리핀 (구직 비자, D-10)	취업준비생 (편입 준비)	2013
	B8	남	27	경기도	미혼	몽골 / 한국	몽골 (귀화)	고졸 (검정고시)	한국 (귀화)	상용근로자	2010

주 1) 국내 출생은 친부모(생부, 생모)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함.

중도입국자는 이주 당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인 친부모(한국으로 이주한 쪽)의 국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저자 작성

## 2. 조사 방법 및 절차

인터뷰는 원내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주배경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반구조화 심층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유도했으며, 각 인터뷰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도 진행했다. 연구진이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고 면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했다. 면담 내용은 연구진이 녹음한 후 연구 보조원이 전사했으며, 모든 개인정보와 연구 자료는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었다.

## 3. 주요 조사 항목

면담 조사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며 공통으로 겪는 경험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 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질문 내용을 일부 다르게 구성했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이주배경 청년 관련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전문가들은 연구 주제와의 정합성, 질문의 난이도 및 순서 등 전체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면담 조사 내용은 개인적 배경, 학교생활(고등학교·대학교), 노동시장 이행 경험, 청년정책 인지 및 요구 등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면담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개인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사항 (성별, 나이, 거주지역, 하는 일, 국적 등)</li> <li>- 가족 간의 관계, 부모님 결혼 과정,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체성</li> <li>- (중도입국) 한국인 부모와의 관계, 국적 취득 계획,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과 도움, 한국어 수준 등</li> </ul>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교육환경, 입시 준비 과정, 선생님과의 관계 등</li> <li>- 진로/진학 과정에서 어려운 점</li> <li>- 고등학교 내 진로 지원 프로그램</li> <li>- (중도입국) 체류자격의 영향</li> </ul>
대학 생활 (재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 등</li> <li>- 국가장학금 이용 경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경험 등</li> <li>- 졸업 후 진로 계획</li> </ul>
노동시장 이행 (졸업/수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li> <li>- 취업 정보, 직업훈련, 자격증 시험 등</li> <li>- 직장 내에서 이주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li> <li>- 이직 및 재취업 경험과 이유</li> <li>- (중도입국) 체류자격의 영향</li> </ul>
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 수준 및 기타 사내 복지</li> <li>- 직장 생활 만족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대처 방법 등</li> <li>-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li> <li>- 배치된 부서 및 업무</li> <li>- 미래 계획, 해외 취업, 직업 전망 등</li> </ul>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센터 접근 및 이용 경험</li> <li>- 청년정책 이용 경험 및 욕구 탐색</li> <li>- 기타 정책 욕구</li> </ul>

출처: 저자 작성

##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와 경험

### 1. 미생: 불완전한 노동시장 경험

#### 가. 저숙련 노동시장 내 잦은 이동

일부 연구 참여자는 검정고시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잦은 이직을 경험하며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 B1씨는 중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외식업,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특히, 중식당에서는 차별과 무시를 겪고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여러 직장을 거쳐 현재 처음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역시 중도입국하여 다문화 특성화고를 졸업한 B2씨는 제조업, 미용업(호주), 병원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현재 전문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실업급여와 국비 지원을 활용해 네일아트샵을 창업했으나 건물 경매로 인해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관광 가이드, 통역 등으로 끊임없이 전문성을 확장하며 경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유년기를 해외에서 보내고 검정고시로 중등교육을 마친 A2씨 역시 잦은 이직을 경험했다. 귀화한 아버지의 소개로 첫 일을 시작한 후 약 7년간 5곳 이상의 직장을 옮겨 다녔으며, 외식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려 노력하였다.

## 나.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으로 회귀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후, 다시 고등교육으로 회귀하거나 진학·편입을 준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회귀의 동기는 출생 배경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중도입국 청년은 주로 체류자격의 한계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선택하였다. 중도입국 청년 B6과 B7은 다문화 특성 화고를 졸업 후 바로 취직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시 대학교에 진학 또는 편입하였다. B6 씨는 대학 합격에도 불구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 3년간 직장 생활을 먼저 했다. 하지만 직원의 80% 이상이 외국인인 환경에서 한국어 실력이 퇴보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건강까지 악화되자, “좀 괜찮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그는 대학에 재학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B7 씨는 전문대 졸업 후 용접공으로 일했으나, 동료의 사고사 이후 충격을 받고 다른 분야로 전환을 모색했다. 그러나 원하는 분야(E-7-1 비자 필요)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위가 필수라는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 현재 학사 편입을 준비 중이다. 그는 D-10 비자 만료 전에 편입하지 못하면 “그냥 출국하는 겁니다”라며,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중도입국한 B5 씨 역시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전공과 어학 능력을 살려 국회의원 보좌관, 국제기구 등에 지원했으나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그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고, 재학 중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졸업 후에도 고등 교육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고용 불안과 조직 적응의 어려움을 겪자, 현재는 해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한편, 국내출생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학문적 성취나 전문성 심화를 위해 진학을 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A5 씨는 사이버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대학 생활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소외감과 사이버대학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느끼고 더 높은 학력 취득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A6 씨는 대학 졸업 후 계약직·비정규직을 거치며 자신의 이주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던 중, 전문성 심화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 2. 완생: 정규직으로의 진입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하는 경향을 보였다. A3은 대학교 동아리 공지를 보고 알게 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정보보호협회 시큐리티 아카데미<sup>16)</sup>를 통해 졸업 전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A4씨는 간호대학 졸업 후 관련 병원에 취업하는 표준적인 전문직 경로를 따랐으며, 이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A1씨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권유로 베트남어 전공 및 복수 학위를 취득하고, 지자체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경력을 시작했다. 비록 초기 근무 환경은 열악했지만, 이후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며 자신의 이중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들은 자신의 언어 능력이나 출신 배경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B3 씨는 한-중 교류회에서 만난 인연을 통해 현재 회사에 입사했으며, 사내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며 업무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다. B4 씨는 초기 불안정한 직장을 경험했

16) 이 프로그램은 정보보호 산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인재 선발·교육·채용 연계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지만, 이후 모국어(스페인어)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프리랜서 활동과 정규직 무역 업무를 병행하며 경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B8 씨 역시 외국어 능력과 이주배경을 살려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더 나은 직업(항공사 승무원)으로의 이직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 1. 가족적 요인

##### 가. 촉진 요인

###### 1) 부모의 지원과 정보력

부모의 정보력과 지지는 비다문화가정에서 보듯이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일 경우,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녀에게 실질적인 진로 및 진학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다. A3씨와 B4씨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의 조언이 고등학교 계열 선택 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학과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첫 노동시장 경험(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다수의 참여자들이 첫 일자리를 부모의 지인을 통해 얻었다. B1 씨는 아버지의 소개로 부친의 직장에서, A2 씨는 아버지 지인의 가게에서, B3 씨는 어머니 친구의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부모의 도움은 주로 첫 일자리에 한정되었고, 이후에는 대부분 온라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였다.

## 나. 저해 요인

### 1) '알아서 해야 하는' 진로: 가족 내 지원체계의 공백

인터뷰에 참여한 상당수의 이주배경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이를 “방임” 혹은 “무관심”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족 내 지원체계의 공백을 의미한다.

B6 씨는 당시의 좌절감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다른 친구들처럼 지지를 받거나 하다못해 상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울고 불며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아, 나 잘 모른다’ 그걸로 끝났어요. ‘네가 알아서 해도 항상 잘하니까’…” 그는 나중에야 어머니가 주변에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지인 대부분이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이라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 자신의 정보 부족이나 제한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녀 지원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 모두 생계 활동에 집중해야 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혹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재혼 가정 등 가족 구조의 특성 역시 자녀의 진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이 되었다.

## 2. 사회·문화적 요인

### 가. 촉진 요인

#### 1) 언어 자본: 이중언어 능력 활용

이주배경 청년의 이중언어 능력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인 A1 씨는 높은 수준의 베트남어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직장(해외영업팀)에 채용될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어 학위를 통해 습득한 언어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베트남 현지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주배경 청년의 언어 자본이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과 경쟁하며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이자 이중국적자인 B4 씨는 언어 자본을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사례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스페인어권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온전히 스페인어만으로 우승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직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또 다른 중도입국 청년인 B5 씨의 사례는 호텔업이라는 특정 산업에서 제2외국어 능력의 희소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몽골어 구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구사 인력이 적어 몽골 고객 응대 시 결정적인 차별점이 되었다. 이는 언어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의 희소성이 특정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 2) 업계 내에서 '관계의 힘': 전문 네트워크의 활용

중도입국 청년 B4 씨의 사례는 업계 내에서 구축한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성공적인 경력 전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첫 직장 근무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폭넓은 인맥을 형성했던 그녀는 퇴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스페인어 능통자를 찾던 여러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통역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무역업계 내 인맥을 더욱 넓혔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시 한번 더 좋은 곳으로 취업 제안을 받아 경력을 이어갔다. 이는 그녀가 네트워킹을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 적극적인 경력 개발 전략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었다.

## 3) 동족 네트워크의 지원: 정보 접근과 적응의 발판

중도입국 청년인 B3 씨의 사례는 동족 네트워크가 구직 과정뿐만 아니라 직장 적응에서도 결정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대학 시절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같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쉽게 제안받았고, 졸업 후에는 중국 관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사적 교류회에 참석했다가 현재 회사 대표를 만나 채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공식적인 채용 시장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단순히 원하는 직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표와 동료 대부분이 중국 유학 경험이 있어 업무 중 어려운 전문 용어를 중국어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등, 언어적·문화적으로 포용적인 환경이 그의 빠른 적응과 높은 직무 만족도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나. 저해 요인

### 1) '외부인'이라는 꼬리표: 고정관념과 언어, 외모의 굴레

이주배경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출신 국가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첫째,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B3 씨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특정 직군의 아르바이트 자리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정리 정돈이 안 된다”라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주변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일상화된 타자화 역시 힘든 사회·문화적 문제이다. 출생 배경(국내/중도입국)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외모가 한국 주류 사회와 다르다고 인식될 경우 이들은 끊임없이 외부인으로 취급당한다. 중도입국 청년 B1 씨는 이름과 외모 때문에 한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이 맞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보통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응대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내면화된 시선과 자기검열의 문제이다. 국내 출생 청년 A2 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외모로 인한 다름을 강하게 인식하며 성장했고(“왜 다르게 태어났지”),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취업 면접에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는 겉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감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온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그가 자신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과 직종을 찾게 된 배경이 되었다.

넷째, 사적 영역에서 한국인 네트워크 부재는 노동시장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아직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친한 한국인 친구나 멘토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이주배경 친구들과 나누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다문화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주변에 비슷한 배경의 친구는 많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이나 직장 문화를 알려줄 한국인 동료나 친구는 부족했다. 특히 공장 등 이주민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일한 경우, 한국 주류 사회와의 접점이 더욱 줄어들면서 문화적·정보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참여자들은 주변 한국인 친구들이 더 수월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 인적 네트워크가 노동시장 적응에 결정적인 자산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 2) 보이지 않는 벽들: 사회적 자본의 결핍과 구조적 차별

이주배경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장벽에 부딪혔다. 첫째, 언어 능력의 양면성과 직무 고착화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창한 이중언어 능력은 분명 취업에 유리한 자산이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언어 관련 직무에만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B4 씨는 자신의 스페인어 능력이 오히려 다른 업무나 부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뛰어난 언어 능력이 경력 확장의 기회가 아닌 경력 경로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도입국 청년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핵심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우선, 구직 기회를 박탈당한다. B4 씨는 면접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담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요구하는 일자리에 “도전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그녀가 한국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

로를 한정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소통의 실패와 갈등을 유발했다. B6 씨는 공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상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동료와 오해가 쌓였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그가 한국을 떠나 출신국에 있는 한국 회사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실력이 요구될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 차별과 괴롭힘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B2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 자신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이 서툴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이주민일수록 부당한 시선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하며, 언어 능력이 직장 내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 3) 모국어보다 중요한 ‘영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요구

이주배경 청년은 자신의 모국어(부모님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능력이 고등교육 진학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 A1 씨는 희망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며 학창 시절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다. 심지어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복수 학위까지 취득했음에도, “결국에는 영어나 중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은 모국어(스페인어)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B4 씨의 경험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인 아버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구직 과정에서는 “스페인어 위주로 찾아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영어를 물어보더라고요”라

며 영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비록 스페인어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했지만, 현재 직장에서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되기에, 이는 그녀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이주배경 청년의 이중언어 능력이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이 되기 어려우며, 영어라는 보편적인 언어 자본 확보가 되어야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제도적 요인

#### 가. 촉진 요인

##### 1) 학교의 제도적 지원과 교사의 개인적 헌신

학교 유형과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 및 진로 준비에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안학교 및 특성화고에 진학한 중도입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경험했다. 이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진학·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과 후 수업이나 보충수업을 제공받았다. 또한, 대학·학과 선택, 지원 방법 안내와 더불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제도적 지원 정보까지 얻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이주배경 학생의 특수한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한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정보력과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학생 본인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B5 씨는 담임교사로부터 개인적인 보충수업과 긴밀한 상담을 받으며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담임교사는 복잡한 입시 제도를 직접 공부하여, 당시 한국 국적이 없던 그에게 외국인 유학

생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길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성공적인 이행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교의 특별전형<sup>17)</sup>

대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은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대학 입시에 있어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 이주배경 청년은 이 특별전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 전형이 매력적인 이유로는 낮은 경쟁률 때문이었다. 해당 전형에 지원했던 A6 씨는 “제가 다닐 때는 일반전형과 다문화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일반전형의 경쟁률이 약 70대 1이었다면 다문화전형은 4대 1 수준이었다”며, 이 점이 지원의 주된 동기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낮은 경쟁률이 곧 쉬운 합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A1 씨 역시 다문화전형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하여 정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했는데, 그는 다문화 특별전형이 다른 전형보다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정은 못 해요. 제가 태어난 환경이나 가진 조건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건 사실 이니까요”라고 말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특별전형을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 혜택을 통해 합격하지 못한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즉, 다문화 특별전형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으로 인지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음을 말한다.

17) 보통 다문화 전형이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 안에 포함되어 있음. 즉,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농어촌 특별전형 등과 함께 기회균등 선발 전형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고예나, 2024)

### 3)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역시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제주도의 「더큰내일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매월 교육 수당을 지급하며 체계적인 취·창업 훈련을 제공한다(제주더큰내일센터, 2025). “다시는 서비스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A5 씨는 사직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청년이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해당 과정은 취업(인턴십)과 창업 교육을 병행 지원하는 구조로, 임 씨는 두 과정을 모두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점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예비창업패키지에 지원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 4) 공공기관의 다문화가정 자녀 가점 제도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 가점 제도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 국내 출생 참여자인 A5 씨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실제로 가산점 제도로 인해 합격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제도는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기입할 칸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5) 한국 국적의 힘!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은 보통 청소년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성인기에는 한국인 신분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이들은 한국 국적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제조업에 근무하는 B6 씨

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와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일 예로, 그는 “직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도 한국 국적이자 실수할 때와 E-9 비자(비전문취업)와 같이 근로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실수할 때 사장의 행동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며, 국적에 대한 차이, 즉 그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나. 저해 요인

### 1) 지원체계 전환기의 단절과 정체성 재정립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년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이슈는 학령기 이후 가족센터 등 기존의 지원체계와의 연결이 단절되고, 이것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 전환기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흥미롭게도,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 24세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이용 가능한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A1 씨는 “초중고 때는 지원 정책이 조금 있는데, 청년 시기에는 완전히 없는 것 같다”며 체감하는 정책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단절의 배경에는 성인기 진입에 따른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5 씨는 “내가 다문화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은 여러 함의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지원 체계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원받는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청년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려는 자연스러운 이행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정 집단을 범으로 명시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가진 딜레마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범주화로 인한 낙인과 경계 짓기를 유

발하여,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공백과 정체성 재정립 과정, 그리고 범주화된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주배경 청년은 성인이 되면 관련 지원이 소멸한다고 인식하고 비이주배경 청년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 2) 입시 정보 부족이 초래한 기회의 상실

앞서 언급한 대학교의 다문화가족 특별전형과 같은 입시 제도에 대해, 일부 청년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 A3 씨는 인터뷰 과정에서야 비로소 해당 전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는 “다문화 전형이 있는 줄 알았다면 도전해 더 높은 대학을 지망했을 텐데, 몰랐던 것이 아쉽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정보의 공백은 중도입국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문화 특성화고를 졸업한 B2 씨는 재학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전형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학교 교사들조차 그녀의 변경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입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선생님들도 우리처럼 배우는 거지”라고 회상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조차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입시 정보의 부족은 이주배경 청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은 교육 경로로 진입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3) 국적이 가르는 진로의 경계

국적과 체류자격은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선택을 제약하였다. 즉, 국적 문제가 곧 진로의 경계선이 되었다. 한 중도입국 청년인 B5 씨는 구직 과정에서 유학생(D계열) 비자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힌 후, 결국 귀화를 위한 경로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또 다른 사례는 이러한 제약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도입국 청년 B7 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에게 법적 입양되지 못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의 비자(E-7-3)로는 직업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다. 그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4년제 학사 편입을 통해 E-7-1 비자가 나오는 전공으로 진학해야 구직 비자(D-10)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그는 다른 비자(E-7-1)를 받기 위해 4년제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위해 대학교 편입을 준비 중이다.

### 4) 가족센터의 기능적 한계: 진학 지원 편중과 노동시장 정보 부재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과 효용성은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주기 중 특정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국내출생 청년에게는 유아동기가, 중도입국 청년에게는 한국 정착 초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 예를 들어, B6 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다문화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는 센터가 아닌 학교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했다. 이처럼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본격 이행하는 청년기에는 센터의 역할이 거의 부재하다. 이는 센터의 기능이 주로 초기 정착과 학령기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작 이들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청년기의 취업 지원 기능과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 제4절 청년정책 경험과 정책 요구

### 1. 청년정책 접근과 이용 경험

#### 가. 접근 및 이용 경로

이주배경 청년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정책에 접근 및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족, 친구와 지인 그리고 회사 동료 등을 통해 정책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안내를 통해 알게 되거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더욱 알게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 나. 정책 이용 경험

##### 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책으로, 주로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통해 수혜가 이루어졌다.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역시 일부 청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는 II유형이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대학이 ‘다문화가정’을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덕분이었다. 실제로 A6 씨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 그 유형으로 아예 해서 낸 거라서... 성적만 넘으면 무리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라고 회고하며, 이러한 대학 연계 전형을 통한 수혜 경험을 밝혔다.

## 2) 청년 자산형성 사업

이주배경 청년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등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가입 경험도 두루 있었다. 심지어는 군복무중인 A2 씨 역시 가입했는데, “훈련소에서 다 설명을 해 주고 다 들게 해가지고 (중략) 강제는 아닌데 안 하면 바보인 거죠. 그 적금 들어 가지고 두 배로 돌려준다는데 누가 안 들겠어요.”라며 가입 이유를 설명하였다.

##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 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양날의 검과 같다. 긍정적으로는,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돕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었다. B4 씨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불안했음에도 “내일채움공제만 바라보면서 버텼다”고 회고했는데, 이는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청년들을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 환경에 머무르게 하는 장애물로도 작용했다. 공제금 수령을 위해 이직이나 퇴사를 미루고 부당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는 청년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이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4)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이주배경 청년의 창업에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B2 씨는 이 제도를 통해 네일아트 국비 과정을 이수했는데, 고가의 수강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다. 이처럼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준 정책 지원 덕분에 그녀는 전문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네일샵을 창업하여 3년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5) 지자체 사업 1 - 정장 대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A4 씨는 취업 면접을 앞두고 청년센터에서 정장을 빌린 경험이 있다.

다만, 귀화 전 B5 씨는 당시 D-2 비자 소지자로, A 기업의 인턴 면접을 앞두고 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센터로부터 “죄송한데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옆에 (한국인) 친구도 어이가 없어서 그때도 그 친구가 저한테 ‘너가 빨리 귀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며” 정장을 빌려주었다.

#### 6) 지자체 사업 2 - 토익 비용 환급

앞서 정장 대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B5 씨는 귀화 후 지자체로부터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았다.

#### 7) 지자체 사업 3 - 취·창업 지원

A5 씨는 지역 내 위치한 청년센터를 자주 방문하면서, 본인의 관심사

인 창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년 대표의 강연 및 멘토링 교육 등을 적극 참여하였다. 인터뷰 당시 창업 테스트도 참여하며, 커리어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미래 직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 8) 유관 청년정책 접근과 이용 경험

A3 씨는 대학교 동아리 단톡방 공지를 통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주관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sup>18)</sup>를 수료한 결과,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매달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실무 중심의 전문 기술과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취득비 지원)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업 인턴십은 그를 실제 채용으로 이끈 결정적인 ‘취업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은 취준 기간이 1년도 넘어가는데, 저는 4개월 빠르게 하고 취업한 느낌”이라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는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실질적인 일 경험 연계가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다.

18) 해당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으로,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및 기업 인턴십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

## 2.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

### 가.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이용 개선 방안

#### 1) 청년정책 멘토링: 정책 활용 능력 강화

이주배경 청년들은 단순히 정책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복잡한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용자 중심의 멘토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 중도입국 청년, 또는 특정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 한국 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책 접근 자체가 큰 장벽이었다. A2 씨는 이러한 청년들이 일반 가정 출신과의 정보 격차가 크다며, “그런 가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네들이 성장 학교를 다니거나 했을 때 한국인 일반적인 가정이라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그거(청년정책)를 좀 멘토링 해 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개인 맞춤형 코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이들에게는 복잡한 정책 설명서를 해석해주고 신청 과정을 함께 밟아줄 정책 네비게이터 역할이 절실하다.

#### 2)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정책 정보 접근에 있어 언어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들은 정책 용어나 전문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웹사이트의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희망했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인 A1 씨도 이에 동의하며 “중도 입국자 친구들이 많아... 한국어에 서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사례를 들며,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홈페이지 역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나. 일자리 분야

### 1) 기울어진 출발선: 노동시장 기본 지식 함양

이주배경 청년들은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직 기술 자체가 부족하여 출발선이 불리하다고 느꼈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외국 태생 부모님과 자란 A2 씨는 “어떻게 이 노동시장이 굴러가는지, 시스템이 뭔지, 한국 시장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도가 너무 없고,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라고 토로하며, 일반 청년과의 정보 격차를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전반적인 교육을 필요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식 이력서 작성법, 기업 문화, 면접 태도 등 기본적인 구직 준비 과정을 알려주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6 씨 역시 “이주 배경 청년들한테도 그런 취업이나 창업 특강이 있으면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 한국과 출신국을 잇는 ‘인적 가교’

중도입국 청년들은 자신의 이중언어·문화 배경을 활용하여, 출신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이들은 현지 직원과 한국 관리자 사이의 ‘인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참여자인 A5 씨는 “한국 입장에서든 윈윈(win-win)인 상황이니깐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다”고 역설했다. 이는 기존의 국내 취업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 청년의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해외 취업 지원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안이다.

### 3) 특정 분야/직군의 전문 인재 양성

이주배경 청년은 본인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직업군이나 분야에서 다문화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들은 한국 청년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외국어 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법정 통역사와 같은 특정 분야 혹은 진국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4) 공공부문 채용 기회 확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공공부문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일부 이주민 밀집 지역의 은행에서는 외국인 고객 응대를 위해 특정 언어에 능통한 인재를 별도로 채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주배경 청년은 자신들의 언어적 역량과 문화적 배경을 십분 살린 특화된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현재 일부 지자체<sup>19)</sup>에서는 지역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족 출신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다만, 채용된 이들 대부분은 지방임기제 공무원이고, 결혼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대상을 결혼 이주민에서 다문화가정 2세인 이주배경 청년으로 확장하고, 중앙 공무원 채용제도에 다문화 전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현재 국가 공무원 특별 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전형 등이 있다.

---

19) 경남 진주시, 전남 함평군, 전남도 등 (고익수, 2024.3.29.; 배병일, 2022.11.01)

### 5) 고용 환경 개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

고용주 대상의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용주들이 비자 관련 정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용주들이 영주권 등 비자와 체류자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채용을 주저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론했다.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B7 씨조차 매번 구직 시 비자 관련 행정 절차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좌절감과 피로를 느꼈다. 심지어 설명을 해도 불합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았다.

다음으로, 낮은 다문화 수용성도 문제로 꼽혔다. 비록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직장 동료 및 상사, 특히 기성세대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때문에 조직 문화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과 적응을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더불어, 최소한 영주권 등 비자와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6) 직업훈련 후 창업/취업 연계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B2 씨는 교육 훈련과 실제 창업 지원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한 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보증금, 월세)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해야 했던 경험은,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성과(취업/창업)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후속 지원 시스템이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 다. 교육 분야

### 1) 직무 및 학문 중심의 고급 한국어 교육 강화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 모두 한국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고급 수준의 한국어 대화가 여전히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일 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도입국 청년 B6씨는 “지금까지도 말은 잘할 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한국어 말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학교를 다녔고, 현재 한국 국적이 있는 B4 씨 역시 “저는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가끔 서툴고 그렇고 그리고 문법은 잘못 하거든요”라며 정확한 글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실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지만, 일상 회화를 넘어선 고급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원은 극히 부족했다. 일 예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대학생 B6 씨는 과제 리포트 작성이 어려워 교내 센터를 찾았으나, 해당 한국어 교정 서비스는 교환학생 및 유학생만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4 씨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를 알아보았지만, 그곳은 주로 정착 초기 결혼이주민 대상의 기초 회화 과정만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고등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와 직장 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공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 2) 다문화가정 특별 전형이 아닌 ‘중도입국 특별전형’ 마련

이주배경 청년은 대학 입시에서 현행 다문화가정 자녀 모두를 위한 특별전형보다는 중도입국 청년을 위한 특별 전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인 B6씨는 “다문화가정 특별 전형이 없었어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의 적응이 서툰 중도입국 청년들을 위한 별도 전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특별 전형이 모든 이주배경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라. 복지·문화 분야

### 1)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개편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 B2 씨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심리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출신국의 문화적 편견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지적처럼, 심리상담을 예민한 문제로 여기거나 낮설게 보는 문화적 배경은 정책 이용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많은 이주배경 청년들이 정보 부족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문화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 문턱을 넘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책 확대와 더불어, 찾아가는 상담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문화적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상위 과정 진학 준비를 위한 생계 지원

이주배경 청년은 대학교 편입 전이나, 대학교 혹은 대학원 진학 전과 같이 본격적인 진학 준비 단계에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다시 고등교육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우, 상위 과정 진학을 준비하는 골든 타임에 오히려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진학 준비기간 동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국 국적이 없는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체류 자격(비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진학 준비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5절 소결

### 1. 연구 결과 요약

이번 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을 분석했다.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이행 과정은 매우 복잡·다양하며, 이들의 이행 경로와 경험은 미생(불완전한 노동시장 경험)과 완생(정규직으로의 진입)으로 구분된다. 미생의 일부는 고졸 혹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전전하였다. 미생의 또 다른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업 전망에 대한 한계가 뚜렷이 보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고등교육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완생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로, 일부는 같은 분야에서 이직 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이 종사하는 노동시장은 위계성과 다층적 배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구체적으로, 주류 동화형 노동시장, 주류 통

합형 노동시장, 주류 분절형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표 4-3〉 노동시장의 위계성과 다층적 배제

노동시장 유형	특징	인터뷰 참여자
주류 동화형 노동시장 (Mainstream-Assimilative Labour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가 이주배경과 무관</li> <li>- 한국인(비이주배경) 동료와 동일 기준으로 경쟁/적응 요구</li> <li>- 개인의 객관적 역량(기술, 자격, 학력 등)이 경력에 중요하게 작용</li> <li>-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직장 규범 및 네트워크 학습 요구</li> </ul>	A3, A4
주류 통합형 노동시장 (Mainstream-Integrative Labour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중심의 주류 조직 문화에 적응 및 상호작용 필요</li> <li>- 이주배경이 업무상 '자산' 또는 '강점'으로 활용되나, 역설적으로 특정 직무로 고착되거나 타 부서 이동/경력 확장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li> <li>-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직장 규범 및 네트워크 학습 요구</li> </ul>	A5, A6 A1, B3, B4, B5, B8
주류 분절형 노동시장 (Mainstream-Segmented Labour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신국) 동족 네트워크가 정보 교류 및 구(이)직에 핵심 역할</li> <li>- 직장 동료/고객 다수가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저숙련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등)임</li> <li>- 직장 내 한국어 사용 빈도가 낮아, 한국어 능력 유지 및 향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li> <li>- 한국인 혹은 한국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고립/배제 경험 가능성이 있음</li> <li>- (한국 국적 보유 시) 동일 직장 내 이주노동자 동료 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와 대우를 경험</li> </ul>	A2 B1, B2, B6, B7

주: 참여자가 여러 직장을 경험한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만약 특정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그 여러 직장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해서 분류함.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노동시장 유형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제기한다. 즉,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 참여가 한국 사회통합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각 노동시장 유형은 저마다 다른 기회와 제약이 있다. 주류 동화형 노동시장은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장을 제공했지만, 이 과정

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거나 이주배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비이주배경 청년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류 통합형 노동시장은 이주배경을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직무에 고착화되어 경력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 주류 분절형 노동시장은 동족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주류 사회와의 교류 단절, 한국어 능력 향상 저해, 나아가 사회적 고립 및 계도화(ghetto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 국적 보유자가 동일 직장 내 이주노동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는 현상은, 이 분절된 시장 내에서도 또 다른 위계와 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각 유형은 장단점을 가지며, 어떤 길이 개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한국 사회 전체의 통합에 더 긍정적인지에 대한 단순한 답은 없다.

다만, 주류 분절형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고착화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들은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제도적 기준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닐 수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류 사회와 유리된 삶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 결과는 단순히 이들이 생산인구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수준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의 통합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통합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공존과 통합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제도적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 자본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이들의 진학 및 진로 탐색을 뒷받침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방임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일 경우, 자녀들은 정보의 고립 속에서 이행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촉진 요인으로는 이중언어 능력, 업계 내 전문 네트워킹, 그리고 동족 네트워크의 지원 등이 꼽혔다. 반면, 저해 요인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며, 외모가 인종주의적 표식으로 작용하여 승진이나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러한 외부인이라는 꼬리표와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이들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데 큰 장벽이었다. 또한, 이들의 모국어 능력보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는 일부 청년들이 진로를 체념하거나 결혼 등을 도피처로 삼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학교의 제도적 지원과 교사의 개인적 헌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교의 특별전형,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한 직업교육 훈련, 공공기관의 다문화가정 자녀 가점 제도, 그리고 한국 국적 보유 등이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의 사각지대, 국적 및 체류자격(비자) 문제, 그리고 가족센터의 기능적 한계는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은 국내출생 청년이 겪지 않는 독특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적과 체류자격 문제는 이들의 진로 선택을 제약하는 결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하며,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입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 시, 어떤 청년들은 오히려 외국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 특례 입학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귀화를 미루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특정 비자로는 직업 선택이 극히 제한되어, 일부 청년들은 본래 희망과 무관하게 오직 비자 변경이나 귀화를 목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등, 이들의 진로가 제도적 제약에 종속되는 현실을 보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된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도 한국 국적이 없으면,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면 제한된 분야 혹은 직종만 지원하게 되는 등, 이행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왔다. 이는 국적이거나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년은 공적 채널이 아닌 사적 채널을 통해 청년 정책을 접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적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은 필연적으로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 해외 장기 체류 경험이 있는 청년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외국 태생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정보망에서 소외되어 정책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결국, 정책 정보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및 부모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결정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이주배경 청년일수록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더 쉽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책은 국가장학금이었고, 다음으로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었다. 지자체 사업으로는 정장 대여, 토익 비용 환급, 취·창업 지원이었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제안한 주요 청년정책은 <표 4-4>와 같이 크게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이용 개선,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정책 요구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자리 분야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청년정책이 이들의 핵심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모든 청년과 공유하는 보편적 과제와 더불어, 이주배경으로 인해 겪는 특수한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는 이러한 어려움의 이중적 구조를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4> 이주배경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li> <li>• 청년정책 멘토링: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li> </ul>
일자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기본 지식 함양</li> <li>• 한국과 출신국을 잇는 '인적 가교': 새로운 해외 취업 지원</li> <li>• 특정 분야/직군의 전문 인재양성</li> <li>• 공공부문 채용 기회 확대</li> <li>• 고용 환경 개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li> <li>• 직업훈련 후 창업/취업 연계 강화</li> </ul>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및 학문 중심의 고급 한국어 교육 강화</li> <li>•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아닌 "중도입국 특별전형" 마련</li> </ul>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과정 진학 준비를 위한 생계 지원</li> <li>•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마음건강 지원사업</li> </ul>

출처: 저자 작성

## 2. 청년정책을 둘러싼 중도입국 청년과 국내출생 청년의 시각차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 간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두 집단 간 입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학교 입시전형과 노동시장 채용 쿼터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대학교 입시전형의 경우, 국내출생 이주배경 청년들은 본인들보다 오히려 중도입국 청년을 위한 별도의 입학 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은 국내출생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더 큰 이슈는 일부 중도입국 청년이 활용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전형)이다. 국내출생 청년 A1 씨는 “한국 친구들만큼 치열하게 수능을... 아등바등” 준비하며 입시 경쟁에 임하지만, 일부가 이 전형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보며 “너무 화가 나는”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제도의 역설은 한 학부모의 증언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녀는 “외국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 특례 입학에 더 유리할 수 있어, 일부러 귀화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제도가 귀화를 통한 통합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귀화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어·학업적 어려움이 큰 중도입국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전형을 신설하되, 반드시 정원 내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발하는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부의 갈등과 역차별 인식을 해소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내 채용 쿼터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국내출생 청년 A3 씨는 노동시장 내 이주배경 쿼터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청년 취업률이 엄청 떨어지는 와중에 어쨌든 그 청년 이제 경제 가능 인구 중의 한 명인데 얼마 없는 자리를 나라에서 누군

가한테 준다고 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현재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에게도 취업의 문이 넓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취업과 같은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은 “기존 청년들의 몫을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현실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이들은,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중도입국 청년인 B8 씨는 “의무적인 쿼터 대신에 실질적인 경험과 성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혹은, 국내 출생 청년인 A2 씨는 다문화적 역량이 필수적인 특정 직군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주배경 청년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혹은 A3씨는 직접적인 채용 할당보다는 “한국어 배우는 거 지원 같은 거는 그것까지는 그런 복지까지는” 비이주배경 청년에게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이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들이 청년으로서 겪는 보편적인 과제와 이주배경으로 인해 마주하는 특수한 장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서 국내 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 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두 집단의 선호 차이가 아니라 이들이 경험한 상이한 성장배경, 노동시장 진입 경로, 그리고 제도적 장벽(언어, 체류자격,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도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즉, ① 모든 청년에게 필요한 보편적 정책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② 언어나 정보의 격차와 같은 출발선의 불리함을 해

소하기 위한 조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③ 이주배경으로 인한 특수한 위험 (차별, 체류자격 불안정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개입을 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제5장

### 해외 사례: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 정책

제1절 독일 사례

제2절 영국 사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제 5 장

# 해외 사례: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 정책

이번 장에서는 독일과 영국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연방정부(중앙정부), 주/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번 장에서 지칭하는 이주배경 청년은 [표 1-5]에서 정의된 바와 달리, 유럽 및 OECD 등에서 통용되는 더 넓은 연령대(예: 최소 연령이 15세 이상)와 다양한 이주배경 유형을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임을 미리 밝힌다. 다만, 영국의 경우, 정책 대상들이 주로 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 제1절 독일 사례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로,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과제에 관심이 높다(OECD, 2024). 이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 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연결망 지원, 재정적 지원,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이수 촉진 등이 있다(OECD, 2021). 이 밖에도 이주배경 청년의 효과적인 교육-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노력도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 대상 교육-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를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민간단체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1.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사례

### 가. 직업자격네트워크(Berufliche Qualifizierungsnetzwerke, BQN)

#### 1) 개요

독일의 직업 자격 네트워크(Berufliche Qualifizierungsnetzwerke, 이하 BQN)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특별 지원 대상 집단의 직업 역량 향상(BQF)'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된 지역 기반 직업훈련 네트워크를 말하며(BMBF, 2002.07.12),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계되었다(Schaub, 2007).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종료된 사업이나,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지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대상 및 참여자

BQN의 활동은 주로 ㄱ)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14세 이상 ~ 27세 이하)<sup>20)</sup>, ㄴ) 부모, 교사, 원어민 교사, 직업 훈련 강사, 청소년 복지/청소년 사회 사업 분야의 교육 기관 직원 등, ㄷ) 이주민 자조단체, 고용·사회 및 청소년 복지 기관 직원, 종교 단체/교회, ㄹ) 기업주,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관리자, 노사 협의회 및 직원 대표 위원회, 행정 기관, ㅁ) 상공회의소 및 협회, 영사관, 대사관,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했다(BMBF,

---

20) 독일의 사회법전 제8권(SGB VIII)에 따르면, 청소년(Jugendlicher)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젊은 성인(junger Volljähriger)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젊은 사람(junger Mensch)은 27세 미만인 자를 말함.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viii/7.html>

2002.07.12).

BQN의 핵심(중앙) 파트너는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공업회의소, 고용사무소이며, 기업 협회, 노동조합, 이주민 자치단체, 학교, 교육 기관 등이 기타 파트너로 참여했다(BMBF, 2002.07.12.).

### 3) 주요 활동

BQN의 주 활동은 ㄱ)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 ㄴ) 직업훈련 일자리 확보, ㄷ) 지역 및 지방 차원의 이주민 직업 훈련 촉진 정책, ㄹ) 교육·연구 연계 정책, ㅁ) 대외 홍보, 등과 같다(Schaub, 2007).

이들 중 BQN의 주된 활동 영역은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 그리고 직업훈련 일자리 확보에 집중되었다. 먼저,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 영역에서는 직업훈련 시스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문화 주류화(Cultural Mainstreaming)를 목표로 하였다. 직업훈련 일자리 확보 영역에서는 기존에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들을 동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신규 교육기업 발굴 및 채용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특히 외국 기업 또는 이주배경 소유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집중했다(Schaub, 2007). 이 밖에도 역량 평가 도구 개발과 멘토링·상담, 이력서·면접 준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주민 자조단체(Migrantenselbstorganisationen, MS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도 제공되었다(Erler & Schindel, 2007).

### 4) 연방정부의 지원과 요구사항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지역별 또는 지역 간 BQN의 설립 시, 그리고

기존의 BQN 업무의 추가 개발 또는 확장 시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준비 단계의 보조금은 6개월(EUR 40,000 한도), 실행단계의 보조금은 최대 3년 지원되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및 실행단계 단계별로 BQN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업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BMBF, 2002.07.12.).

〈표 5-1〉 BQN 단계별 과업 요구사항

단계	주요 과업
<p>준비(예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자 직업 훈련을 위한 지역 활동의 예비 조사 (상담 및 훈련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접근 방식 및 홍보 활동),</li> <li>- 지역 훈련 및 노동시장의 잠재력 평가 및 이주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요 분석</li> <li>- 지속 가능한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설립 및 테스트를 위한 준비 작업.</li> <li>- 직업 훈련 분야, 고용 및 훈련 시장, 일반 교육, 지방 행정, 이주자 자치 단체 등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li> </ul>
<p>실행단계 (구축 및 테스트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및 훈련 시장, 교육, 지방 행정, 이주자 자치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자원의 활용을 개선하고,</li> <li>- 새로운 활동의 추가 개발 및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li> <li>- 이주자의 직업 자격과 관련된 지역/지역별 활동(자격 제공 및 관련 네트워크 접근 방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li> <li>- 지역 훈련 및 노동시장의 잠재력 평가 및 이주자의 수요 분석 정기적 수행</li> <li>- 이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촉진을 위해 네트워크 내의 지역/지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다중 영향력 활동(해당 분야 교사, 교육자, 컨설턴트, 정책 결정자)을 통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 행사 개최 (예: 성공적인 이주자, 전 훈련생 참여),</li> <li>- 부모 대상 프로그램,</li> <li>- 기업 및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자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li> <li>- 성인 이주자를 위한 추가 교육 및 계속 교육 기회 정보 제공,</li> <li>- 자원봉사자 모집,</li> <li>- 기존 기관(예: 지방 자치체, 직업 훈련 위원회) 참여, 홍보 등</li> </ul>

출처: "Bekanntmachung: Förderung von Modellen lokaler und regionaler Kooperationsnetzwerk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BQN),"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002.07.12., [https://www.bmfr.bund.de/SharedDocs/Bekanntmachungen/DE/2002/07/16\\_bekanntmachung.html?templateQueryString=BQN](https://www.bmfr.bund.de/SharedDocs/Bekanntmachungen/DE/2002/07/16_bekanntmachung.html?templateQueryString=BQN)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 5) 평가 및 시사점

BQN 프로그램은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BQN 프로그램의 목표는 상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의 직업 자격 취득 기회와 관련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즉, 협력 네트워크 모델의 개발 및 구축, 경험 이전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 정치 구조에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의 직업통합 의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Schaub, 2007). 이후 독일 정부의 정책이 개별적·지역적 접근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전국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BQN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Süssmuth, 2009).

BQN은 한시적 프로그램이었음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Schaub(2007)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 구축 성과가 있었다. BQN을 통해 학교,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접근법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접근에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BQN을 통해 이주민 자조단체(MSO)의 정책 참여기회를 늘렸고, 이를 통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이러한 활동은 주요 주체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학교, 고용 행정 기관, 상공회의소 등 주요 주체들 사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통합 문제에 대한 사고 전환과 인식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경험과 네트워크는 후속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Schaub, 2007).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Schaub, 2007).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지만, 지역별 성과 편차가 나타났다(Schaub, 2007). 또한 3년의 지원 기간 종료 후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였다(Schaub, 2007). 더불어 기존 제도 및 유사 네트워크와의 활동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마찰 문제도 지적되었다(Schaub, 2007).

결론적으로, BQN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 통합을 위한 과제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다루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나, 재정적·구조적·문화적 제약 또한 드러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향후 지역 기반 네트워크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나.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ugendmigrationsdienste, JMD)<sup>21)</sup>

### 1) 개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청년들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인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그들의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를 운영하고 있다(BMBFSFJ, 2022.04.01). JMD는 독일 전역 500여 개 기관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지원 서비스이다(BMBFSFJ, 2022.04.01). 주요 서비스는 진로 탐색, 직업훈련 연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BMFSFJ, 2024.07.10; OECD, 2021).

21) BMBFSFJ(2022.04.01.) 내용을 재구성하여 소개하였다. 본문에 별도의 인용 표기가 없는 부분도 동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 2) 지원 대상

JMD 운영 지침에 따르면,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BMBFSFJ, 2022.04.01, p.2). ① 12세부터 27세까지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임시 체류 허가(tolerated stay permit)를 받은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이주배경 청소년 부모 또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③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사회통합에 관여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기준 136,000명 이상의 청소년·청년이 JMD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들의 출신 국가는 180개국 이상으로 확인된다(BMFSFJ, 2025.06.04). 특히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JMD를 많이 찾았다(BMFSFJ, 2025.06.04).

## 3) 주요 활동

JMD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JMD의 주요 활동 및 과업은 다음과 같다(BMBFSFJ, 2022.04.01, pp.3-6).

첫째, JMD는 개별 맞춤형 상담 및 통합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회·교육 상담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다. 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한다. 둘째, 통합지원 계획은 의무교육 이후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사례 관리이다. 이는 당사자의 학력은 물론,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습득한 기술과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다. 또한, 계획의 전 과정에 당사자

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인다.

둘째, JMD는 이주배경 청소년·청년들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정치 이슈부터 직업훈련, 언어, 자원봉사, 사회성 향상 교육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며, 연방 아동청소년계획(KJP)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경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JMD는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상담사들은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들이 사회·문화·정치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다섯째, JMD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연락, 조정, 중재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 JMD는 지역사회와 조직 내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한다.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주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차별 경험 극복을 지원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청년들은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마주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막는 심각한 장벽이 되기에, JMD는

이들이 차별적 상황에 대처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적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하는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 4) 운영 체계

##### ① 서비스 제공기관

JMD는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Kinder- und Jugendplans, KJP)과 청소년 강화 이니셔티브(Initiative JUGEND STÄRKEN)<sup>22)</sup>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BMBFSFJ, 2022.04.01).

이러한 사업은 근로자 복지 기구(Arbeiterwohlfahrt, AWO), 연방 개신교 청소년 복지협회(Bundes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 Jugendsozialarbeit, BAG EJSa), 연방 가톨릭 청소년 복지협회(Bundes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e Jugendsozialarbeit, BAG KJS), 인터내셔널 분트(Internationaler Bund, IB), 파리테티쉐 협회(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독일 적십자사(Deutsches Rotes Kreuz, DRK) 등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BMFSFJ, 2022.04.01).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JMD 센터는 독일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22) 아동청소년 계획은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전반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이며(BMFSFJ, 2025.03.18). 청소년 강화 이니셔티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학업·직업·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로 포괄하는 정책이다(BMFSFJ, n.d.).

[그림 5-1] JMD 지역 센터 분포



출처: "Jugendmigrationsdienste(JMD)." JMD,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

## ② 재원 조달 및 배분

JMD는 연방 아동·청소년 계획(KJP)의 지침에 따라 연방 청소년가족부(BMFSFJ)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예산은 중앙사무소가 지역별 수요와 상황에 맞춰 실행 기관에게 배분한다.

개별 통합지원(사회교육 상담과 통합지원계획)의 경우 지원받는 청소년 수와 지역사회 여건이 주요 산정 기준이 된다. 그룹 프로그램은 연방 아동·청소년 계획(KJP)지침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받고,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 공간 작업, 다문화 개방과 같은 과제에는 최대 인건비의 3분의 1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규모는 연방 청소년가족부(BMFSFJ)가 결정한다.

### ③ 전문 인력 및 질 관리

JMD는 대학교 학위를 가진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들은 사례 관리 절차에 익숙하고 지역 구조와 이해관계자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민 경험 혹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어 상담을 찾는 이들의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BMFSFJ, 2025.06.04). 또한, JMD는 직원의 역량 강화, 정기적인 보수 교육, 운영 지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업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④ 전자문서화

JMD의 업무는 “JMD i-plus”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화된다. 각 상담 및 사례 관리 건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사례파일로 보존·관리한다.

## 다. 온라인 상담 플랫폼(jmd4you)<sup>23)</sup>

### 1) 개요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jmd4you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독일에서의 교육, 취업, 사회통합과 관련해 개인 맞춤형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국어 지원도 이루어진다(Botzian, 2024.11.27; OECD, 2021).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담당자를 배정받고, 이후 jmd4you 포털을 통해 메일 상담이나 채팅 상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상담사와 연락하게 된다. 온라인 상담은 독일어,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 알바니아어 등 6개 언어로 제공된다(Botzian, 2024.11.27).

### 2) 운영 및 서비스 내용

#### ① 운영 원칙

운영 원칙은 개방성, 익명성 및 비밀보장, 무료 이용이다. 첫째, 개방성은 누구나 질문·고민·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린 자세로 답변하고 돕는다는 원칙이다. 둘째, 익명성 및 비밀보장 원칙은 이용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담 내용은 암호화되어 보호되며,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료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인터넷 연결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

23) 대부분 jmd4you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고, 이외 참고 자료는 문장 단위로 인용표기 하였다.

## ② 채팅 상담 서비스

이용자는 jmd4you 포털에 로그인한 후, 채팅 메뉴에서 상담 가능 시간표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이 완료되면 지정된 시간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해 채팅 창을 활성화하여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다른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상담이 조기에 종료되어 상담 가능 시간이 생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상담 가능 시간에 즉석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메일 상담 서비스

메일 상담은 청소년·청년이 개별적인 문제나 질문을 서면 형태로 상담사에게 전송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비동시적 상담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jmd4you 포털에 로그인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담사를 배정한다. 답변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④ 전화 상담 서비스

온라인 포털 내에서 상담 요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사가 가능한 시간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글쓰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음성 통화를 선호하는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즉시 회신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담 인력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이 포털에 명시되어 있다.

## ⑤ 포럼

jmd4you 포털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포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1:1 익명 상담(채팅 및 이메일)과 달리, 이용자 간의 공개적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 교환, 학습, 상호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에는 이미 등록된 이용자가 주제별 질문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는 이를 검토 후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용자들은 로그인 후 게시물이나 답변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평가 및 시사점

JMD와 jmd4you는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된 다층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개별 상담과 통합지원계획, 그룹 활동,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연계, 다문화 개방 활동 등을 포함하여 개인·가정·지역사회 수준을 포괄하는 통합지원 구조로 구현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교육·직업훈련·고용으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jmd4you는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팅·메일·전화·포럼 등 다양한 채널은 대상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유연한 상담 방식을 가능하게 하며, 언어와 공간의 제약을 줄여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완전 익명 상담, 웹 기반 상담은 직접 대면하기를 꺼리는 청년들이나 인근에 지역센터가 없는 사람들을 온라인 채널로 포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BAG EJSA, 2021).

그러나 비대면, 웹 기반 소통은 상담 맥락에서 비언어적 신호나 즉각적 반응을 포착하기 어렵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상담 방식은 초기 상담 지속성과 연결성 유지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상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훈련이 필요했지만, 일부 교육 프로

그럼은 참여율이 낮거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다 (BAG EJS, 2021). 결국 온라인 상담은 접근성 향상만큼이나 상담의 깊이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와 충분한 인력 지원체계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라. 직업훈련 및 이주 조정센터(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KAUSA)<sup>24)</sup>

### 1) 개요

직업훈련 및 이주 조정센터(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이하 KAUSA)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업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일의 직업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이다 (정수정·최순중, 2015; BIBB, 2021). 1999년에 처음 설립된 KAUSA는 연방 교육연구부(BMBF)의 지원을 받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JOBSTARTER plus 프로그램을 거쳐 2018년 빌둥스케테(Bildungsketten) 이니셔티브에 통합되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난민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그 역할을 확대했다(정수정·최순중, 2015; Netzwerk-IQ, 2020.03.31; BIBB, 2021).

KAUSA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주 배경 기업가들이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이주 배경 청년 및 난민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인다. 셋째,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한다(BIBB, 2021).

24) 특정 연령 상한선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2) 주요 활동 및 서비스<sup>25)</sup>

전국 전역에 분포한 KAUSA 서비스 센터(Servicestelle) 및 지역 사무소(Landesstellen)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IBB, 202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KAUSA 센터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직업교육과 진로 준비 방안(예: 인턴십, 초급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기회와 함께 훈련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면서, 직업훈련으로 가는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이주 배경 학부모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Netzwerk-IQ, 2020.03.31.).

둘째, 2016년 8월 1일부터는 KAUSA는 2016년부터 독일의 대표적인 전문가 자원봉사 단체인 시니어 전문가 서비스(Senior Expert Service, SES)와 협력하고 있다. 은퇴한 전문가 및 경영진으로 구성된 SES 멘토들은 자신의 풍부한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난민 청소년이 이중 직업교육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이들은 KAUSA 직원과 함께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SES, n.d.; Netzwerk-IQ, 2020.03.31.).

셋째, KAUSA 서비스센터는 이주 배경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자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안내하고, 직업훈련 운영 절차에 대해 자문하며, 훈련 수행 전반을 지원한다(Netzwerk-IQ, 2020.03.31.). 예를 들어, 직업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 독일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영 방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 모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25) Netzwerk-IQ(2020.03.31.)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한다(BIBB, 2021). KAUSA 서비스센터는 기업가들에게 직업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파트너 기관과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청(AA),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Netzwerk-IQ, 2020.03.31; BIBB, 2021).

넷째, KAUSA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상담을 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학교, 이주민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연방 교육연구부(BMBF)는 이주 배경 청년과 난민을 위한 직업훈련 네트워크 구축을 KAUSA 지역 사무소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Netzwerk-IQ, 2020.03.31; BMBF, n.d.).

다섯째, KAUSA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에서는 난민과 이주 배경 청소년이 직업훈련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성공 사례를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소개한다(Netzwerk-IQ, 2020.03.31). 이 자료집은 다국어로 제공된다.

여섯째, 2010년부터는 이주민의 직업훈련을 주제로 균형 잡힌 보도를 한 젊은 언론인에게 KAUSA 미디어상을 수여하고 있다(Netzwerk-IQ, 2020.03.31). 이 상은 이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를 널리 알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수정·최순중, 2015).

마지막으로, KAUSA는 기업 훈련 관련 용어집을 제공하여, 훈련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을 A(일반 학교 교육)부터 Z(자격증)까지 설명하고,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Netzwerk-IQ(2020.03.31).

KAUSA는 본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도 기울였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KAUSA 전환(transfer)프

로젝트'가 바로 그것으로,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과 조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BMBF, n.d.).

앞서 설명한 KAUSA의 주요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KAUSA의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정보 제공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 대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직업군, 진로 경로 안내</li> <li>기업 대상 견습생 채용 절차, 지원 제도 안내</li> </ul>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기업, 직업교육기관, 이주민 단체와 협력 구조 강화</li> </ul>
서비스 직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기회 연계 및 멘토링</li> </ul>
다국어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17개 언어로 부모 가이드 제작</li> </ul>
대중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AUSA 미디어상 수여(직업교육 분야 이주민 관련 보도 우수 기자 시상)</li> </ul>
전환·확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서비스센터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확산</li> <li>부모 참여 확대, 기업 매칭 도구 개발 등</li> </ul>

출처: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Netzwerk-IQ, 2020.03.31., <https://www.netzwerk-iq.de>;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 Entwicklungsprojekt: Projektbeschreibung,"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2021; "KAUSA-Projekte,"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n.d.,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ausbildung/massnahmen-zur-integration/kausa-projekte/kausa-projekte\\_node.html](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ausbildung/massnahmen-zur-integration/kausa-projekte/kausa-projekte_node.html)를 종합하여 재구성

### 3) 운영 체계

KAUSA의 운영 체계는 지역 단위의 서비스 센터(Servicestelle)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센터들이 각 지역에서 이주 배경 청년, 부모, 기업을 위한 상담, 네트워킹, 직업교육 연계를 직접 수행하며, 그 수는 2020년 20개소에서 2024년 42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Cedefop & ReferNet, 2025, pp.3-6).

이러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광역 단위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주 사무소(Landesstelle)가 신설되었다. 3개 주에서 시작

된 주 사무소는 현재 10개 주로 확대되었으며, 연방 교육연구부(BMBWF)와 해당 연방정부로부터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받는다(BMBWF, n.d.). 이처럼 KAUSA는 지역과 주 단위를 아우르는 촘촘한 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4) 평가 및 시사점

KAUSA는 독일의 직업 교육 참여를 높이고, 직업 교육을 강화하며, 숙련 노동자 수요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Netzwerk-IQ, 2020.03.31).

구체적으로, 2013년 3월까지 이주 배경 자영업자로부터 약 9,000개 이상의 직업교육 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정수정·최순중, 2015). 보다 최근 자료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KAUSA를 통해 175개 이상의 기업을 이중 직업훈련 제도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하여 100개가 넘는 새로운 훈련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edefop, & ReferNet. 2025, p.6). 또 다른 사례로, 작센안할트 주의 KAUSA 주 사무소는 이주 배경을 가진 많은 견습생들이 연방이주난민청(BAMF)의 맞춤형 프로그램인 견습생 직업언어과정(Azubi-BSK)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성과를 제시하였다(Cedefop, & ReferNet. 2025, p.6)

이밖에도, KAUSA는 독일 이주 배경 청소년 직업 진로 지원 정책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KAUSA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과 어려움(예: 언어 장벽,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식 부족,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이주 배경 자영업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자리를 창출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정수정·최순종, 2015).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Bergseng et al.(2019)은 KAUSA 프로젝트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KAUSA는 한시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Bergseng et al, 2019).

## 2.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사례

### 가. 직업통합학급(Berufsintegrationsklasse, BIK)

#### 1) 개요

직업통합학급(BIK)은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직업교육 체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독일 바이에른(Bayern)주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과정은 이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고 장기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핵심 언어 능력과 기초 직업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Reinke & Goller, 2022).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젊은 이민자들이 독일의 복잡한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있었다. 이에 바이에른주는 2010년 직업통합학급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5년부터 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Reinke & Goller, 2022).

#### 2) 대상

대상은 16세에서 21세의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sup>26)</sup> 해당 과정은 2년 과정으로 설계되었으

나,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년을 반복할 수 있다(OECD, 2019; Reinke & Goller, 2022).

### 3) 특징

기존의 많은 이주 청년 통합 과정은 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수개월의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어, 공식적인 학력 취득이나 체계적인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sup>27)</sup>가 있다. 즉, 수개월의 짧은 과정으로는 일반 교육, 모국어 문해력, 문화적 친숙함, 고용 가능성 등의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통합학급(BIK)은 독일의 정규 교육 시스템 내에 설계된 장기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Reinke & Goller, 2022). BIK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공식적인 중학교 졸업 자격(lower secondary school leaving certificate)을 취득할 수 있어, 이주 청년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훈련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한다(Reinke & Goller, 2022).

해당 과정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Reinke & Goller, 2022). 1학년(BIKV, 예비반)은 주로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 기초 문해력 교육도 추가로 제공한다. 2학년(BIK, 본 과정)에는 독일어 능력 향상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학을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 강화 수업과 진로지도, 지원서 작성 훈련, 독일 직업교육훈련(VET)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학기에는 보통 인턴십이 포함된다. 학년별로

26) 예외적인 경우는 독일에서 인정된 졸업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독일에서 아직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StMUK, 2024, p.7).

27) 이탈리아의 직업 중개 과정, 불가리아의 난민 고용 및 훈련 과정, 오스트리아의 전국적인 견습생 배치 등은 모두 단기 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중등학교 졸업증이 제공되지 않은 사례들이다(Reinke & Goller, 2022, p.99).

목표로 하는 언어 수준도 다르다. 1학년은 초급·기초 수준(A2 GER까지)의 독일어 능력 습득과 기본 문해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2학년은 중급 수준(B1 GER까지)의 독일어 및 학업·직업 관련 언어 능력 습득을 강조한다(ISB, 202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중등학교 졸업 자격(lower secondary diploma)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언어 능력이나 문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1년 더 반복 수강하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OECD, 2019, p. 48).

특히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현장실습이 마지막 학기에 포함되며, 이는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일반형(BIK/s)과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협력형(BIK/k)으로 세부 구성된다(Reinke & Goller, 2022). 또한, 학습 영역은 언어와 직업 준비를 넘어 수학, 윤리, 정치, 사회 등 폭넓은 교과를 포함하여 이주 청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표 5-3〉 참조).

〈표 5-3〉 직업통합학급(BIK)의 구체적인 내용

특성	설명
기간	2년(동일 학년 반복 가능)
대상 연령	12-21세, 예외적인 경우 최대 25세까지
주요 목표	직업훈련 및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 직업선택 준비 개인개발 촉진 자기조직화 및 사회적 행동을 위한 역량 습득 책임감 있고, 계획적이며, 구조화된 방식으로 삶을 조직할 수 있는 일상기술 습득
커리큘럼에 따른 주요 학습 영역	독일어 습득 교육시스템 및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수학 윤리적 행동과 의사소통 정치와 사회
교육방법	역량기반 및 행동지향 교육
교육학위	(자격)중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적인 최종시험을 치른 경우)

출처: "Supporting Young Immigrants in Their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Staff Perspective on Challenges of Vocational Integration Classes," Reinke, H. & Goller, M., 2022, pp.92-119.

#### 4) 운영 체계

BIK는 바이에른주 교육부(Kultusministerium Bayern)가 제시한 교육과정·운영 지침에 따라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지역 청소년 복지기관, 직업상담소, 난민지원기관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된다. 2년 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바이에른 주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학급당 7만~8만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학생 개인의 부담금은 요구되지 않는다((StMUK, 2024). 학급 당 인원은 16~20명이 권장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16명 미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 5) 전문 인력 및 질 관리

BIK 종료 시점에 각 학교는 해당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학업·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익명으로 기록한다. 기록된 정보는 학교 단위로 취합되어 정부에 제출된다. 학교는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음 학년도에 대한 피드백을 직업준비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방식의 재학률/취업률 조사는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파악하고, 학교 품질 관리체계(QmbS)를 통해 직업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StMUK, 2024. p.14-15).

#### 6) 평가 및 시사점

초기 평가에 따르면 BIK 과정은 교육 환경에 잘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Reinke & Goller, 2022). OECD 보고서에서도 직업통합학급(BIK)을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며(OECD, 2019) 대표적인 독일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바이에른주는 이렇듯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주 전체로 확대하면서 2014/2015학년도에 약 180개였던 학급 수를 2016/2017

학년도에는 약 1,150개로 늘렸으며, 같은 해에 약 22,000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실적을 올렸다(OECD, 2019). 이러한 이유로 독일 내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높은 수용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Reinke & Goller, 2022).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BIK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내용이 유치하거나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Reinke & Goller, 2022). 특히 독일어 수업 시수가 부족해 직업훈련·취업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고, 인턴십에는 이민청 승인이나 방학 중 실습 제한 등 법적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Reinke & Goller, 2022). 이에 따라 언어 교육 강화, 적절한 목표 설정, 명확한 법적 지원과 함께 학교 및 교사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3. 민간 부문의 주요 사례

#### 가. 쇼츠텍(Schotstek)<sup>28)</sup>

##### 1) 개요

쇼츠텍(Schotstek)은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독일 내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청년<sup>29)</sup>과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를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함부르크, 베를린 등 특정 지역 대학의 청소년·청년이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다. 이 단체는 독일 사회의 리더

28) 주로 쇼츠텍 홈페이지(<https://www.schotstek.com/en/home>)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29) 웹사이트에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볼 때 주요 대상은 청소년 후기부터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

계층에 인구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편견이 인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우수한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쇼츠텍은 지원자에게 특정 연령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책임감, 성실성, 타인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 등의 자질을 중요하게 여긴다.

쇼츠텍은 기부금과 기업 후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파트너 네트워크와 자문기구의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EESC, 2025).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상임이사를 포함한 핵심 파트너 다수가 프로그램 졸업생이라는 점이다(EESC, 2025). 이처럼 240명이 넘는 동문 네트워크가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는 쇼츠텍의 지속 가능한 멘토링 모델의 핵심이다(EESC, 2025).

## 2) 프로그램의 3대 핵심 요소<sup>30)</sup>

쇼츠텍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리더십 역량 강화, 폭넓은 문화 참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쇼츠텍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이 경력 개발에 필수적인 전문적·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쇼츠텍은 동문, 자문위원회, 기업뿐만 아니라, 과학·정치·문화·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과정생들에게 특정 주제가 있는 저녁 모임이나 저명인사와의 대화 같은 정기적인 행사를 통하여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

30) 주로 EESC(2025)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경력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장기적인 지원과 상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쇼츠텍 프로그램 동문들이 지식과 인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쇼츠텍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리더십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이들이 졸업 후 관리자 직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화된 워크숍과 코칭을 제공한다. 워크숍은 의사소통 능력, 자신감, 리더십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도록 훈련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은 멘토링을 통해 개인적인 지원도 받는다. 멘토링 과정에서 이들은 경험 많은 전문가 및 관리자들과 연결되어, 직업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고, 경력 계획을 수립하며, 직업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쇼츠텍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문화적 참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박물관, 극장, 오페라,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한다.

### 3)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자에 따라 크게 스타터(Starter) 과정과 청년 전문가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스타터(Starter) 프로그램은 함부르크, 뤼베크, 뤼네부르크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지원한다. 다양한 방식의 학습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독창적인 시야를 갖고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쇼츠텍 자문위원들과의 개인 상담 및 자기 계발 워크숍 등을 통해 개인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쇼츠텍 장학생은 전시회 관람, 문학동아리 활동, 월례 네트워크 행사 등에 참여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

회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전문가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이들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함부르크에서는 2020년도부터, 베를린에서는 2022년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선발된 청년 전문가를 경력 발전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고, 개인의 적성 계발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쇼츠텍 구성원들의 커뮤니티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직 관리자와의 컨설팅을 통해 청년 전문가로서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구상하는 등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 및 토론회 참여, 다른 직업영역의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표 5-4〉 쇼츠텍 주요 지원 내용

단계	주요 특징
스타터 (Sta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원(워크숍, 개인심화 멘토링 및 코칭),</li> <li>- 취업기회 제공(학생 인턴십, 첫직장 구직 지원)</li> <li>- 네트워킹, 강연 또는 토론회 참여지원(CEO, 연구자, 인사관리자, 스타트업 창립자, 예술가)</li> <li>- 문화경험 지원(전시회·극장·오페라·발레 관람, 문화동아리 활동, 월례 네트워킹 행사, 여행)</li> <li>- 박사과정생 모임</li> <li>- 장학금 지원</li> </ul>
청년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개발 지원(개별 상담, 자기개발 및 경력관련 워크숍 참여)</li> <li>- 네트워킹, 토론회 참여지원(CEO와의 토론)</li> <li>-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 관련 토론회 참여지원</li> </ul>

출처: “Schotstek,” <https://www.schotstek.com/en/home>

마지막으로 사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 쇼츠텍 구성원이 평생 쇼츠텍 구성원이 된다(Once a Schotstek, always a Schotstek)’는 슬로건에 따라 이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쇼츠텍 홈페이지에서는 네 단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학교 졸업생(New graduate)에게는 1년 동안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며, 두 번째로 저연차(Junior)에는 매달 있는 의무적인 모임 참여 및 코칭, 멘토링, 극장 관람 등의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로 박사과정생(Doctoral student)에게는 맞춤형 지원 및 박사클럽 참여를 통해 동료 네트워크 모임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동문은 쇼츠텍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4) 신청 및 선발

프로그램은 매년 3월에 시작되며 스타터 프로그램은 4월 중순에,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은 5월 중순에 종료된다. 지원서는 쇼츠텍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며, 선발 절차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지원 과정은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B2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함부르크에서 최대 2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함부르크 및 베를린 지역에서 최대 20명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선발한다(EESC, 2025).

#### 5) 평가 및 시사점

쇼츠텍(Schotstek)은 이주배경 가정의 우수한 청소년·청년에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전문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특히 학업 과정에서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멘토링·코칭은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키고,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쇼츠텍에

서 강조하고 있듯이, 독일 전체 인구의 27%, 함부르크에서는 초등학생의 50%가 이주배경인 점을 고려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인구학적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어떻게 공정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지속 가능하도록 고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쇼츠텍의 졸업생이자 관리직 이사를 맡고 있는 Evgi Sadegie가 역설했듯이, 쇼츠텍은 단순한 장학 프로그램이 아닌, 인구 다양성이 높은 독일이 세계화 시대에 누구에게나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는 조직이자 프로그램을 지향한다(EESC, 2025). 이는 경제적·사회적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주배경 청년층의 고용·진로 진입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청년의 학업 및 고용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주배경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리더로 성장하여 사회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의 자생적 활동을 지원하고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영국 사례

영국은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sup>31)</sup> 다만 이주배경 청년 모두를 위한 것보다는, 주로 난민 청년의 고용 및 통합 지원을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무부(Home Office)가 주도한 난민 고용 프로그램(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REP)은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과 부처 간 협력 하에 난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한 주요 사례이다. 이와 함께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와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과 같은 민간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난민 또는 이주배경 청년의 맞춤형 교육·고용지원과 정서적·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영국 정부 주도의 난민 고용지원 정책과 민간단체 주도의 이주배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운영 방식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사례

#### 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REP)

##### 1) 개요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난민이 영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

---

31) 예를 들어, 고용연급부는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8세에서 21세 사이의 NEET 및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DWP, 2025.05.23.). 이즐링턴 지방정부의 YES 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서비스 종료 청년·청소년 사법 시스템 경험자·장기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한 18세-25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Islington Council. n.d.).

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9월 난민 고용 프로그램(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REP)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인보다 20% 이상 낮은 난민의 취업률을 높이고, 기존 고용 서비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언어·문화 장벽과 영국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영국 정부는 난민의 경제적 자립 촉진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지역사회 통합 등 세 가지를 REP의 목표로 제시하였다(Home office, 2023.09.20). REP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2025년 6월 종료되었다.

## 2) 지원 대상

REP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시행되며, 합법적 보호 경로(safe and legal routes)를 통해 입국한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또는 5년 경로의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경제적 조건이나 비자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Home Office, 2023.09.20., 2024.12.04.). 연령에 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실제 이용하는 다수는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 3) 주요 내용

REP 프로그램은 고용지원, 영어교육, 통합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의 입국 경로와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들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용지원은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연습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의 개인 수준에 맞춘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영어교육 영역에는 ESOL 수업을 포함하여, 회화 클럽 참여,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통합 지원은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예컨대, Jobcentre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돕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로의 연계, 건강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였다.

〈표 5-5〉 REP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고용지원	이력서 작성 수업, 산업 부문 특화 교육(sector specific training), 면접 연습, 기술 과정, 구직 지원, 고용 관련 언어 과정 및 직장 체험 기회 등
영어교육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수업, 회화클럽, 문해력 향상 교육 등
통합지원	지역 커뮤니티·보건·보육서비스 안내, 사회참여 기회 연계 등

출처: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policy statement.” Home Office. 2023.09.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Home Office, 2024.12.04., <https://www.gov.uk/guidance/refugee-employability-programme>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4) 운영 방식

REP는 중앙정부와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민간 위탁 모델로 설계되었다. 내무부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9개 권역별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집행을 담당하였다(Home Office, 2023.09.20).

영국 내무부가 주무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REP는 난민 고용·통합을 위한 단일 부처 사업이라기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체제로 운영되었다. 부처별 역할 및 지원 사항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5-6〉 부처별 역할 및 지원 내용

부처	주요 역할 및 지원 내용
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학습 지원: 성인 교육 예산(Adult Education Budget, AEB)을 통한 ESOL 지원</li> </ul>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li> </ul>
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 혜택 접근 및 구직 지원</li> </ul>
내무부 (Home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 지원금: 이민자들의 재정착 및 통합 지원 목적으로 지방 정부에 1인당 £20,520 지원금 지급</li> <li>통합 대출: 신규 난민 지위 취득자에게 무이자 통합대출 (interest-free integration loans) 제공 등</li> </ul>

출처: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policy statement.,” Home Office. 2023.09.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5) 평가 및 시사점

REP는 시행 초기부터 난민의 고용 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Holroyde(2025.02.10)의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REP 참여자는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습득,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거쳐 노동시장 진입률을 높였으며, 약 6개월 이상 안정적 근로 상태를 유지한 비율이 지역 평균보다 25% 이상 높았다 (Holroyde, 2025.02.10). 이러한 성과는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personalised case management) 중심의 설계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REP는 언어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였다. 참여자들은

ESOL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높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약 80%가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과 웰빙 측면에서도 참여자들이 “삶의 목적과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Holroyde, 2025.02.10).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REP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Home Office(2024)는 2025년 6월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하였고, 이에 Mental Health Foundation(2024)에서는 “정신건강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던 핵심 정책이 조기 종료되는 것은 역효과적(counter-productive)”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REP는 법적 난민과 인도적 보호 대상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망명신청자나 불안정 체류자는 제외된다(Home Office, 2023). 이로 인해 정책의 포괄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난제는 난민의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통합 지원의 어려움이다. 주거 지원이 REP의 공식 업무 범위가 아니었음에도, 사례 관리자들은 주거 위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이용자를 돕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의 꾸준한 프로그램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며, REP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Barri et al., 2025.09.26).

종합하면 REP는 난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촉진한 대표적 정부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성의 부재, 대상 집단의 제한, 통합서비스의 범위 문제 또한 드러났다. 특히 REP의 중단은 단순한 행정 종료가 아니라 통합 지원체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Mental Health Foundation, 2024), 향후 범정부 간 협업을 통한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2. 민간 부문의 주요 사례

### 가.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취업 지원

#### 1) 개요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 BB)는 난민의 고용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의 시민단체이다. 단체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장벽을 허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 런던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맨체스터, 글라스고, 리버풀, 웨스트 미들랜드 등으로 확대되었다(Breaking Barriers, 2024a).

#### 2) 대상

주요 대상자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난민이다(Breaking Barriers, 2023b). BB는 이들이 취업 및 사회통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다(Breaking Barriers, 2022, 2023a, 2023b, 2024a, 2024b). 예컨대 1:1 상담 및 맞춤형 안내 세션에서는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연습 등을 진행한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서도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스킬을 안내하며, 영국 직장 문화와 산업별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 및 디지털 기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세션도 운영한다(Breaking Barriers, 2024b).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표 5-7>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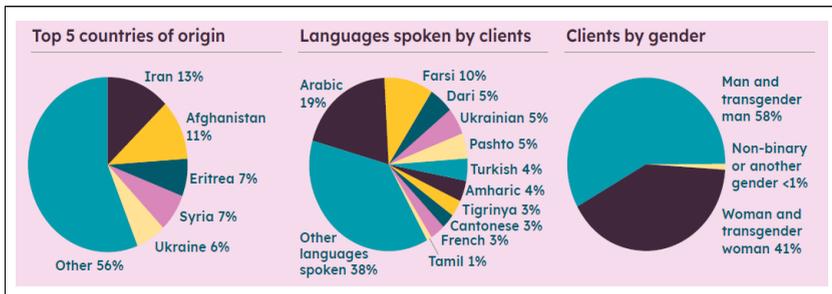
〈표 5-7〉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고용	8~10주 과정의 체계화된 프로그램	
	1:1 지원	
	취업 기회(job opportunities) 제공	
교육	영어	온라인 자기 주도 학습
		대면·온라인 수업 (초급부터 고급까지)
	IT 및 디지털 역량	
역량 강화	워크숍	
	멘토링	
	현장실습 및 직무 참관(Work experience and shadowing)	
기타 지원	훈련, 교육 및 시험 비용 지원	
	노트북 제공	

출처: “Effective employment support for refugees: Breaking Barriers approach,” Breaking Barriers, 2022, p.6.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

2023/24 회계연도 기준으로, 프로그램 이용자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고, 아랍어 사용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남성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Breaking Barriers, 2024a).

〔그림 5-2〕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지원 대상(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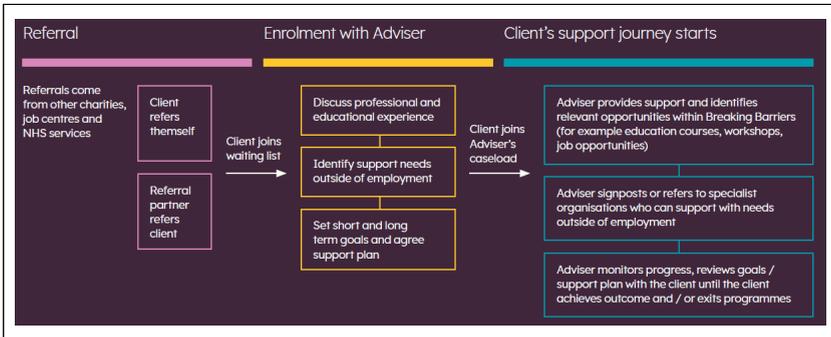


출처: “Annual report and accounts: FY2023–2024,” Breaking Barriers, 2024a, p.11

### 3) 지원 방식

아래 [그림 5-3]은 BB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 절차를 보여준다 (Breaking Barriers, 2022, p.5). 난민들에 대한 지원은 연계와 등록의 단계를 거친 후에 시작된다. 연계는 다른 자선단체나 직업 센터, NHS 서비스 등에서 추천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본인을 추천(self-referral)하여 신청하는 경로로 이루어진다. 등록 단계에서는 이민자의 이전 경력과 학력, 기술 등을 어드바이저와 논의한다. 이때, 취업 외 다른 지원이 필요한 지도 확인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합의한다. 다음 단계에서 교육 과정, 워크숍, 일자리 등 BB의 지원이 시작된다. 취업 외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안내 및 연계한다. 어드바이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까지 지원한다.

[그림 5-3] 브레이킹 배리어스(Breaking Barriers)의 난민 지원 절차



출처: "Effective employment support for refugees: Breaking Barriers approach," Breaking Barriers, 2022. p.5.

### 4) 평가 및 시사점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여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2023/24 기간의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Breaking Barriers, 2024a). 해당 기간 동

안, 런던, 그레이터 맨체스터, 글래스고, 리버풀, 웨스트 미들랜드의 5개 지역에서 총 1,247명의 개인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성장한 수치이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증가했다. 일자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성과도 눈에 띈다. 480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서 700건이 넘는 직업 관련 성과가 있었고, 이 중 296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92%는 목표 달성 동기가 증가했고, 83%는 취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76%는 면접 시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영국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88%에 달했다(Breaking Barriers, 2024a). 이 밖에도 자체 분석평가에 따르면, BB에서 1:1 지원 세션 8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이 7%에서 22%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자의 취업 성과 중 80%는 프로그램의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Breaking Barriers, 2023a).

그러나 BB는 EU 자금 지원 종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더욱 회복력 있고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Breaking Barriers, 2024a).

## 나.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 UC)의 심리·사회적 지원<sup>32)</sup>

### 1) 개요

런던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 UC)<sup>33)</sup>은 난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흑인·아시아인·소수민족의 사회통

32) 주로 얼티밋 카운슬링 홈페이지([www.ucts.org.uk](http://www.ucts.org.uk))에 소개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합을 목표로 한다. UC는 이들이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관계망 형성을 돕는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UC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해 왔다(Ultimate Counselling, n.d.a.; BD Giving, 2025.03.31).

## 2) 주요 서비스

UC는 개인의 내면과 외부 환경을 함께 돌보는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Psychosocial Support)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들 서비스는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실질적 사회통합 지원의 두 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Ultimate Counselling, n.d.a).

첫째,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은 개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망명 신청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이주민을 위한 전문 상담에 특화되어 있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 교육 및 훈련도 제공한다(〈표 5-8〉 참조).

둘째, 실질적인 사회통합 지원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청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 방문형 이민자 지원 서비스, 암 검진 서비스, eVisa 생성 무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5-8〉 참조).

이처럼 UC는 심리적 장벽 해소와 사회적 적응 지원을 돕고 있다. 본 연

33) 2014년 8월 설립 당시에는 'Ultimate Counselling, Training and Support Services C.I.C' 명칭이었다가, 2021년 6월 'Ultimate Counselling C.I.C.'로 변경되었다 (Companies House, n.d.).

구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 중에서도 특히 이주배경 청년의 원활한 교육-고용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와 취업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표 5-8〉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주요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및 특징
상담 및 심리치료 (Counselling & Psychotherapy)	· 정신 건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근로자 웰빙, 정신건강 인식 및 교육
이주민 지원 서비스 (Immigrant Support Service)	· 청(소)년 이주 지원 서비스 · 취업 지원 서비스 · 방문형 이민자 지원 서비스 · 압 검진 서비스 · eVisa 생성 무료 지원 · 심리·사회적 그룹활동 지원 등

출처: “Ulttimuselling,” UCTS, n.d., <https://www.ucts.org>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① 청(소)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

청(소)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Youth Migrant Support Service)는 런던 전역에 거주하는 11세에서 29세 사이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령 조건에 부합하는 망명 신청자, 난민, 또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및 청년, 비동반 미성년자(unaccompanied minors)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Ultimate Councelling, n.d.b).

아래 〈표 5-9〉는 UC가 제공하는 청(소)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를 정리한 것이다. 전인적 지원 및 안내는 개별 상담과 그룹 활동을 통해 정서적 웰빙, 사회적 통합, 정체성 형성을 지원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영역은 언어 학습, 학습 멘토링과 함께 진학 및 견습 과정 등 다양한 진로 경로에 대한 접근을 지원한다. 고용 및 미래 계획 영역의 서비스는 이력서 작성 클리닉, 면접 준비, 고용주 및 직업훈련 기관 연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

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는 이민 관련 안내,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 또래 연결 및 리더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Ultimate Counselling, n.d.b).

〈표 5-9〉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청년 이주민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영역	주요 내용
전인적 지원 및 안내	정서적 웰빙, 사회적 통합, 정체성 형성 지원
교육 및 기술 개발	학교 전학 지원, 언어 학습, 튜터링, 진학/견습/직업교육 과정 경로 지원
고용 및 미래 계획	이력서 클리닉, 면접 준비, 청년 친화적 고용주 및 훈련 기관 연계 포함 취업 준비 지원
이민 관련 안내	망명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및 권리 인식 제고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	이주 경험에 특화된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또래 연결 및 리더십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멘토링, 창의적 표현 활동, 리더십 훈련 기회 제공

출처: “Youth Migrant Support Service,” Ultimate Counselling, <https://ucts.org.uk/youth-migrant-support-service/>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② 취업 지원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이민자, 난민, 그리고 영국 내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예: 공공기금 접근 제한 대상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C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별 목표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개별적인 지원을 설계한다. 취업 준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 신청 및 면접 대비, 직장 적응을 위한 코칭을 제공한

다. 창업 지원은 사업 계획의 수립, 관련 규제 안내,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실질적인 직무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다양한 분야별 진입 경로 및 고용주와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5-10〉 얼티밋 카운슬링(Ultimate Counselling)의 취업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영역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 (Tailored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목표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 평가</li> <li>•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개입 및 지원 설계</li> </ul>
취업 준비 (Employment Read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li> <li>• 구직 신청 및 면접 준비</li> <li>• 직장 적응 및 경력 개발 코칭</li> </ul>
창업 지원 (Entrepreneurship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 수립 및 멘토링</li> <li>• 규제 안내 및 자원 접근 지원</li> <li>• 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도구 제공</li> </ul>
기술 및 지식 개발 (Skills & Knowledg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방향(interactive) 워크숍 및 1:1 코칭</li> <li>• 실질적인 정보 습득·활용·유지를 위한 전략 제공</li> <li>• 자신감 함양 및 직장 적응력 향상 훈련</li> </ul>
훈련 및 경로 (Training & Pathwa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사회복지, 숙박업, 행정, 사회적 기업 등 분야별 진입 경로 연계</li> <li>• 훈련 기회 및 고용 파트너와의 연계</li> </ul>

출처: "Employment Support Service," Ultimate Counselling, <https://ucts.org.uk/employment-support/>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3) 운영 방식

UC는 커뮤니티 이익회사(Communiti Interest Company, CIC)로 (Companies House, n.d.), 공공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공적 자금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민간 서비스로, 주요 재원은 사회투자 기금, 기부금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기금인 GROW Fund<sup>34)</sup>를 유치하며 서비스 운영 자금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로 상담 서

비스인 ‘마인드 브릿지(Mind Bridge)’를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취약계층 무료 서비스 지원에 재투자 하고 있다(BD Giving, 2025.03.31).

#### 4) 평가 및 시사점

UC는 난민과 이주배경 청년층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공공 고용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현장 적응을 포함한 고용 준비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훈련 및 고용 경로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잡센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용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자영업 탐색에 도움을 받은 사례나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받았다는 이용자 후기(Ultimate Councelling, n.d.c)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효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11세-29세를 대상으로 하며, 언어 교육에서부터 견습 기회 제공, 취업 준비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에서 고용 전반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을 병행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취업 지원이 아닌 종합적 자립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UC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료 상담 서

---

34) 이 기금은 LBBB(Barking & Dagenham) 건축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통해 조성되었다(BD Giving, 2025.03.31.)

비스를 최근 시작했다(BD Giving, 2025.03.31). 이는 취약 층 지원이 외부 투자나 유료 서비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극복이 주요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 독일과 영국의 특징과 차이점

##### 1) 운영 주체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고용 지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확립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교육연구부(BMBWF)와 청소년가족부(BMFSFJ)가 직업자격네트워크(BQN),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 직업훈련 및 이주조정센터(KAUSA) 등을 추진하고, 주정부(바이에른)는 직업통합학급(VIC/BIK) 등을 통해 제도권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다. 민간단체인 쇼츠텍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리더십 함양에 집중하여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중앙정부인 내무부(Home Office)가 주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REP)이 핵심 정책 사례이지만, 이 역시 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브레이킹 배리어스, 얼티밋 카운슬링 등의 민간단체가 실질적인 통합 지원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활동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2) 프로그램 대상자

독일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연령대와 체류자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JMD는 12세부터 2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업통합학급(BIK)의 주된 대상은 16~21세이나, 예외적으로 25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KAUSA와 쇼츠텍은 명시된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과 청년, 초기 경력자를 폭넓게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대가 넓고 체류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조기 개입과 장기 지원이 용이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REP는 난민 중 영주권 또는 5년 체류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만을 지원하며, 청소년기 이전의 조기 개입보다는 성인 난민의 경제활동 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원 개시 시점이 법적 지위 확보 이후로 제한되는 사후적 지원 구조라는 점에서 독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반면 민간단체인 UC에서는 JMD보다 더욱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11세-29세 사이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망명 신청자, 난민, 비동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양한 체류자격을 포괄하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구성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인 직업통합학급(BIK)을 제외하고, 독일과 영국 모두 이주배경 청(소)년의 복합적 필요를 반영한 포괄적 맞춤형 지원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양국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단일 기능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어 교육,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 정서·심리적 지원, 사회통합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결합하

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경로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의 JMD와 KAUSA, 쇼츠텍은 언어 교육과 진로 탐색을 기반으로 멘토링·네트워킹·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브레이킹 배리어스는 직업훈련, 고용상담, 기업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실질적 취업 경로를 지원하며, UC는 언어 교육, 진로 지원, 정신건강 상담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프로그램 모두 단계별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고용·정서 지원을 연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갖는다. 즉, 청소년 및 청년의 이주 경험이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학업, 사회적 관계, 정체성 형성, 정착 과정 등과 얽혀 있다는 점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공유되고 있다(〈표 5-11〉참조).

#### 4)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독일의 지원 체계는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제도화 및 지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BQN은 한시적 시범사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구축된 지역 협력 네트워크와 방법론이 후속 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JMD는 500여 개소 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된 상설 체계를 갖추었다. 직업통합반(BIK)은 주정부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AUSA는 1999년 이후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민간 프로그램인 쇼츠텍 역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REP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 브레이킹 배리어스와 얼티밋 카운슬링 민간단체의 활동은 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재정보호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표 5-11〉 독일 및 영국의 이주배경 청년 교육·고용 프로그램 현황

구분		연방/중앙 정부			주정부	민간단체			
		독일			영국	독일	영국		
		BQN	JMD	KAU SA	REP	BIK	쇼츠텍	BB	UC
언어 및 학습 지원	언어 교육		○			○		○	○
	학업 지원 및 자격 취득	○				○		○	
취업준비 및 경력 설계	취업 준비 (이력서·면접 등)	○			○	○		○	○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 연계 (인턴십 포함)	○	○	○	○	○		○	○
	취업 상담 및 매칭	○	○	○	○			○	○
사회·심리 지원	정서 및 심리 지원		○						○
	사회통합 프로그램		○				○		
멘토링 및 네트워크	멘토링	○		○			○	○	○
	네트워크 형성						○		○
행정·정보 지원	법적·행정적 지원		○	○	○				○
	온라인 상담		○						

주: 영국의 프로그램은 이탤릭체로 표기함  
출처: 저자 작성

##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다룬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주배경 청년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구조화 및 제도화 수준의 차이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다층적·제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BQN, JMD, KAUSA, BIK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공공정책의 일부이거나 공적 지원을 받는 준공공 사업으로, 지역 네트워크와 교육·고용제도에 깊숙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는 중장기적 안정성과 높은 연계성을 확보하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영국은 정부보다 민간단체 주도로 지원이 이루어져 유연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재원에 좌우되고 제도권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른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교육·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적 협력에 기반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의 직업자격네트워크(BQN),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 직업훈련 및 이주 조정센터(KAUSA)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지자체·교육기관·기업·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구조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층적 협력체계는 단일 기관의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언어 교육-직업훈련-고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집행이 필수적이다. 지역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주배경 청년 관련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 독일의 직업자격네트워크(BQN)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 지원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부터 진학·취업 지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주효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은 언어능력 부족, 진로 정보 부족, 취업 기회 제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직

업훈련이나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언어 교육-진학 지원-직업훈련-고용 연계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직업통합학급(BIK)의 사례처럼, 언어 교육을 충분히 보장하고, 현장 실습 및 직업탐색 등이 공식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관련 지원은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직장 적응 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주배경 청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학교·직업훈련·고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기업·전문가·동문 등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의 기반이 된다. 이는 독일의 쇼츠텍과 영국의 브레이킹 배리어스의 프로그램 사례에서 보듯이, 상담과 멘토링, 그룹 프로그램, 시민참여 활동 등이 결합된 통합적 지원으로 구현될 수 있다.

넷째,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핵심 주체다. 지역 단위에서 중소기업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연결하는 매개구조를 강화하면, 교육과 고용 간 단절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의 KAUSA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인식 제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멘토링 연계 등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정책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JMD와 온라인 상담 플랫폼 jmd4you의 사례와 같이, 오프라인 전달체계에 디지털 상담·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시사한다.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시간 채팅

과 이메일 상담,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공간·심리적 장벽으로 대면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 제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결론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서 점차 증가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기존 연구와 통계는 주로 24세 이하의 초기 청년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중·후기(25세 이상)로 이행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통계적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인식하며, 제2장에서는 먼저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들을 둘러싼 청년정책, 다문화정책, 국적 및 병역 제도 등 복잡하고 파편화된 정책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현행 청년정책의 일자리 및 교육 분야 사업에서 체류자격에 따라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제도적 비대칭 문제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분야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재직자 지원 사업은 주로 장기 체류 비자(F-2, F-5, F-6) 소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반면, 창업 지원 사업은 비교적 포용적이었다. 교육 분야 역시 국적자 중심 원칙 속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재외국민에게만 일부 열려있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국적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유학생(D-2) 등 포함 범위가 다소 넓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배경 청년은 접근 가능한 사업과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사업이 나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선행연구 동향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여 지점을 명확히 했다.

제3장에서는 가용한 2차 자료(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19~24세 초기 청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 경로를 순수진학, 진학·근로, 순수근로, 비진학·비근로 네 유형으로 나누어 각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부모 학력, 거주 지역, 고교 유형 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규명했다. 다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소득 등)을 출생지(국내 출생 vs. 중도입국) 및 고용 상태별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집단 내 이질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비이주배경 청년과의 비교(청년삶실태조사 활용)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상대적 위치(예: 높은 특성화고 진학률, 낮은 평균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소득 양극화 등)와 출발점에서의 불리함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제3장의 양적 분석을 보완하고 통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4장에서는 25세 이상의 중·후기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생생한 노동시장 이행 경험을 탐색했다.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청년 간의 이질성에 주목하며, 이행 과정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예: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불안정한 체류자격),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구체적인 정책 수요(예: 맞춤형 멘토링, 전문 네트워킹,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주류 동화형, 주류 통합형, 주류 분절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주배경 중·후기 청년은 비이주배경 동년배들과 달리 여전히 일자리 관련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5장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이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이행지원 정책을 운영 주체, 대상자 선정 방식, 프로그램의 지속성 측면에서 비교 검토했다. 지원 내용 자체는 언어·진로·심리 지원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모델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특히, 독일은 연방-주-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비교적 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체류자격을 포괄하며 조기 개입이 용이했고,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나 직업통합학급(BIK)처럼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난민 등 특정 대상에 한정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안정성이 컸으며, 민간단체들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재정적·지역적 한계가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영국은 다소 사후적이고 파편화된 지원 구조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이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들이 청년으로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과 ‘이주배경’으로 인해 마주하는 특수한 장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위한 노력은 모든 청년의 보편적 과업으로, 이주배경 청년뿐만 아니라 비이주배경 청년 또한 미생, 즉, 불완전한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등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만, 이주배경 청년은 이 과정에서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 출발선의 불리함을 추가로 경험한다. 또한, 비이주배경 청년이 경험하지 않는 특정 노동시장(예: 주류 분절형)에 진입하거나 고착화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앞서 분석했듯, 이들이 보편적 경험과 특수한 장벽을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단순히 특정 범주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즉, ① 모든 청년에게 필요한 보편적 정책

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② 출발선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③ 이주배경으로 인한 특수한 위험(차별, 체류자격 불안정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개입을 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이 된다.

## 제2절 정책제언

이주배경 청년도 비이주배경 청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청년기 발달 과업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이 기존 청년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정책은 이들의 다양한 출생 배경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청년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국내 출생, 중도입국 등 집단 내 존재하는 뚜렷한 이질성은 각기 다른 사회적 장벽과 정책 수요를 파생시키므로,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안착을 위해, ① 보편적 청년정책의 포용성 강화와 ② 이주배경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 그리고 ③ 통합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보편적 청년정책의 포용성 강화: 동등한 출발선 보장

첫째, 진로 및 진학 지원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진로와 진학은 모든 청년의 보편적 생애 과업이나, 이주배경 청년, 특히 중도

입국 청년은 복잡한 입시 제도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출발선에서부터 구조적 격차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진로·진학 지원체계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먼저, 공교육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진로 및 진학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커리어넷(CareerNet)<sup>35)</sup>과 같은 기존의 온라인 자원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심화 상담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면, 제도권 교육 밖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 예컨대 검정고시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단순히 가족센터나 고용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들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기관 방문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접근 문턱을 낮추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병행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통합적인 지원망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둘째,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화 연수 과정을 제도화하여 현장의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 의무 연수는 3년마다 15시간의 다문화 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커리큘럼 대부분이 일반적인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작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필수적인 실무 교육은 1~2시간에 불과

35) 현재 커리어넷(CareerNet)에서는 진로상담의 심화 유형으로 다문화학생(다문화가정 자녀), 탈북학생(북한이탈주민), 특수학생(장애인),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마련함.

해<sup>36)</sup>, 교사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체류자격(비자) 제도나 대학별로 상이한 다문화 특별전형 등을 충분히 숙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원 연수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체류 비자 체계, 대학 입시 정보 등 실질적인 진로·진학 지도 내용을 필수 과정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일자리 소개를 넘어, 구직 준비 단계부터 직장 적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구직 준비 단계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5장 참조)와 같이 이력서 작성, 면접 지도, 복장 컨설팅 등 노동시장 진입의 첫걸음을 떼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멘토링 및 네트워킹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독일의 직업훈련 및 이주 조정센터(KAUSA)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은퇴한 시니어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한다면 청년에게는 밀착 지원을, 노년층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의 지지가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진로 상담(독일 BQN 사례)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주배경을 지닌 선배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고, 선배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문화 적응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장기근속과 경력개발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취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직장 내 차별 대응,

36) 2025.8.6. 전문가 자문회의

조직 문화 적응, 그리고 심리·정서적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창구를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핵심 플랫폼으로는 현재로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적합해 보인다. 고용, 복지,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센터의 기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체계로는 비자 문제, 언어 장벽 등 이주배경 청년의 특수한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능적·구조적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센터 내에 이주배경 청년 전담 창구를 신설하여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자 체계와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가족센터 및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이주배경 청년 통합 지원의 거점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이주배경 청년이 겪는 특수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 청년과 동일한 생애 과업 스트레스에 더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등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성장기 동안 부모의 장기 부재나 가족 해체를 경험하며 정서적 돌봄의 공백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당사자<sup>37)</sup>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 동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국에 오기까지 버텨야 했지만, 그 정서적 공백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다”고 말한다. 이러

37) 2025.12.19. 이주민 포럼 발제자료

한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이후 진로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상담 인력의 문화적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언어·문화적 장벽 없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라는 보편적 안전망을 보유한 비이주배경 청년과 달리, 이주배경 청년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개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이므로, 시혜가 아닌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출신 선배나 지역사회 전문가를 멘토로 발굴하여, 이들이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실질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영국의 얼티밋 카운슬링이 청년 이주민에게 또래 연결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돕는 사례(5장 참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연결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저소득 청년의 상위 과정 진학 준비를 위한 실질적 생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다시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려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다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상위학교 준비 과정에서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주배경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약한 모든 청년이 겪는 보편적 현상으로, 학업에 집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여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

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고등교육 진학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누구나 준비 기간 동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인재를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외교·국방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주배경 청년의 경험과 역량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일부 위원회에 (가칭) ‘이주배경 청년 쿼터제’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 당사자의 관점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만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부터 이들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하되, 이주민 밀집 지역에는 더 높은 비율의 쿼터를 적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 2. 이주배경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특수한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이주배경 청년, 특히 25세 이상의 중·후기 집단에서도 정책 수요가 여전히 일자리 분야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초기에 일자리에 집중하다가 중·후기로 갈수록 주거 및 자

산 형성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요의 지체 현상은 이주배경 청년이 겪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지연된 사회경제적 자립에서 기인한다. 저숙련 일자리 편중,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 학력과 일자리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생애 전반에 걸쳐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음 단계의 생애 과업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는 이들의 시급하고 지속적인 요구인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즉, 일자리 분야의 진입 장벽을 우선적으로 해소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 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주거 및 복지·문화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청년정책 수혜 대상의 체류자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청년정책은 국적 유무와 특정 체류자격에 따라 대상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음에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들을 배제하는 정책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이 일자리 분야를 시작으로 합법적 체류 청년들에게 정책의 문을 넓혀간 사례와도 맥을 같이하며,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합리적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들은 이미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 범주 내에 포함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에게 일자리 분야 등의 청년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시혜를 넘어, 이미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소중한 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과 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료를 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청년에게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모국어지만, 중도입국 청년에게는 한국 사회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이자 끊임없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부재하여 일부 민간재단(금융산업공익재단, 노동인권회관)이나 제한적인 대학(재학 중인 특정 유학생 대상)에서만 응시료를 지원하는 실정이다(노동인권회관, 2024.11.28; 공주대, 2025.6.13). 이러한 지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유학생 신분이 아닌 대다수의 이주배경 청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특히, 다수의 지자체가 비이주배경 청년의 토익(TOEIC) 등 어학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주배경 청년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료 지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도입국 청년을 위한 별도의 대학 특별전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혹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국내 출생 청년에게는 유용한 기회이지만, 중도입국 청년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상이한 교육과정 이수 경험 등으로 인해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칭) 중도입국 청년 특별전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이들에게 적합한 경쟁 방식을 제공하는 실질적 기회균등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 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

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에 진학한 이주배경 청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공적으로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일상 소통을 위한 초급 과정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 청년들은 논문 작성, 전공 토론, 전문 서적 독해 등 고등교육 환경에서 필수적인 학문 목적의 학술적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문적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학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중·고급 학술 한국어 과정 신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역별 거점 대학의 어학당이나 서울글로벌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단순 회화가 아닌 리포트 작성법, 학술 용어 이해 등 실질적인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기존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많은 대학의 국제어학원이나 글쓰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이를 국내 체류 이주배경 청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무 중심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작성·비즈니스 이메일·전문 용어 등 실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직무 언어 역량은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역량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sup>38)</sup> 내에 ‘(가칭) 이주배경 청년 및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여, 해당 교육이 제도권 직업훈련 체계에 포함

38) 현재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만이 운영되고 있음.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취업 상담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개인의 희망 직무와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실질적 직무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단기 과정 중심의 현행 직업훈련 체계를 학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이주배경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학위가 아닌 단순 이수증 발급 중심의 단기 과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구직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정규 교육과정인 직업통합학급(BIK)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행 과정을 2년제 학위(초대졸) 과정으로 전면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위 과정 개편은 두 가지 운영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선, 학생 모집 단계에서의 유관기관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학이 전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가족센터·외국인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폴리텍과 직접 연계하는 공식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소 비용 분담을 통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학비·기숙사비 전액 무료 체계는 중도 이탈자에 대한 제재 부재로 인해 교육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개편되는 학위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의 유료화를 통해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확보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 품질 제고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여덟째, 노동시장 내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이주배경 청년이 출신 배경이 아닌 직무 역량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 채용 문화

를 확립해야 한다. 이주배경 자녀를 둔 부모들은<sup>39)</sup> “‘외모’가 인종주의적 표식으로 작용하여 진로 선택이 제한되고, 승진이나 업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낮은 인종적 수용성이 이들의 경력 발전에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채용 단계에서는 국적·외모·이름 등에 따른 채용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채용 이후 승진이나 평가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제시 및 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이해 제고와 조직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련 제도나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이주배경 청년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구직자가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이주민 인력 고용 관련 제도·권리·지원 정책’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채용 단계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직장 내 다문화 감수성 및 공정 채용 인식 강화 교육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이주배경 청년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잠재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현재 이주배경 청년, 특히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동화 압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청소년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었으나, 성인이 되면 해당 정책 영역

39) 2025.4.25. 전문가 자문회의

에서 제외되는 경험은 이들에게 소속감의 단절과 정체성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 등 사회 곳곳에서 자신으로서 존중받기보다 ‘한국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동화 압력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차원의 병행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적 지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을 수혜자가 아닌 기여자로,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년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정책적 명칭이 부모에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들을 한정짓는 용어로 느껴진다고 지적한다<sup>40</sup>). 이제는 이들을 도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 청년이자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 번째, 이주배경 청년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화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직군(예: 국제 교류, 무역, 법정 통번역 등)의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 특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 등에서 이러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해외 취업 지원이다. 이들의 인적 가교 역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한국 회사 현지 법인이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40) 2025.12.19. 이주민 포럼 발제자료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청년의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 청년 등에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을 포함한 장기체류 이주배경 청년이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핵심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한 정보 번역을 넘어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분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3. 통합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개편

증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을 잇는 통합적 거버넌스와 전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현 전달체계의 한계는 명확하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후기 청소년 진로설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상담이 시급한 초·중등 학생들에 편중됨고 있어, 정책 대상인 만 19세 이상 청년은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실무자<sup>41)</sup>의 주장이다. 현재 가족센터 관계자<sup>42)</sup>는 이미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포화 상태이며,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과의 칸막이 문제와 맞물려, 정책 수요자인 청년은 전달체계 전반에서 제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일 예로, 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에

41) 25.9.18 이주민 포럼에서 나온 의견

42) 25.9.18 이주민 포럼에서 나온 의견

반복적으로 문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답변하지 못하고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경험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상담 창구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절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통합적 생애 전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독일 사례와 같이, 교육-훈련-고용을 잇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 [그림 6-1]과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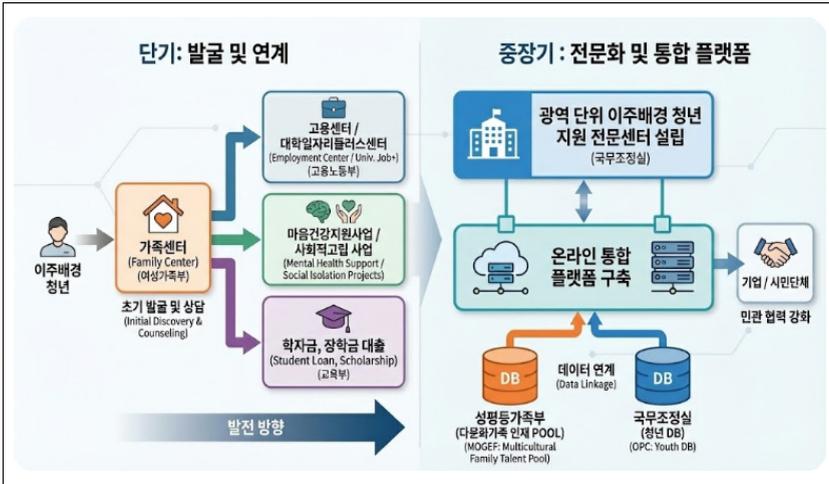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기관 설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가족센터가 허브가 되어 성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청년들을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이들의 생애 과업에 맞춰 고용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마음건강지원사업, 학자금·장학금 제도 등과 같은 전문 기관으로 필요와 욕구에 따라 연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연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청소년이주지원서비스(JMD)를 벤치마킹하여(5장), 진로·취업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광역 단위의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전문센터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역시 중요하다. 이는 기존에 분절된 정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째 단순 데이터베이스에 머물러 있는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 인재 Pool<sup>43)</sup>을 국무조정실의 청년 DB와 연계하고, 이를 실질적인 취업·진로 연계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결하는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3) <https://mcfamily.or.kr/posts/info/12959>

이러한 온·오프라인 센터의 복합적인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친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6-1]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 모색



출처: 저자 작성



고등교육법, 법률 제20466호 (2024).

고용24. (2025.10.01.). 청년도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systClId=SC00000189&systId=SI00000319>

고용24. (2025.7.9.).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61&systClId=SC00000050>

고용24. (n.d.a.).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에서 2025. 07. 26. 인출

고용24. (n.d.b.).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371>에서 2025. 07. 26. 인출

고용노동부. (2022).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

고용노동부. (2025).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n.d.a.). 민원신청-빠른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181120275030961>에서 2025. 07. 26. 인출

고용노동부. (n.d.b.). 서비스 안내-FAQ.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100](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100)에서 2025. 07. 26. 인출

고익수 (2024.3.29.) 지자체 다문화 가족 출신 공무원 채용 잇따라, KBC NEWS,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3290058>

공주대, (2025.6.13.). 공지사항 - 2025학년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안내, <https://oia.kongju.ac.kr/GxLN33/4309>

관계부처 합동. (2020.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https://>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00#:~:text=%E3%85%87%20\(%EB%B0%9C%EA%B5%B4\)%20%EB%B6%80%EC%B2%98%ED%95%A9%EB%8F%99%EC%9C%BC%EB%A1%9C%20'%EB%8F%84%EC%A0%84%20K-%EC%8A%A4%ED%83%80%ED%8A%B8%EC%97%85'%20%EB%93%B1%20%EC%B0%BD%EC%97%85%EA%B2%BD%EC%A7%84%EB%8C%80%ED%9A%8C%EB%A5%BC,%ED%98%81%EC%8B%A0%C2%B7%EA%B7%B8%EB%A6%B0%20%EB%93%B1%20%EB%B6%84%EC%95%BC%EB%B3%84%20%EC%9C%A0%EB%A7%9D%20%EC%B0%BD%EC%97%85%EC%95%84%EC%9D%B4%ED%85%9C%EC%9D%84%20%EC%A0%81%EA%B7%B9%20%EC%B0%BE%EC%95%84%EB%82%B4%EA%B2%A0%EC%8A%B5%EB%8B%88%EB%8B%A4](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00#:~:text=%E3%85%87%20(%EB%B0%9C%EA%B5%B4)%20%EB%B6%80%EC%B2%98%ED%95%A9%EB%8F%99%EC%9C%BC%EB%A1%9C%20'%EB%8F%84%EC%A0%84%20K-%EC%8A%A4%ED%83%80%ED%8A%B8%EC%97%85'%20%EB%93%B1%20%EC%B0%BD%EC%97%85%EA%B2%BD%EC%A7%84%EB%8C%80%ED%9A%8C%EB%A5%BC,%ED%98%81%EC%8B%A0%C2%B7%EA%B7%B8%EB%A6%B0%20%EB%93%B1%20%EB%B6%84%EC%95%BC%EB%B3%84%20%EC%9C%A0%EB%A7%9D%20%EC%B0%BD%EC%97%85%EC%95%84%EC%9D%B4%ED%85%9C%EC%9D%84%20%EC%A0%81%EA%B7%B9%20%EC%B0%BE%EC%95%84%EB%82%B4%EA%B2%A0%EC%8A%B5%EB%8B%88%EB%8B%A4)

관계부처 합동. (2023.9.)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15&s=moe&fileSeq=7e6b7df22ee6b612f7e746ad96c9157b>

관계부처 합동. (2023.03.2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관계부처 합동. <https://www.youthcenter.go.kr/youthCommittee/ythCmtPlan01/ythCmtPlan01Main>

관계부처 합동. (2024.03.2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https://www.youthcenter.go.kr/youthCommittee/ythCmtPlan02/ythCmtPlan02Main/ythCmtPlan02View/10002?user=true>

관계부처 합동. (2025.4.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https://www.youthcenter.go.kr/youthCommittee/ythCmtPlan02/ythCmtPlan02Main/ythCmtPlan02View/10003?user=true>

교육기본법, 법률 제20663호 (2025).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2024). 2024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 교육부, (2024.8.29.),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25).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미공개 내부자료.
- 교육부. (2025. 08. 28.). 2025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99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2025).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학교용).
-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5호 (2023).
- 국적법, 법률 제19039호 (2022).
- 김영아, 강동우, 임유진. (2024).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진영, 유백산.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매개과정과 상호작용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5(2), 23-46.
- 김진희, 김가영, 이지은, 박숙영. (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숙 (202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이슈브리프 2021-10, [https://www.mrtc.re.kr/data/04.php?admin\\_mode=read&no=727&page=&make=&search=](https://www.mrtc.re.kr/data/04.php?admin_mode=read&no=727&page=&make=&search=)
- 난민법, 법률 제14408호 (2016).
- 노동인권회관, (2024.11.28.) <2024/25>이주 배경 청년/노동자 TOPIK 응시료 지원 사업 포스터(ENGLISH), <https://www.inkwon.or.kr/index.php/project/?uid=165&mod=document&pageid=1>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24). 2024학년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학사 취득과정-중소기업 계약학과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한상공회의소. (2025).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0907](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0907)
- 류유선, (2023), 이주배경청년의 생애기획 경로에 대한 기초연구, 대전연구원.
- 박미선, 엄진영, 심재현, (2024), 농산업인력확보를 위한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배병일, (2022.11.1.) 진주시, 첫 다문화가족 공무원 임용,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35>
- 배옥현. (2024). 경북지역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법무부, (2008.4.1.),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연도별, 국적별 현황, <https://www.moj.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zMjcZMDclMkZhcnc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l2YmJzQ2xTZXE1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ld01pbmU1M0RmYWxzZSUyNnBhZ2U1M0Q2JTl2YmJzT3Blbl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ElQjU1QUQlRUIlQUYlQkMIRUMlOUQlOTgrJUVVCjU1wJUIwJUVVDJlBjU1wJUVVDJlFJTkwJTI2>
- 법무부, 체류외국인현황,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법무부, (2025.3.20.).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kzMTk3JTJGYXJ0Y2xWaWV3LmRvJTNG>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 병역법, 법률 제19950호 (202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4호 (2024).
- 송영호, 김재훈. (2022). 이주배경청년의 불안정성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 디아스포라연구, 16(1), 105-144.
- 송영호, 최영미. (2021).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2(2), 3-38.
-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0).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0-2012).
- 여성가족부. (201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28439>.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218>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4968&mid=plc503](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4968&mid=plc503)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4820&mid=plc503](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4820&mid=plc503)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n.d.). 맞춤형수혜서비스 수혜정보.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ct/UOPKCOCTS11?siamIzbzId=201808641310304A0002&acntYr=2025&ixYn=N&url=UOPKCOCTS02&menuId=290\(검색일: 2025. 9.30.\)](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ct/UOPKCOCTS11?siamIzbzId=201808641310304A0002&acntYr=2025&ixYn=N&url=UOPKCOCTS02&menuId=290(검색일: 2025. 9.30.)).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5). 지원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policy.do>
- 이해응, 김미정. (2024). 제주지역 이주배경청년의 생활경험과 정책지원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장현진, 이수현, 한은지, 김민선, 연규진. (2022).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1-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15호 (199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20734호 (2025).

정수정, 최순중. (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제주더큰내일센터, (2025). <https://www.jdnc.or.kr/>

중소벤처기업부, (2024.1.12.). 알림소식-사업공고-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7343&parentSeq=1047343>

중소벤처기업부. (2024a).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중소벤처기업부. (2024b).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sbcplan.or.kr/faq.do?mCode=F050000000&catCd=2&ddctGdsCd=PMF&searchType=all&page=2>

중소벤처기업부. (2024c).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중소벤처기업부. (2025. 01. 2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중소기업부. <https://www.mss.go.kr/synap/skin/doc.html?fn=309c68908b0ae266e7f6e26f49ea1feb&rs=/synapFile/202508>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21066호 (2025).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841호 (2023).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013호 (202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0677호 (2025).

통계청. (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SILCLF) 2020.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EAPS) 2021.
- 통계청. (2022.4.14.).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75&pageIndex=9&repCodeType=C&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22-04-18&srchWord=&period=>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09. 09.).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 공고. <https://www.hrdkorea.or.kr/3/1/1?k=54066>
- 한국산업인력공단. (n.d.). 청년정책 시행계획. [https://opcl.s3.amazonaws.com/data/policy/files/20250421\\_2025%EB%85%84%EB%8F%84%20%EC%B2%AD%EB%85%84%20%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20%EC%9D%91%EC%8B%9C%EB%A3%8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5%88%EB%82%B4.pdf](https://opcl.s3.amazonaws.com/data/policy/files/20250421_2025%EB%85%84%EB%8F%84%20%EC%B2%AD%EB%85%84%20%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20%EC%9D%91%EC%8B%9C%EB%A3%8C%20%EC%A7%80%EC%9B%90%EC%82%AC%EC%97%85%20%EC%95%88%EB%82%B4.pdf)에서 2025. 07. 26. 인출
- 한국장학재단 (2025.2.25.) 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https://www.kosaf.go.kr/ko/info.do?pg=press01\\_02&mode=view&seqNo=18412](https://www.kosaf.go.kr/ko/info.do?pg=press01_02&mode=view&seqNo=18412)
- 한국장학재단. (2025).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한국장학재단. (n.d.a).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6_01)
- 한국장학재단. (n.d.b).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info](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info)
- 한국장학재단. (n.d.c).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 시큐리티아카데미, [https://www.kisia.or.kr/talent\\_support/education\\_business/security\\_academy](https://www.kisia.or.kr/talent_support/education_business/security_academy)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 청소년 12차년도.

한국폴리텍대학 (2025)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 <https://www.kopo.ac.kr/content.do?menu=15141>

행정안전부, (2012.8.9.),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p4xcJm+O9QW75JwoX8DArame.node3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35593](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p4xcJm+O9QW75JwoX8DArame.node30?bbsId=BBSMSTR_00000000014&nttId=35593)

행정안전부, (2024.10.24.),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 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최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3228#non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3228#none)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bojo.go.kr/bojo.do> (검색일: 2025.9.2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0).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20.

Barking and Dagenham Giving. (2025.03.31). BD Giving Invests in Vital Counselling Service. Barking and Dagenham Giving.

Barri, A., Jeffreson, A., Atkins, G., Roberts, J., Hamed, M., Brown, O., Lloyd, R., Gloster, R., Jensen, S., & Meghjee, W. (2025.09.26.). Evaluation of the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REP). Home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valuation-of-the-refugee-employability-programme-rep/evaluation-of-the-refugee-employability-programme-rep>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nterricht und Kultus. (2024). Berufsvorbereitung an allgemeinen Berufsschulen im Schuljahr 2024/2025 und Rahmenbedingungen der kooperativen Klassen der Berufsvorbereitung

Bergseng, B., E. Degler, S. Luthi (2019), Unlocking the Potential of Mig

- rants in Germany,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2ccc2a3-en>.
- Botzian, P. (2024.11.27). Jugendmigrationsdienste. Landesdialog „Zuwanderung im Spannungsfeld von Integrationsarbeit und Flüchtlingsaufnahme“. Caritasverband für das Erzbistum Berlin e.V.
- Breaking Barriers. (2022). Effective employment support for refugees: Breaking Barriers approach. Breaking Barriers.
- Breaking Barriers. (2023a). Reaching meaningful employment: Understanding the impact of Breaking Barriers' one-to-one model of employment support for refugees. Breaking Barriers.
- Breaking Barriers. (2023b). Fuse action plan: Learnings,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to unlock the potential of refugees in the UK. Breaking Barriers.
- Breaking Barriers. (2024a). Annual report and accounts: FY2023-2024. Breaking Barriers.
- Breaking Barriers. (2024b). Impact report: FY2023-2024. Breaking Barriers.
- Bundes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 Jugendsozialarbeit e. V. (2021). Jahresbericht 2020. Retrieved from <https://www.bagejsa.de>
-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2021)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KAUSA)- Entwicklungsprojekt: Projektbeschreibung.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n.d.). § 7 Begriffsbestimmungen, Sozialgesetzbuch (SGB)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viii/7.html>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02.07.12.). Bekanntmachung: Förderung von Modellen lokaler und regionaler Koop

erationsnetzwerk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BQN). [https://www.bmftr.bund.de/SharedDocs/Bekanntmachungen/DE/2002/07/16\\_bekanntmachung.html?templateQueryString=BQN](https://www.bmftr.bund.de/SharedDocs/Bekanntmachungen/DE/2002/07/16_bekanntmachung.html?templateQueryString=BQN)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n.d.). KAUSA-Projekte. In *Bildungskett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ausbildung/massnahmen-zur-integration/kausa-projekte/kausa-projekte\\_node.html](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ausbildung/massnahmen-zur-integration/kausa-projekte/kausa-projekte_node.html)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2.04.01.). Grundsätze.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fileadmin/media/ueberJMD/JMD\\_Grundsaeetze\\_01\\_04\\_22.pdf](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fileadmin/media/ueberJMD/JMD_Grundsaeetze_01_04_22.pd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4.06.04.). *Wie JMD wirkt: Die Jugendmigrationsdienste im Jahresrückblick 2024*. <https://www.jugend-staerken.de/just/berichte/wie-jmd-wirkt-die-jugendmigrationsdienste-im-jahresrueckblick-2024-265478>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4.07.10.). *Integration und Chancen für Jugendliche: Jugendmigrationsdienste*. Retrieved June 16, 2025 from, [https://www.bmbfsfj.bund.de/bmbfsfj/themen/kinder-und-jugend/integration-und-chancen-fuer-junge-menschen/jugendmigrationsdienste?utm\\_source=chatgpt.com](https://www.bmbfsfj.bund.de/bmbfsfj/themen/kinder-und-jugend/integration-und-chancen-fuer-junge-menschen/jugendmigrationsdienste?utm_source=chatgpt.co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5.03.18.).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Stärken, was die Zukunft trägt*.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staerken-was-die-zukunft-traegt-257586>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n.d.) Initiative JUGEND STÄRKEN. <https://www.jugend-staerke.n.de/just/programme/initiative-jugend-staerken-139728>
- Cedefop, & ReferNet. (2025). Integrating migrants and refugees in VET and work: Germany. In Cedefop, & ReferNet. (2025). Timeline of VET policies in Europe (2024 update) [Online tool]. <https://www.cedefop.europa.eu/en/tools/timeline-vet-policieseurope/search/28123>
- Companies House. (n.d.). Ultimate Counselling C.I.C. Companies House. Retrieved October 8, 2025, from <https://find-and-update.company-information.service.gov.uk/company/09176137>
- DANE. (2021). Gran Encuesta Integrada de Hogares 2021.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5.05.23). Thousands of young people set to benefit from new support into work and training. <https://www.gov.uk/government/news/thousands-of-young-people-set-to-benefit-from-new-support-into-work-and-training>
- Erler, W., & Schindel, A. (2007). Kompetenzfeststellung bei Migrantinnen und Migranten. Konzepte und Handlungsstrategien zur Arbeitsmarktintegration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IQ Netzwerk Integration durch Qualifizierung. [http://www.anakonde.de/download/04\\_IQKompetenzfeststellung\\_web.pdf](http://www.anakonde.de/download/04_IQKompetenzfeststellung_web.pdf)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25). Schotstek: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positions [EESC Info, January 2025]. European Union. <https://www.eesc.europa.eu/en/news-media/eesc-info/eesc-info-january-2025/articles/126044>
- European Union. (2020).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2020.
- Holroyde, A. (2025.02.10.). Building new futures: Emerging impacts and success factors for refugee employment support. Maximus UK.

<https://www.maximusuk.co.uk/policy/building-new-futures-emerging-impacts-and-success-factors-for-refugee-employment-support>

Home Office. (2023.09.20).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policy statement. Home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refugee-employability-programme-policy-statement>

Home Office. (2024.12.04).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GOV.UK. <https://www.gov.uk/guidance/refugee-employability-programme>

INDEC. (2021).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EPH) 2021.

INEC. (2021). Encuesta Continua de Empleo (ECE) 2021.

INEGI. (2020).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 (ENOE) 2020.

INEI. (2021). Encuesta Nacional de Hogares (ENAHO) 2021.

Islington Council. (n.d.). Support into work for vulnerable young adults. Retrieved October 12, 2025, from <https://www.islington.gov.uk/jobs-and-careers/support-finding-work/youth-employment/work-vulnerable-young-adults>

Jugendmigrationsdienste. <https://www.jugendmigrationsdienste.de/en/>

Mental Health Foundation, (2024). Our response to the planned closure of the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Press Releas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hile. (2020).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 2020.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1). Labour Force Survey (LFS) 2021 (Canada, Israel and New Zealand).

Netzwerk-IQ. (2020.03.31.).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 (KAUSA). Retrieved August 12, 2025, from <https://www.netzwerk-iq.de>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 Young People with Migrant Parents, Making Integration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e773bfe-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70d202c4-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State of immigrant integration: Germany. OECD Publishing.
- Reinke, H., & Goller, M. (2022). Supporting young immigrants in their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staff perspective on challenges of vocational integration classes.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9(1), 92-119.
- Schaub, G. (2007). Verbesserung der Qualifizierungschancen von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durch lokale Netzwerke. Auswertung von zehn Fallstudien. Deutsches Jugendinstitut. [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FSP1\\_Fallstudie\\_0705.pdf](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FSP1_Fallstudie_0705.pdf)
- Schotstek. <https://www.schotstek.com/en/home>
- Senior Expert Service. (n.d.). Profile. <https://ses-bonn.de/en/about-us/objectives/>
- Staats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Bildungsforschung. (2021). Lehrplan für die Berufsvorbereitung: Berufsvorbereitungsjahr (BVJ), Berufsintegrationsklasse (BIK), Berufsintegrationsvorklasse (BIK/V), Deutschklassen an Berufsschulen (DK-BS).
-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20). Census 2020.

Süssmuth, R. (2009). *The Future of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in Germany*.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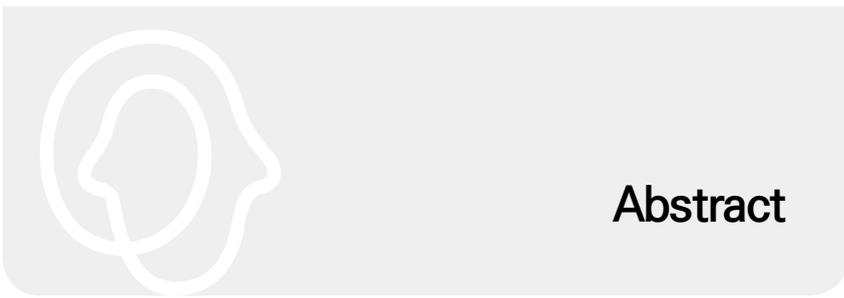
U.S. Census Bureau. (2020).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20*.

Ultimate Counselling. (n.d.a). About. <https://ucts.org.uk/about/>

Ultimate Counselling. (n.d.b). Youth Migrant Support Service. <https://ucts.org.uk/youth-migrant-support-service/>

Ultimate Counselling. (n.d.c). Employment Support Service. <https://ucts.org.uk/employment-support/>

Ultimate Counselling. [www.ucts.org.uk](http://www.ucts.org.uk)



## Abstract

### **The School-to-Work Transition of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in South Korea**

Project Head: YoonKyung Kwak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ged 19 to 34 go through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to address gaps in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promote a more inclusive and integrative society. To achieve this, this study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a literature review, secondary data analysis, in-depth interviews, and an analysis of overseas policies.

Chapter 2 explores the conceptual definitions and challenges in estimating the population of youth with a migration background. It proceeds to analyze the fragmented policy environment, including youth and multicultural policies, as well as nationality and military service systems. A key finding is the institutional asymmetry in employment and education sectors, where eligibility depends heavily on visa status. For exampl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re mostly limited to long-term residents (F-2, F-5, F-6), while startup initiatives are comparatively inclusive. In education, a citizen-centric approach prevails, excluding non-citizens from most scholarships and incentives, though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fer broader access to groups like international students (D-2).

---

Co-Researchers: Wonhee, Na · Yunjae, Nam · Juri, Kim · Soyeon, Byeon

This creates a structural divide for non-citizen youth, separating accessible opportunities from those that remain out of reach. The chapter concludes by reviewing prior research to highlight this study's unique contributions.

Chapter 3 investigates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aged 19–24 using key secondary data. The study identifies four distinct career trajectories - education-only, work-study, work-only, and NEET - and finds that family background and region are key determinants of these paths. A significant disparity in policy access was noted: while school-based information is well-known, access to self-initiated support systems remains limited. Although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exhibit higher vocational high school attendance than their non-migrant peers, they experience greater labor market vulnerability, characterized by income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Notably, a significant gap exists between their high demand for vocational training and the limited opportunities actually available to them.

Chapter 4 examines how young adults aged 25 to 34 experience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identifies factors that facilitate or impede this process. To capture diverse experiences, including those without Korean citizenship,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six domestic-born and eight mid-entry youth). Their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mainstream-assimilative, mainstream-integrative, and mainstream-segmented. The study found that various individual, familial, community, and institutional factors interact to influence their transition. Regarding policy, their utilization of current youth programs is minimal: the most commonly used are the National Scholarship and asset-building programs. Consequently, their demand for youth policy is heavily concentrated on labor market support.

Chapter 5 compares the distinct policy approaches of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labor market transition support. Germany is characterized by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are responsibilities, covering a comprehensive age range. In contrast, the UK relies on central government-led initiatives, such as the Refugee Employability Programme (REP) spearheaded by the Home Office. Howev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play a pivotal role in providing sustained and practical integration support to complement these public programs.

Three key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the inclusivity of universal youth policies must be enhanced to ensure an equal starting line. This includes expanding career counseling and establishing comprehensive one-stop employment support systems. Second, tailored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realize substantive equal opportunity. This involves prioritizing employment support, reflecting the group's specific high demand, relaxing visa requirements for policy eligibility, creating a distinct university admission track for mid-entry youth, and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measures in hiring. Third, an integrated governance and delivery system is essential for sustainability. Following the German model, this requires organic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a robust support framework.

**Key words:** young adult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school-to-work transition, mid-entry youth, youth policy, social integration